



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무소속 안철수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7대 비전
25개 정책약속
171개 실천과제



안철수의 약속

이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4 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학림프린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8-4 두산위브센티움 B106~7호 · 02-3454-0583~4

진심캠프

안철수의 약속

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무소속 안철수 공약집



과정으로서의 정책

‘안철수의 약속’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안철수의 약속》은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제안한 정책을 진심캠프가 살펴보고 안철수 후보가 채택해 만들었습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2013년 2월 취임할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정책을 만들어가는 수평적 네트워크입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국민이 포럼을 만들어 이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포럼들은 우리 사회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융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안철수의 약속》에 실려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혜가 안철수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25개의 분야별 전문가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후보가 참석한 공개 전문가 포럼만도 일곱 차례, 전국 각지를 돌며 열었습니다. 비공개 포럼은 수백 차례가 열렸습니다. 포럼마다 밤샘을 마다하지 않는 열띤 정책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제안이 안철수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참여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분야별로 200여 개 포럼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정책네트워크 내일에 등록했습니다. 이 국민포럼들은 활발한 정책토론을 거쳐 이미 수많은 정책 제안을 보내주셨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 가운데 일부 포럼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건설노동자, 자영업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는 11월 1일부터 매일 저녁 ‘안방토론’을 열고 국민과 마주했습니다. 정책전문가들이 국민과 직접 만나 토론을 벌였습니다. 반대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도 초청해 토론했습니다. 토론내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정책 내용을 알리고 국민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담았습니다.

정책은 과정입니다

《안철수의 약속》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171개의 정책 약속을 담았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분명히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부터 출발해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을 지켜도 완벽한 정책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더 화려한 정책, 더 선심을 베푸는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어진 여건 아래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골라 담았습니다.

토론하며 진화하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토론하며 진화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이 나온다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더 많은 제안을 받고 더 많은 반론을 소화하며 정책을 진화시키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 정책 토론의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안철수의 약속》을 국민 앞에 드립니다.

2012. 11. 10.

정책네트워크 내일

비전

안철수의 약속 

《안철수의 약속》이 지향하는 세상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변화’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와 과거를 가르는 시대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낡은 체제, 낡은 시스템과 결별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낡은 과거로 다시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을 깨뜨리고,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계층 상승의 길이 막히고, 재기의 기회마저 막힌 사회가 역동적일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지역·계층간 격차가 커지기만 하는 사회에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때입니다.

토양으로서의 정치와 평화

안철수 후보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에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와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가 놓여 있습니다.

정치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정치혁신은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정치혁신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 사회의 문제를 풀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는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제 조건입니다. 평화가 바탕이 되지 않는 경제는 모래 위의 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치혁신이 이루어지고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기반 위에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양분을 공급하는 경제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가 있어야 대한민국에 활기가 유지됩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기득권과 격차를 해소하고, 승자독식의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모두가 참여하고 다 함께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발전모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격차’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포용을 통해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지식과 자원이 결합하여 끊임없이 융합을 창출하는 ‘생동감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율적, 분권적으로 주체와 부문을 새롭게 연결하고 융합하는 접근방식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자원을 절약하고 성장 기반을 튼튼히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은 과도한 자원 및 에너지 사용, 그리고 안전과 환경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면서 지속가능성을 해쳤습니다. 여기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정책은 정부 주도, 양적 목표, 특정산업 발전이라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개별 경제주체 주도, 질적 목표, 통합적·융합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1)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2) 기업을 건강하게 하며, 3) 지역을 풍요롭게 하고, 4) 성장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반 아래서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양분이 사회 전체로 골고루 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질 향상’ 열매를 맺다

정치를 바꾸고, 평화를 이루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은 결국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으로 그 열매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의 시작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온다고 믿던 시대는 이제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꿈을 잃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살리겠습니다. 또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일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등록금, 취직, 내 집 마련,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답을 낼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에게 꿈을 돌려주겠습니다. 또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리 약한 이라도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와 질병 걱정이 사라져야 합니다. 노인이 겪는 절망은 청년이 겪을 절망입니다. 노인 가난 제로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별, 장애나 학벌이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다문화시대, 우리나라에서 살고 일하는 모든 이들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짐을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환경, 에너지, 개발 문제가 모두 다음 세대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회와 환경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공동체와 협력을 원리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생태계와 사용자 중심의 통신과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기반 아래서 공정한 언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뿌리로서의 평화, 줄기로서의 성장, 열매로서의 삶의 질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그루 나무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정치가 바뀝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 민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선의와 진심을 모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길, 내일로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비전 I.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1.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시스템	16
2. 분권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36
3.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	50

비전 II.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4.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경제	68
5. 경제력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재벌개혁	94
6. 혁신을 추구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개혁	106
7. 사회통합적 일자리경제	118
8.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근로자	134
9. 새 희망의 바람이 골목 구석까지 닿는 자영업자 보호 정책	162
10. 호혜와 협동의 사회적경제	170
11.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	182
12.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과학기술	192

비전 III.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13. 격차를 해소하는 창의·희망 교육	212
14. 시대를 바꾸는 창조적 문화예술	230

비전 IV.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15. 믿을 수 있는 안심육아	256
16. 일·쉼·돌봄을 나누는 성평등 사회	268

비전 V.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17.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286
18.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308
19. 꿈이 자라는 아동·청소년 세상	324

비전 VI.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20.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338
21.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업·농어촌	360
22. 공정과 상생의 디지털 미디어 세상	382
23.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 문화	398

비전 VII.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24.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408
25. 세계로 뻗어가는 평화외교	422

약속

안철수의 약속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1.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시스템

2.
분권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3.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

①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1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시스템

5대 목표

- 1 불통과 독점의 권위주의 정치에서 소통과 참여의 민주정치
- 2 중산층과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생활정치
- 3 반칙, 특권, 부정부패, 권력의 사유화와 결별하는 상식정치
- 4 갈등과 분열을 넘어 타협과 상생을 추구하는 통합정치
- 5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네트워크 정치

6개 정책약속

- 1 대통령 혁신 : 3권 분립에 입각한 국정운영
- 2 국회 혁신 : 특권 없이 일하며 소통하는 국회
- 3 정당 혁신 : 신뢰 받는 정당상 확립
- 4 정부 혁신 : 국민을 섬기는 정부
- 5 공공기관 혁신 : 국민복지 증진과 국가경제 기여
- 6 지방자치와 사회통합 : 지방자치와 시민정치의 활성화



대통령 혁신 : 3권 분립에 입각한 국정운영



새정치공동선언에 의해 결정



국회 혁신: 특권 없이 일하며 소통하는 국회



새정치공동선언에 의해 결정



정당 혁신 : 신뢰받는 정당상 확립

01

새정치공동선언에 의해 결정



정부 혁신: 국민을 섬기는 정부

01

현실진단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모바일 환경은 다른 기술과 융합해 더욱 지능화돼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대처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정책조정 기능도 부족하며 조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현 청와대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간이라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음. 권력자가 혼자 들어앉아 고민하는 공간이고 불통과 고립의 이미지를 풍김
- 우리 사회가 정보화, 세계화됨에 따라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고 공무원의 전문성 개발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떠오름
- 미래에 관한 연구와 기획을 전담해 국가미래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정부 부처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치안 불안감이 증대되고, 경찰의 인권보호와 정치적 중립이 훼손
- 소방장비 노후화로 인한 소방관의 사고 증가

실천과제

-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능형 정부 만들기
 - 부처 간 효과적이고 적절한 정보 공유와 '발로 뛰는 행정'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실시함
 - 부처 간 시스템화된 공조와 정책 조율로 효과적인 국가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
 - 공공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민 밀착형' 정부를 실현함
- 청와대를 국민에게 좀 더 가깝게 이전하는 것 추진
 - 이전 위치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결정함
 - 이전 계획 수립과 실시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적극 수용함
 - 대통령 집무실·관저의 명칭, 디자인, 상징물, 주변 조성 계획 등을 공모함
- 국민을 섬기는 유능한 공직사회 만들기
 - 일 중심, 생활밀착형 공직사회로 전환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구축함
 - 현행 중앙공무원교육원을 확대·개편해 중앙정부 차원의 (가칭) '국립행정학교'를 설립함
- 국가의 미래전략을 전담하는 부처 설립
 - 정부 차원에서 현재 국내외 경향을 면밀히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변화에 융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기획·실행하기 위한 부처를 신설함
 - 국가전략을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시켜 수립·집행함
- 치안 일선 경찰인력 재배치와 인권보장 및 정치중립 제도화
 - 경찰인력 확대는 국민의 치안강화 요구와 공무원 인력조정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 경찰의 인권 및 정치중립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
- 소방 관련 예산 증액과 소방분야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확대
 -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체 및 개선
 - 소방장비 교체 및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



안철수의
약속

기대효과



- 국가의 위기관리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
-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세심히 살피는 대통령이 됨
- 공직사회를 국민의 행정 수요에 맞춰 일 중심, 생활밀착형 공직사회 지형으로 변모시킴
- 미래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예측 파악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 전략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것이 가능해짐
- 치안안정과 민주경찰의 역할 확보
- 경찰·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국민 안전 증대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공공기관 혁신 : 국민복리 증진과 국가경제 기여

현실진단

- 공공기관은 주인의식이 부족하여 경영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
- 독점체제에서 적정이윤이 보장되므로 생존을 위한 능동적인 경영혁신 노력이 취약하고 기관이기주의가 만연
- 공기업에는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가 대부분이며, 공기업의 부실 경영이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음.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선진화'라는 명목의 민영화 추진은 부작용만 초래함
-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과도한 인건비·복리후생비 증액, 접대 받는 '甲' 문화 등 후진형 방만경영과 비리를 조장
- 인천국제공항공사, KTX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민적 반발에 봉착
- 성장에 경도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기능을 경시
- 공기업 주도로 해외 자원개발, 4대강 사업 등 국가 전략 목표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실천과제

- 국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를 강화
 - 전기·가스·난방 등 에너지 분야에서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 공공기관의 기능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토록 하고, 그 성과를 경영 평가시 중요 지표로 반영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 비정규직 전환, 청년실업 대책,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 장애인·여성 의무 채용 등 정부 정책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강화
- 공공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민영화 하지 않음
 -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역사적 소명이 끝난 공공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을 추진
 - 민영화 및 통폐합 관련하여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 당초 민간기업이었으나 공적자금 투입으로 공기업화된 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를 추진
 - 민간과 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민영화를 우선 고려하되 민영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별로 검토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KTX의 민영화는 민영화의 실익이 불분명하고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는 일단 보류하고, 향후 항공산업의 기업생태계와 민영화에 따르는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
-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지배·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공공기관을 총괄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해 일반 부처보다 상위 기관(총리실 등)에 기능을 확대·이양
 - 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적격자의 지원 및 추천을 원천적으로 방지
 - 전리품으로 인식되어 왔던 인사권을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아닌 임명권자에게 분산
 - 임원추천위원회를 사전에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 선임·구성하여 주무부처·공공기관 경영진 등 임명권자의 사전 개입을 차단
 - 임기중 해임된 임원은 자회사 등 타공공기관에 일정 기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임원자격 기준에 반영



- 공공기관 평가는 중장기(3년) 평가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 취약 분야에 한하여 현행과 같이 매년 모니터링하여 단기성과 위주의 과도한 평가 부담을 경감

- ‘甲’ 문화 혁파, 도덕적 해이 등 부조리한 관행을 혁신
 - 고객만족도 조사 시 표본 조작 · 누락 등 완성도를 저해하는 경우, 성과급 전액 환수, 기관장 및 관련 임원의 해임 등 징벌적 제재 도입
 - 옴부즈만, 고객위원회(가칭) 등 민간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권위적 관행 혁파
 - 조달 · 계약업무 등 비리 취약분야에서의 뇌물수수 · 향응 등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
 - 공공기관의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과도한 인건비 인상과 복리후생의 확대 등 방만 경영을 방지
 - 예산편성지침 위반 시, 시정을 요구하고 위반으로 얻는 이익 이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 강구

- 민간부문과 시장에서 경쟁하거나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기능에 대해 시장화 테스트, 비교경쟁을 도입 · 확대하여 공공기관을 경쟁에 노출
 - 경영자율권제도를 개편하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자율권 부여에 따른 성과와 보상을 강화
 - 공공기관 내부의 불필요한 기능과 조직을 점검하고 전환배치 · 감축 등을 통해 조정

- 경영효율화와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과 요금제도 개편으로 부채문제를 완화
 -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재정부에 요금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요금에 대한 결정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
 -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대규모 투자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 공공기관 부채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내실화

- 공공기관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진흥에 기여하도록 하여 혁신경제 기반 확대
 - R&D, 산업전문인력 양성, 기술이전, 기술표준 정립 등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보상 확대
 - 공공기관이 기업의 초기 시장 역할을 담당하여 초기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
 -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공기관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하도록 조치
 - 공공기관별로 혁신경제 기반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 노력을 경영평가에 중요지표로 평가

기대효과



-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솔선하도록 사회적 책임 강화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 경영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건전화
-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혁신경제의 기반으로 역할 강화



지방자치와 사회통합: 지방자치와 시민정치의 활성화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현실진단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권한들의 이양은 지지부진하거나 미흡한 상황
-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여의 결과도 출된 결정이 구속력이 없이 대부분 권고적 성격을 가져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정부 부처마다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고 들쭉날쭉해 일관성이 결여됨
- 노사 간, 세대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갈등 해결의 문제가 대두

실천과제

- 국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은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
 - 국민의 생활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권한 이양 추진
 - 교육자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권한은 중앙행정부처에 있어서 실질적 운영이 '이원화'돼 있는 조직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시민위원회 제도화로 국민의 국정감사와 정책 참여 강화
 - 권력기구를 감시·통제하고 부처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와 업무를 실제 국민의 삶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각 부처 시민위원회를 확대·제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시민위원회에 참여해 국정과 정책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끔 혁신해나감
 - 정부 전 부처에 대한 시민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일관성 있게 제도화하고, 그 결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시민위원회의 구성 또한 공모나 외부 위촉 등의 방식을 통해 중립적·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함
 - 시민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조력자·지원자 역할뿐 아니라 감시자와 비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나감
 - 현재 총리실 주관 정부 부처의 업무평가, 성과 관리 등에 시민사회와의 소통, 국민 의견 반영 정도, 국민의 실제 삶의 문제 해결 여부 등을 질적·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중요 평가요소로 포함해 부처들이 국민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애로를 해결하는 '일하는 정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킴
- 사회연대에 기초한 전체 사회 구성원의 공존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제별 사회적 합의 추구
 - 좋은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사정 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기대효과



- 형식적인 권한 이양의 수준을 극복하고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중앙행정부처의 권한을 우선 선택해 집중적으로 이양함으로써 분권의 내실화를 기함
- 국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 업무의 개선에 기여하며, 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 획득
- 사회협약기구는 사회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에 기초한 시민정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

분권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3대 목표

- 1 분권국가 실현
- 2 지역다극 발전체제 구축
- 3 지역격차 해소

6개 정책약속

- 1 지방분권 개혁 추진
- 2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단체 만들기
- 3 재정분권 실현
- 4 자율과 합의에 기초한 광역경제권 지원
- 5 낙후지역 우선 지역정책 실시
- 6 지역인재활당제 실시



지방분권 개혁 추진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현실진단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심각한 지역격차 존재
-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와 글로벌화 시대에 부적합한 낡은 체제임
-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작업이 매우 부진하고 사무이양에 상응한 재원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진전되지 못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그 권한 행사가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까닭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자율적인 자치행정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실천과제

- 획기적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이양에 상응하는 재원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
- 특별행정기관의 업무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 지방의회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기대효과

- 지방분권 개혁을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면,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고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 사회통합이 가능
- 지방분권 개혁은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길이며 통일의 필수적 경로임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단체 만들기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현실진단

- 공천권을 독점한 지역지배 정당에 자치단체가 예측돼 독자적 자치행정 곤란
- 기초단체장이 해당 선거구 국회의원에 의해 예측돼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
- 정당공천으로 인한 공천비리 및 부패 만연
-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자치를 구현하지 못함
- 주민자치위원회가 임의기구로서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됨
- 지방자치선거 후보자 선거구 거주기간이 60일에 불과해 지역밀착성 확보에 효과 미흡

실천과제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주민투표로 선출

- 주민자치위원회를 근린의회(의결기능+집행기능)로 구성하며 근린계획의 수립권, 예산권, 집행권을 부여
- 근린사업으로는 주거환경정비, 지역경제 및 소득사업, 기초서비스, 문화여가, 주민 친목, 커뮤니티 시설운영, 안전, 기초단체의 위임위탁업무 등 포함
-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읍·면·동 자치법' 제정
- 모든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를 구성토록 의무화
- 재정정보의 공시제도의 개선과 정기적인 예산교육의 실시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의 선거구 지역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

기대효과

-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과 공천비리 문제 해결
-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주민 대표성 강화
- 지역패권주의 같은 낡은 정치 행태에서 탈피하여 주민참여형 풀뿌리자치 활성화에 기여
- 중앙정치 예측에서 벗어나 지역 내 생활정치 구현에 기여
- 읍·면·동을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구화 구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충실화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와 재정 감시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운영의 민주성 기대
- 지역밀착형 인사가 지방선거에 진출해 지역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보할 가능성 높음



재정분권 실현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현실진단

-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과 지방재정의 악화로 지방의 재정독립 필요성 증대
- 지방세수 증가 정체 속에서 이전재원 중심적 지방재정구조 심화
 - 지방의 재정 의존성은 높아지면서 자율권과 재량권은 제약
 -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분권의 가치가 퇴색되면서 '통제와 의존', '개입과 무책임' 현상 초래
 - 지방재정수입 중 이전재원 비율 1995년 22.2%에서 2011년 40.1%로 대폭 증가
- 국고보조금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지방의 재정자율권 훼손과 지방비 부담 확대
 - 지방재정지출의 우선순위가 정부가 정한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확대로 지방재정 압박 현상 초래

실천과제

-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는 재정분권 추진
 -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개혁 : 국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범위를 발굴해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실제적인 비율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해소 방안 마련
 - 교부세 제도 개혁 :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 이양과 더불어 지방 교부세를 확충해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을 감소시키는 방안 검토
 -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는 전액 국비지원
- 지방세수 확충 및 안정화를 위한 지방세 구조 개편 검토
-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제도 개편과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 정비
 - 임의적 보조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의 법제화
 - 중복적, 무분별한 보조사업 통폐합 및 폐지
- 일반보조금(지방교부세) 확충
 - 성과가 불확실한 자본지출 위주의 국고보조사업 통폐합과 축소

기대효과

- 지방재정 확대로 지방의 재정건전성 제고
- 지방의 일반재원 확충과 특정재원 축소로 재정지출 상의 자율성 제고와 지방비 부담 완화



자율과 합의에 기초한 광역경제권 지원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현실진단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발전지역과 낙후지역간 격차 심화로 국민통합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음
-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며 비효율적인 시도별 분절적 지역정책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국토공간의 층위별 특화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국토의 균형된 발전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극발전체제 구축이 필요함
- 이명박 정부에서 '5+2' 광역경제권 창설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획일적인 구획의 설정, 추진주체의 모호, 광역산업클러스터 편향, 독자적 정책을 시행할 권한과 재원의 미이전으로 실효성 있는 광역경제권 정책 구현에 사실상 실패

실천과제

-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도시 경제 및 생활권 육성
- 광역내 지역 간, 권역 간 격차해소도 동시에 도모

- 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층위별로 발전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산업연관을 고려한 공생과 순환의 자립 발전 계획을 수립
-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연계와 협력시스템을 강화해 각 권역별로 특성에 따라 자립 생활기반과 경제권을 갖추면서 균형발전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발전권역의 자립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전략, 권역별 중소기업지구 육성전략, 서비스 산업 성장전략, 자연산업 성장전략 등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산업육성전략 수립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 지역 다극 발전체제 구축과 연계해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
 - 수도권의 과밀과 비수도권의 과소화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 이후 개편된 기존 수도권 규제 해제 정책의 내용을 엄밀히 검토해 환원 조치하거나 강화시키며 필요시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함

기대효과

-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다극 발전체제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실현
- 중앙정부의 하향식 지역발전 계획을 지양하고 지방이 스스로 수립한 상향식 계획에 따라 지역의 자원이나 지혜를 살리고,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향한 노력을 중앙이 지원함으로써 지역특화 발전 가능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와 농촌 간, 도시와 도시 간 서로 제휴해 공생발전 가능
- 시도 간의 분절적, 경쟁적인 정책 수행을 지양해 공간정책의 규모화와 효율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 형성
- 국토공간의 층위별 권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과 지역내 연계와 격차해소 도모



낙후지역 우선 지역정책 실시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현실진단

- 그간 우리나라 지역정책은 지역경제력 수준 및 낙후도 고려 없이 재정을 배분
 - 대표적 지역정책인 지역산업진흥정책(광역선도전략 산업 육성 등)은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지역에 1/n 방식으로 지원
 - 광특회계 지역계정 총액배분 산식에 낙후도가 일부 들어가 있으나 실제로는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임의 배분
- EU는 구조기금의 배분에 있어 낙후도에 따라 차등 배분

실천과제

- 광역시도, 시군별로 지역격차지수를 산출해 낙후지역 우선의 차등적 재정배분
 - 지역격차 종합지수 혹은 경쟁력 지수, 지역혁신지수 등 적절한 지표를 도입해 낙후도에 따른 차등보조제 점진적 실시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지역개발사업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SOC, 산업지원, 연구개발, 인적자원 육성 정책에 대해서도 시도별, 권역별 배분현황을 공표하고 지역균형영향평가를 실시해 낙후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조치 강화

기대효과

- 효율성과 지역 경쟁력을 우선시해 성장지역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재원배분 방식을 개선해 지역격차 해소란 본래 목적에 걸맞게 지역정책을 재편
- 지역개발 사업 이외에도 공간적 정책효과를 가진 많은 각종 정부 부처사업을 지역 격차해소 관점에서 평가하고 재편
- 낙후지역 지원의 실질적 확대



지역인재할당제 실시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현실진단

- 인재의 수도권 집중이 격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돼 대한민국이 두 개의 국민으로 분할돼 있는 망국적 상황
- 비수도권 지역에 인재가 모이지 않으니 기업이 오지 않고 그 결과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해 인재 유출이 진행되는 악순환 되풀이
-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로 인해 지역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대학의 위상이 하락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 현재의 지역인재할당제는 권고 사항으로 실효성 낮음

실천과제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원 채용시 지역인재 할당
- 중앙정부 장관 임명과 정부산하기관 임원급 인사에서 인사탕평책 실시
- 대기업에 대해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을 유도하는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 지역대학 혁신 및 투자 강화
- 반값 등록금 비수도권 대학 우선 실시

기대효과

- 인적자원의 지역별 배분에서 시장실패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역인재할당제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인재육성에 기여
- 일자리와 사업기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기회균등 실현으로 비수도권 우수 인재육성 발판 마련

①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3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

3대 목표

- 1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 2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 3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 개혁

7개 정책약속

- 1 사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통제
- 2 사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및 전문화
- 3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및 민주화
- 4 국민의 기소절차 및 형사사법절차 참여 확대
- 5 사회적 특권층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6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확대
- 7 재판의 불공정 해소



사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통제

현실진단

-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 감시·감독체계가 필요함
-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존재함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검찰총장의 하명부서로 정치권력의 외압에 좌우될 우려가 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있음

실천과제

-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 소속하에 독립적인 기구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
 - 처장 후보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고 특별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종결권, 공소제기 및 유지권을 부여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직권남용, 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직무와 관련해 범한 횡령·배임 등 재산죄, 정치자금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탈세 등 사건과 국회의 고발사건을 전담하는 상설 전문수사기관으로 정착시킬 것임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기존 인력은 일선지검에 복귀시키거나 재배치하도록 함
 - 검찰청법과 직제령을 개정해 중수부와 대검찰청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

기대효과

-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지고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위공직자 부패비리를 엄단할 수 있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임
- 비대한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사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및 전문화



현실진단

-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유지권 등을 경찰과 검찰에 적절하게 분리, 배분함으로써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 권보장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에서 검찰의 인사,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어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준사법 기관인 검찰의 수사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저해함
- 또한 법무부와 법제처에 법무심의 관련 전문인력과 기능이 분산돼 국가적인 법무 행정서비스의 전문화와 효율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존재함

실천과제

-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강화해 내사를 포함한 경찰 의 모든 수사를 준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인권옹호 기관의 본연의 위상을 찾도록 함
 -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해 중복수사의 폐단을 방지하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함으로써 경찰권의 남용 및 인 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되, 직권남용, 뇌물 등 경찰 비리를 비롯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도 록 함
-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를 추진하고 법무부·법제처를 통합해 전문성을 제고
 - 법무부의 검찰 인사, 예산권을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찰청을 독자적인 예산, 인사권을가 진 독립된 외청으로 개편을 추진해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함
 - 법무부와 법제처를 통합해 종합 법무행정부서로 확대개편하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민간 법률전문가를 법무행정 공무원으로 선발하며 법률심의기능을 강화해 전문적인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함

기대효과

- 국민들은 중복수사의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정기관들은 상호간 견제와 균형 을 통해 수사권의 남용을 자제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 해의 우려가 줄어들 것임
- 인사, 예산의 독립성 확보로 검찰은 조직의 독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이 강화되고 법 무부는 법제처와의 통합을 통해 법무행정의 전문부처로 재탄생할 것임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및 민주화

01

현실진단

-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삼권분립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법관 대부분이 평생 법원에서만 근무해온 경력판사 출신으로 구성됨으로써 대법원이 사회의 변화나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대변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최고 정책법원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실천과제

- 대법관회의에서 호선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대법관회의의 결정을 존중해 지명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 임명 제도 개선
 -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롭고 중립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화
 - 대법관 중 직업법관의 비율을 축소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학계, 재야 법조, 시민단체 등 비법관 출신을 1/3 이상으로 확대해 국민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
 -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 행사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시민사회, 학계 등의 비법관 출신을 임명하도록 함

기대효과

- 대법원장 호선 존중으로 대법원의 위상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이로 인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의 독립이 완성될 것임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최고법원으로 거듭날 것임



국민의 기소절차 및 형사사법절차 참여 확대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현실진단

- 최근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음
-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의 기소여부를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적용대상이 제한돼 있고 배심원의 결정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돼 있어 신청률이 매우 낮음

실천과제

- 정치적 중요사건 등에 대한 기소배심제를 도입
 - 기소배심위원회를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설치해 운영하되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영하는 해당 지방법원에서 선정하도록 해 선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자금 관련사건, 뇌물, 부정부패 등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를 배심원이 결정하고 검찰이 위 결정에 기속돼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

-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시행
 - 형사사건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대폭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배심원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국민이 사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편파적인 공소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견제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로 사법민주화가 고도로 달성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임



사회적 특권층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현실진단

- 경제적 기득권층인 화이트칼라의 부패범죄, 증권금융범죄, 공정거래법위반 범죄, 조세범죄 등의 경우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액이 커서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중대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음
- 또한 50대 재벌기업의 대주주나 총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경제적 비리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경미해 실질적인 사법정의에 반하고 있어 그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대폭 가중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실천과제

-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겠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의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해 가중처벌 하도록 함
 - 재벌총수,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하도록 해 재벌들의 탈법경영을 방지하고 '대마불사, 재벌 불벌'의 잘못된 사법관행을 고쳐나가도록 함

기대효과

- 법을 무시하는 특권층의 비리가 줄어들고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것임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확대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현실진단

-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명백하게 부당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에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한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사정기관 및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과오를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환경침해, 소비자 집단피해, 특허침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실천과제

-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의·중과실 공권력 부당행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확대하겠음
 - 위법·부당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으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국가 및 경찰관, 검사, 판사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기준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오남용된 공권력 행사에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겠음
 - 대기업 등이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 환경침해, 제조물책임, 소비자 집단피해, 특허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실질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
 - 기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검토해 거대재벌의 횡포에 대해 집단으로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형사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민들이 직접적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억제되고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임
- 중소기업, 영세상인,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수단을 보장해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재판의 불공정 해소

01

현실진단



- 국민들은 개별재판에서 법관별로 양형의 편차가 너무 크고 법관이 전관예우 등 동료 변호사와의 유대관계 때문에 불공정한 판결을 한다고 보고 있어 사법부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현재 이러한 양형 편차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제정해 일선의 형사재판부 판사들로 하여금 양형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재판부마다 여전히 양형의 편차가 있고 자의적인 양형이 이뤄지고 있음

실천과제



-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판결에 있어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양형기준을 통일하도록 함

기대효과



- 양형기준법의 제정으로 양형의 재판부별 개별편차가 해소돼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경제

2. 경제력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재벌개혁

3. 혁신을 추구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개혁

4. 사회통합적 일자리경제

5.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근로자

6. 새 희망의 바람이 골목 구석까지 닿는 자영업자 보호 정책

7. 호혜와 협동의 사회적경제

8.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

9.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과학기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경제

4대 목표

- 1 사람을 소중하게
- 2 기업을 건강하게
- 3 지역을 풍요롭게
- 4 기반을 튼튼하게

12개 정책약속

-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2 소비자 주도 혁신과 소비자 존중의 경제운영
- 3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혁신경제 기반 구축
- 4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적 성장
- 5 자생형 벤처 생태계의 조성
- 6 서비스업·내수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 7 분권형 지역경제의 구축
- 8 협력적 개방화와 글로벌지역 육성
- 9 생명과 나눔의 지역공동체 발전
- 10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을 지원하는 R&D 기반 조성
- 11 신산업 성장을 위한 IT 기반 강화
- 12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투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현실진단

- 육아와 탁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의지는 높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이 충분하지 못함
- OECD 사례를 보면 여성의 출산율과 취업률은 비례관계를 보이고 있음.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경제구조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처할 수 없음

실천과제

- 출산 후 일자리가 필요한 35~44세 여성의 취업률을 대폭 확대
 -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육아와 탁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여성 취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공단 중심)에게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
- 여성이 육아와 탁아를 우선할 수 있는 자율적 근무환경을 도입

- 여성의 정규직 취업을 장려
 - 여성 근로자의 15%가 취업되어 있는 제조업에서 여성 정규직 채용을 확대(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포함)하면, 세제 혜택을 사업주에게 제공
 - 출산 후 직업교육을 확대하여 기술인으로서의 취업을 유도
- 여성의 창의적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을 우대
 - 1인 창조기업, 지식기반서비스 창업지원시 여성에게 우선 지원
 - 공공구매, R&D 지원 등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기업에게 할당
- 다둥이 출산모, 미혼모, 다문화 가정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 공공기관 일자리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
 - 국가가 취업을 알선하고,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정책적 배려를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

기대효과

-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우대 받는 사회로 나아감
-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해결함



소비자 주도 혁신과 소비자 존중의 경제운영

현실진단



-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 이익을 경시

정책약속



- 소비자 요구 분석 등을 위한 공공정보 활용을 위해 '공공빅데이터 개발센터'를 설치함
- 소비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하며, 생활랩(Living Lab)과 소비자 그룹을 지원함.
 - 공공 연구개발도 기술 파급효과가 큰 개방형 혁신과 삶의 질 개선 연구에 집중함
- 소비자주도 혁신을 산업경쟁력 강화와 역동적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로 활용함

- 소비자보호 정책을 OECD 상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함
 - 제조물 책임제도를 「상품책임제도」로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중재제도」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함
- 필수소비재의 공급·유통 경쟁을 촉진하고 정부 규제도 소비자 중시 기조로 전환함
 - 국산소비재의 국내외 가격차별·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함
 - 수입상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수입브랜드 독점판매권 확보나 복수 수입브랜드 독점판매권 확보에 대한 「수입브랜드 결합신고제」를 도입함
 -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전기요금, 휘발유세, 통신, 유료방송 등에서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금융소비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함

기대효과



- 오랜 세월 지속된 공급자 중심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소비자 중시경제를 확립함
- 역동적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서비스경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주도의 혁신을 활성화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선진국형으로 도약함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혁신경제 기반 구축

현실진단

- 추격자 경제에서는 획일적 사고의 인재로도 성장이 가능했지만 선도자 경제에서는 창의적 융합적 인재가 필요함
- 계층의 이동성이 제약되는 구조에서 복지비용이 계속 증가하므로 학습기회의 제공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함

실천과제

- 젊은 과학기술인과 여성 연구자를 위한 미래개척연구를 지원함
 - 현실적으로 기존 연구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 기회 확대
-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은퇴 후에도 과학기술자들의 고급 지식과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과학 기술인에 특화된 전문경력 지원센터를 설치
 - 과학 기술인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고 대학·출연(연)·기업 간의 이동 통로 등을 확대
-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과 활용

- 학력·학벌의 차별이나 지역 격차 없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분석 및 제조 능력보다는 혁신경제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대기만성’형 인재 양성을 위한 생애별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 ‘열린 교육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목적에 맞는 교육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함.
 - 개인 경력 상담, 학습 및 훈련 정보 제공, 고용으로 연결되는 평생학습지원시스템 구축
- 평생교육계좌제 실시
 - 현재 실업자와 일부 취약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내일배움카드제(훈련바우처)를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 일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

기대효과

- 창의적,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혁신경제의 기반을 구축함
-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만들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적 성장

02

현실진단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붕괴로 경제의 역동성이 훼손되어 일자리 창출이 부진
- 대기업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기업간 격차는 물론 사회 및 소득 계층간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사회적 불안정과 혼란 고조

실천과제

- 중소기업 정책지원 체계의 혁신
 - 지속적인 혁신동기를 유발하는 선택적 지원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보편적 지원으로 이원화
 -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업의 선투자, 정부의 후지원'의 인센티브 지원 체계
-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지원정책을 중견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확보
 - 중소기업에서 예비중견기업을 선정,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

- 글로벌화와 판로 확대를 통해 성장 발판을 구축
 - 판로/수출 지원 예산을 5천억('11년 1,540억, 중기청 예산의 1.6%)으로 확대
 - '글로벌진흥재단'을 설립, 기업가 정신 교육, 수출마케팅, 무역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
 - 정부 조달시장(공공구매)에서 중소기업의 직접 참여를 제도적으로 규정
- 우수한 청년인력이 모이는 '젊은 중소기업'
 -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장기재직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와 훈련·교육 기회 제공
- 중소기업 중심의 R&D 정책으로 융복합 시대를 주도
 - R&D 정책을 중소기업 위주-대기업 참여 방식으로 전환
 - 국가 R&D 결과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촉진
-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행정기구로서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

기대효과

- 글로벌 중소기업, 젊은 중소기업, 융복합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혁신경제의 기반을 구축함
- 중소기업의 당당한 경쟁과 늠름한 성장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함



자생형 벤처 생태계의 조성

현실진단

- 벤처 양산을 목표로 하던 기존 정책들은 벤처의 실질적 성장보다는 계량적 행정 목표에 치중함으로써 벤처 부실, 과당 경쟁, 생태계 역동성 상실의 결과를 초래함
-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한 정부 지원 모태펀드 또한 자금 공급이 가장 필요한 초창기 벤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여 벤처 생태계 형성에 실패하고 예산을 낭비함

실천과제

- 사업실패 비용 보완 및 재도전 기회 제공
 - 기술수준이나 신용도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및 개인입보를 선별적으로 면제하는 등 보증제도 전면 재검토
 - 세금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재기를 위한 자금지원 기회를 부여하는 '세금 마일리지제도' 도입
 - 재도전 벤처기업인 대상으로 재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재창업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신용보증부 대출로 지원
- 엔젤형 모태펀드와 클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 초창기 벤처를 대상으로 하는 엔젤형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민간 투자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클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함
- 벤처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 현 KOTRA 내의 벤처지원용 시장조사, 협상, 마케팅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모든 국가와 언어권을 대상으로 글로벌 벤처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함
- 벤처와 대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융합형 기업 생태계 조성
 - 대기업이 규모와 마케팅의 우위로 제품을 생산하되 벤처에서 착안되는 다양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함으로써 벤처와 대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융합형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책을 강구함
- 벤처 및 중소기업의 M&A 시장을 활성화
 - 벤처 투자자의 원활한 투자 수익 회수를 위하여 벤처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혁신 거래소 설치 및 세제 혜택

기대효과

- 벤처 생태계의 복원과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통해 혁신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
- 경제 주체간의 상생을 추구하는 융합형 기업 생태계 추구를 통하여 사회의 균형발전을 이룸



서비스업·내수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현실진단

- 한국경제는 성장의 정체와 일자리 없는 성장이라는 문제에 부딪치고 있음. 따라서 서비스업과 내수산업과 같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해야 함

실천과제

- 제조업과 서비스의 동반 성장
 - '제조업+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 대외경쟁력 있는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세계시장 동반 진출 도모
 - 지원기준, 범위 등에 대하여 차별을 받는 지식서비스업에 대해 제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세제, 재정, 금융 등을 지원
 - 기존 수출금융 프로그램에 해외진출이 유망한 지식서비스업 확대 적용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사회서비스의 발전
-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농공상 융복합화 지원

- 농어업인과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협동조합이 농공상 융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 체계를 정비함
-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기반 구축
 - 외환위기 이후 수출 확대가 내수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부품소재산업 낙후에 따른 아웃소싱과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부족 등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므로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기반 구축
 - 소비자 주도 혁신과 소비자 존중 경제정책 및 서비스산업 정책은 내수 확대의 첩경임

기대효과

- 실속 있는 성장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그간 지원받지 못했거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
-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었던 서비스업과 내수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옴



분권형 지역경제의 구축

현실진단

-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경제가 아니라 지역별로 특색과 자생력을 갖춘 분권형 다극경제로 전환해야 함

실천과제

- 지역의 잠재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킴
 - 조립가공 중심의 생산 지역에 연구개발과 숙련을 접목하고, 전통적 산업공단을 친환경·친문화 지역화하여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함
 - 최종재산업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자본재 기업들을 유치함
 -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지역 내 어메니티(amenities)를 발전시킴으로써 이를 토대로 문화·서비스·관광 등 무형의 가치산업을 발전시킴
- 지역별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
 - 대학, 테크노파크,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별 연구소 등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 공공부문이 거점도시의 지역산업 또는 가능성 있는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산업육성에 필요한 지식 생산의 씨앗을 제공함

- 지역별 인재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 인재와 지식의 선순환을 위해서 일정한 지리적 범위에 있는 다양한 대학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
- 분권형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정책기획 및 입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형성

기대효과

- 실속 있는 성장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그간 지원받지 못했거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
-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었던 서비스업과 내수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옴



협력적 개방화와 글로벌지역 육성

02

현실진단

-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으나, 수출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경제적 활력이 침체될 수 있는 위험도 증대함.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수출과 내수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실천과제

- 통상협력을 확대하되 과도한 국가간 경쟁의 구도를 피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여 수출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함
 - 한중 FTA 및 한일 FTA를 국내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고 아세안(ASEAN) 및 한중일간 협력을 강화함
 -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을 다변화해서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도록 함
 -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출 거점 마련하고 이들 신흥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협력체제를 구축(금융, 기술, 시장 협력 등)
- 남북경협, 북방경제협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인천, 광양, 평택, 대구, 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화 전략 및 리모델링 추진
 - 외국인 경영자와 근로자를 위한 문화거리 조성, 외국인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외국 인정주여건 개선
- 지역의 핵심성장역량 배양 및 생태계 구축으로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강화
 - 특히 부품소재 공급업체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한 매출 증대와 기술능력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국가 성장동력 사업과 광역권을 포함한 지역사업의 조정 및 연계, 지식생산과 산업화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설계 및 추진,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실시함

기대효과

- 한중 FTA 및 한일 FTA의 질서있는 추진과 남북경협 및 북방경제협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함
- 산업의 자생적 형성과 발전을 위한 광역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부품 소재산업의 수출산업화로 부품소재분야 히든챔피언을 육성함



생명과 나눔의 지역공동체 발전

02

현실진단

- 한국은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사회 각 집단이 협소한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공동의 이익을 무너뜨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상호이득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조직과 규범이 형성되어야 함

실천과제

- 지역주민을 지역발전의 주체로 세우고 아울러 지역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로 나서도록 제도의 혁신을 추진함
 - 공익적 활동에 대한 상호준수의무(cross compliance)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서 지역자원의 관리권한을 지역주민에게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
-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지역공동체의 사업인프라, 생산 및 유통시설, 관광프로그램, 주민조직화 등 지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지역 단위에서 민관협력 형태의 지역역량강화센터를 운영
 - 민관협력의 지역역량강화센터를 형성하여 포괄지원사업 총괄기획 행정,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포괄지원 사업의 기획과 개발, 사전준비 등을 수행하도록 함

기대효과

- 지역공동체를 통해 지역주민을 지역발전의 주체로 세우고 지역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한 공동체적 가치가 확산되도록 함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지역공동체 조직의 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함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을 지원하는 R&D 기반 조성

02

현실진단

- 국가 간 무역장벽은 낮아지지만 기술보호의 장벽은 높아지고 있음.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원천기술 확보 및 창의적이고 장기적인 과학 기술 연구 환경이 필요
- 중소기업과 지역산업의 경우 대부분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의 부족으로 저부가 가치 제품의 생산과, 낮은 이익, 이에 따른 연구개발 능력 저하라는 악순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R&D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의 틀이 필요

실천과제

- 정부 출연(연)에 대한 장기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
 - 자율적 책임 하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기 과제 보다는 장기 미션형 과제를 위주로 발주하고, 감독도 투명하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정부 R&D의 지원은 중소기업과 지역산업에 집중

-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확보 지원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과학 기술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 부족한 연구 자원 지원을 위해 출연연의 전문 연구 인력이 파견되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중소기업의 R&D 세제지원
- 이공계 대학의 기초연구 지원
- 과학 기술인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지원

기대효과

-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을 위한 R&D 기반이 확대되도록 하겠음



신산업 성장을 위한 IT·보건의료산업 기반 강화

현실진단

- IT 산업은 기존의 하드웨어적 성장을 넘어서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IT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적 약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IT 산업 정책이 필요함.
-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와 융합적 의료기술 발전이 결합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함.

실천과제

- 다양한 IT 서비스의 창달을 위한 제도 정비
 - 인터넷의 망 중립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IT 서비스 기업의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는 IT 기반 이용의 권리를 보장함.
 -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공공 정보를 공개하고 이 데이터를 가공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빅데이터(Big Data) 산업 형성을 지원함.
 - 소프트웨어 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함. 공공기관의 S/W 발주 관행 혁신, S/W 가격 합리화, 재하청 및 파견 관행 근절 등을 추진함. 관련 산업에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게 하여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함.

- 소상공인을 위한 IT 기반 지원
 - 자영업자와 초창기 벤처를 위해 홈페이지 및 SNS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 및 교육하는 온라인 활용 지원센터를 지원함.
 - 비영리 인터넷 오픈마켓을 개설하여 낮은 수수료로 상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디지털 국민 유통망으로 발전시킴. 직불카드 활용과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으로 결제 관련 수수료도 최소화하도록 함.
- 보건의료 R&D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 바이오벤처 및 중소보건의료기업 육성

기대효과

- IT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장을 마련하고, IT 서비스 산업에서의 기회 균등,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들도록 함.
-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늘리고 국민 건강의 토대를 마련함.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투자

현실진단

- 세계적으로 산업 중심의 인프라에서 친환경적이고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로 개념이 전환되고 있음. 그 동안 한국의 인프라 투자는 특정 산업 및 지역에 편향적인 방식으로, 혹은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 이제는 기존의 인프라 투자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의 흐름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실천과제

- 국민의 컨센서스에 기반한 종합적인 인프라 투자
 - 인프라 투자를 기획하고 조정할 국민합의기구로서 (가칭) '국가 인프라 기획위원회'를 설치함.
 - (가칭) '국가 인프라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선심성으로 제공되는 인프라 투자를 막고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장기비전을 형성함

-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투자
 - 각급 공공 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도서관이 대중의 문화, 정보, 지식 교류의 중심이 되게 함
 - 긴급응급의료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킴
- 친환경 인프라 투자
 - 주택과 건물에 있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설계기준을 높임과 동시에 종합적인 건물 개·보수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함
 - 장기적으로 전기, 물, 상하수, 빗물저류, 지하수, 지열 이용시설 등이 포함된 지하집적 인프라(U-infra)를 구축하여 인프라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지상 공간을 최대한 녹지화함
-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인프라 투자
 - 도시에 비해 인프라 투자가 미진한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

기대효과

- 일부 산업과 지역에 집중되고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인프라 투자방식을 국민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전환
-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적인 첨단도시 설계와 건설을 위해 지하집적 인프라를 구축

경제력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재벌개혁

3대 목표

- 1 헌법정신 구현,
공동체 가치 구현,
기득권체제 청산
- 2 기회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
- 3 혁신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 조성

3개 정책약속

- 1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재벌개혁 7대 과제
- 2 실천력을 확보하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 3 재벌의 책임강화와
약자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혁신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재벌개혁 7대 과제

현실진단

- 재벌에 의한 과도한 집중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창출
- 재벌권력의 확장·세습 과정에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노동자 등) 보호 등 경제민주화의 기본원칙을 훼손
- 재벌은 과도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반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첫단추로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

실천과제

-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 편법 상속·증여에 대해 과세강화
 -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수혜기업의 부당이익 환수
 - 일감 몰아주기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
 - 회사기회 유용에 따른 부당이익에 대한 과세 신설
 - 중소기업 및 자영업 분야에 대한 재벌 계열회사의 진입 제한

-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처벌 강화
 -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지원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 총수 및 임직원의 공정거래관련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법 등)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 금산분리 강화
 -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
 - * 은행법: 산업자본 소유 한도를 9%→4% 축소
 -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를 9%→4%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자회사등 소유 금지
 -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기준 마련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유효성 회복
- 순환출자 금지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기존 순환출자의 처분명령 여부는 재벌개혁위원회가 재벌의 시정노력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추진
- 지주회사 규제 강화
 - 2007년 4월 개정 이전의 공정거래법으로 환원
 - * 현행: 부채비율 200%, 자회사지분율(비상장40%, 상장 20%)
 - * 개정: 부채비율 100%, 자회사지분율(비상장50%, 상장 30%)
 - 계열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 중소기업 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 적용 완화
-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
 -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 연기금 주주권 행사강화
- 일반집중 폐해 시정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
 -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일반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는 단계적으로 도입 검토
 - * 재벌개혁위원회가 재벌 등의 시정 노력을 평가해 도입 및 발동 여부 판단



안철수의
약속

기대효과



- 재벌개혁을 통해 기득권자인 대기업 위주의 승자독식 사회를 청산해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촉진
- 대·중소기업간 경제활동의 조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 재벌체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실천력을 확보하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02

현실진단

- 재벌의 영향력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많은 폐해를 남고 있으며, 심지어 입법·사법·행정도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재벌 관련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 개별 사안별로 정책이 집행돼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미흡
-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고, 이에 따라 정부부처 간 재벌정책에 상충과 공백 존재
- 재벌체제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는 권한은 정부부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실천과제

-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 재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및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 재벌정책의 수립 및 추진, 유관 부처간 업무조율 등 정책 전반 총괄
 - 대통령이 직접 재벌개혁 과제를 책임으로써 추진력 담보

- 재벌개혁위원회의 기능
 - '종합적'이고 '구조적'이며 '체계적'으로 재벌개혁 추진
 -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하며 입법을 권고
 - 재벌과 관련된 법, 제도,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등 관련 업무 수행
- 재벌개혁위원회의 지위 및 조직
 - (가칭)'재벌개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권한 등을 규정
 - 기존 정부조직 체계에 미치는 부작용은 최소화
 - 위원은 관련 부처의 장으로 구성되는 정부위원(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들로 구성
 - 위원장은 독립성확보를 위해 민간인으로 위촉

기대효과

- 재벌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재벌개혁의 추진력 확보
- 재벌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단계적인 재벌개혁정책 실행



재벌의 책임강화와 약자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혁신

현실진단

-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대규모 유통업 등에서 불공정거래 만연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결의 독립성, 투명성 결여
- 법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억제효과 미흡
- 가격담합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구제 미흡

실천과제

-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의 책임 강화
 - 원사업자의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경영자료 제출 요구 금지
 - 하도급법 상습위반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제한 및 영업정지 의무화
- 가맹점거래에서 대기업의 책임 강화
 - 가맹점주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 구속력 있는 가맹점 거리 제한제도 도입
 - 가맹점주의 사업기간 안정적 보장
 - 리뉴얼 등 공사시 가맹점주에게 업체 선정권 부여 및 가맹본부의 감리비 명목 등의 마진 수취 금지

- 가맹점 이전 요구 및 점포확장 강요 금지
- 부당이득이나 평균매출액 산정 곤란시 정액과징금의 도입
- 대규모 유통업거래에서 대기업의 책임강화
 - 특약매입거래의 대상품목/업종 제한
 - 특약매입거래의 폐단 시정을 위한 장치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
 - 신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의결진술권, 결과통지 요구권 부여
 - 심의사건의 처리과정 및 무혐의사건의 결과 공개 의무화
 - 소수의견 · 반대의견의 명시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별도의 심결위원회(가칭)를 두고, 공정거래위원장과 사무처로부터 독립
 - 법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injunction) 도입
- 법위반행위의 실효적 적발과 제재
 - 공정거래 관련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
 - 법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개편
 - 중대한 법위반시 정액과징금 대폭 상향
 - 공정거래 관련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국가소송제 도입
 -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분야 등에서도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 행사에 대한 적법절차 강화 병행
-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강화
 - 가격담합에 대한 시정조치로 환원명령 도입
 - 시정조치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독과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책정에 대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 해외직거래 방해행위 및 수입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불공정약관 사용자에게 과징금 도입



기대효과



- 재벌 계열사 및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함으로써 재벌에 의한 폐해를 효과적으로 시정
- 재벌 계열사의 중소기업분야 진입 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여건 마련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심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 민생을 침해하는 가격담합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불공정약관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수단 마련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혁신을 추구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개혁

3대 목표

- 1 혁신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역할 강화
- 2 국민경제 안정 도모와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
- 3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금융정책 실행

4개 정책약속

- 1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의 정착
- 2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 3 서민생활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정책
- 4 금융 시장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의 정착

현실진단

- 금융서비스의 편중현상이 심각해 금융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가 존재
- 벤처기업의 창업부터 투자회수까지 사업위험을 관리, 인수할 자금 공급 체제 취약
- 중소기업 금융,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의 공급이 여전히 미흡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새로운 사업형태에 대한 금융지원 미흡
- 공적 금융기관이 금융 사각지대의 해소보다는 손쉬운 이윤추구에 몰두

실천과제

- 벤처 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 정부의 금융지원을 엔젤투자를 포함한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해 확대 · 집중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업과 초기 성장을 지원
 - 한국벤처투자(KVIC)의 신규 투자 규모를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엔젤투자를 포함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50%로 확대
 - 벤처 투자자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벤처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KVIC의 역할 강화
 - 벤처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자 발굴 및 기업인수 금융 활성화

-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정보를 공적 기구에 의무적으로 집적해 기업정보 공유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 클라우드 펀딩 시장 활성화를 통한 창업지원 소액투자제도 정착
 - 창업가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액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시장 제도를 도입
 - '소액창업투자법' 제정 : 소액 창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유가증권 발행에 관한 규제 현실화
 -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수립
- 사회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사회적금융 실현
 - 사회적기업과 영세 자영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금융공사' 설립
 - 자본금 5천억원으로 설립하고 연차적으로 총 5조원의 투자자금 조성
 - 투·융자 자금 선순환을 통해 재원공급의 지속성을 높임
 - 지원자를 사업목적 별로 구분해 사회투자기금과 자영업자여신기금 두 개의 사업기금 설치
-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을 조속히 시행해 민간 금융회사로서 우리금융지주의 경쟁력을 제고
 -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은 분리 매각
- 지역금융 및 서민금융 활성화
 -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육성
 - 충청권과 강원권에도 지역 금융수요를 파악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 다만, 금산분리 원칙,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철저히 해 금융기관 부실화를 방지
 - 서민들이 신용도에 상응하는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금융의 사각지대 축소
 -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지역 내 대출 의무비율을 설정해, 지역자금의 환류 유도

기대효과

- 금융산업의 혁신친화적 개편으로 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 제공
- 벤처 및 사회적기업의 창업 활성화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소외 감소
- 클라우드 펀딩 시장 도입을 통한 소액창업 투자환경 마련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현실진단

- 금융감독의 실패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 대두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금융정책을 위해 감독정책이 희생
- 금융감독 유관기관 간 다양한 공식, 비공식 협의체가 존재하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위상이 낮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금융위기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이 판매되거나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악탈적 금융행위가 빈발
-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경영(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 자산에 손실 발생
-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절차, 법적 소송 등의 구제 방안 등이 있으나 실효성 미흡

실천과제

-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
 -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
 -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로 분리
 -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금융안정위원회' 신설
 - 政·官·金 유착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퇴직관료·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방지
 - 감독기구의 내부 통제장치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 금융기관의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보상
 -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설사 승소해 손해배상채권을 획득하더라도 자원부족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기금이 금융소비자에게 부족분을 보상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예금보험제도 이외에 투자자보호기금 또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형태로 금융소비자를 보호
 -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실적형 금융상품을 보호대상으로 함
 - 거래금액의 일정한도까지만 보호하는 부분보호제도 도입
 - 재원은 영업행위 규제를 받는 모든 권역의 금융기관이 분담금 납부
- '금융소비자의보호에관한법률' 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 이자제한 : 이자율 상한을 25%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 처벌
 - 공정대출 :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해 과잉 대부를 금지
 - 공정채권 추심 :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상환의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에 대한 채권추심 금지
 - 금융시장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 절차 명시
 - 5천만원 이하의 분쟁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조정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은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별도의 소 제기나 형사 고발을 제한하는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도입
 -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안철수의
약속

기대효과



-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감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정부 정책에 따른 감독원칙의 훼손 방지 및 공적 자금 투입 예방
- 감독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민경제의 거시 건전성 확보
-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
- 분쟁 조정 절차의 유효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제고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서민생활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정책

현실진단

-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따라 저신용자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 저신용 채무자의 생존권 보호는 매우 시급한 과제
-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절반 이상이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돼 자영업자의 대책 마련 시급
- 하우스푸어의 문제는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신중한 접근 필요

실천과제

- 파산자의 생계안정 및 패자부활 프로그램 마련
 -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 조성
 -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 출자
 - 1차로 1조원을 조성하고 추후 필요시 2차로 1조원 추가 조성
 -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 '진심 새출발' 프로그램 등록·이수 시 3개월간 매월 20만원 지급

- 개인파산제도의 합리적 개선
 - 자가 주택 거주자가 파산했을 때도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세입자 파산과 같은 금액의 면제 자산 인정
 - 파산자의 6개월간 생활비 면제자산 인정 의무화
 -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기존 채무 변제 목적의 신규 차입은 사기 파산의 범주에서 제외
- 개인회생절차의 합리적 개선
 - 개인회생계획상의 변제기간을 3년(최장 5년)으로 단축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제가 포함된 개인회생계획의 경우 담보채권자의 임의변제 금지
 -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특칙을 신설해 최장 20년 동안 분할 변제 허용
 - 가용소득 범위 이내에서 원금 및 공정이자를 변제(연체이자는 면제)
 - 신용대출은 가용소득의 잉여분 한도 내에서 3년(최장 5년)동안 변제
-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의 단축
 - 파산자와 개인회생절차 인가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3년으로 단축
- 주택담보대출 기간의 장기화를 통해 하우스 푸어의 상환 부담 완화
 -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매월 상환금액을 대폭 감소시켜 가계의 가용 소득 증가도모
 -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적격 장기 대출자산을 매입함으로써 해결
 -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재정 능력 제고
-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에 대한 사적 채무 재조정 장려
 -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소위 '깡통 주택')의 경우 1순위 담보채권자가 사실상 유일한 채권자
 - 1순위 담보권자와 채무자간 매각후 임대(sale and lease back), 신탁후 임대(trust and lease back) 등 다양한 채무재조정 방식 가능
 -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 해소를 위해 정부는 필요시 사적 채무 재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 제공

기대효과

- 채권자와 채무자간 공평한 손실 분담
- 신용대출 채무자와 담보대출 채무자간 형평 유지
- 국민의 조세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



금융 시장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

현실진단

- 2008년 이후 미국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음
- 유럽의 재정위기 등 유로존의 불안정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불확실성 고조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완전히 개방돼 대외요인에 큰 영향을 받음
- 환율 등 금융지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미흡

실천과제

-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 금융통화위원 추천·임명을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
 - 물가안정,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의 안정 등 책무 수행에 만전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토빈세 도입을 추진
 -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원화 매입시 과세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

- 외환보유액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 도입
 -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 강화
- 통화당국과 금융감독당국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 정보 교류 및 공동검사 활성화

기대효과

- 금융의 공공성과 위기대응 능력 제고
- 통화정책, 외환정책, 금융감독 정책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

사회통합적 일자리경제

3대 목표

- 1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 2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해
양극화 해소
- 3 노동시장 제도 개선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일자리 나누기

5개 정책약속

- 1 일자리, 복지,
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체계 구축
- 2 사회통합적
일자리창출
- 3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 4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 5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일자리, 복지, 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체계 구축

현실진단

-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만으로는 지금의 일자리문제를 풀 수 없음
-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경제민주화 등 국가적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세대간 부담 원칙, 정책의 우선순위, 재원의 배분원칙, 복지의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 타협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
-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모아 추진할 정책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실천과제

-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과제를 협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민 합의기구 구성
-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강화
 -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의 취약계층 대표를 포함해 재구성
 -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조정

기대효과

- 주요 경제주체와 정파를 초월한 지도자들이 참여해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등 국가의 핵심과제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
- 노동시간 단축 등 노사정간의 구체적 이익 갈등 사항, 현안 국가적 이슈, 개별법·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도출



사회통합적 일자리창출

현실진단

-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모아 추진할 핵심 정책
- 지식시대의 혁신경제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교육과 학습이 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움
-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사의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
-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실업, 육아, 정년, 훈련 등의 다양한 이행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 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교육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세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제한(시간, 비용, 제도 등)돼 능력개발을 통한 신분 상승이 제한됨
- 정년연장문제는 고령화와 청년고용대책 차원에서도 본격적 논의 필요
- 여성(25~64세)고용률 60%(2009년 현재)로 남성고용률(86%),OECD 평균(71%)에 비해 낮은 상태

실천과제

- 신성장산업 육성에 의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혁신 경제의 중점 육성 산업 : 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의료·실버산업 등
 -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 정보·통신, 법률, 문화, 콘텐츠 등
 -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충 : 보육, 노인보호, 교육, 안전 등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 기능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학습 체제 및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 맞춤형 성장정책과 창업 등의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을 중견기업에도 연장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 창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지원, 창업 실패시 연대보증제도 개선, 지역·민간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
 - 영세사업체 혁신으로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 현장학습 인프라와 중소기업, 공공부문 현장학습체제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노동시간 규정 적용 제외 업종/직종 축소, 휴일노동시간의 연장노동시간 포함, 선택적 노동시간제, 노동자의 휴가 선택권, 엄정한 노동시간 체크 체제 등
- 취약노동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 비정규직, 영세기업 노동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훈련바우처(voucher)로 지급해 자신이 선택하는 훈련기관에서 원하는 직종과 조건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지원
-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 고용과 복지, 직업훈련이 연결되는 활성화 노동시장 정책 체제 강화
 - 취업능력의 제고, 적극적 구직활동 등과 연계해 소득 지원
 -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구직 요건과 인정 절차를 개선
-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와 점진적 연령제한 철폐
- 직장·생활 균형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육아휴직수당과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지원
 - 휴직 후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연령 제한없이 일할 기회 부여
 -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미흡하게 제공돼왔던 보육, 교육, 간호, 사회 복지, 안전, 환경보호 등 사회서비스·개인서비스에 고령자를 대거 배치해 취업 기회의 확대
 - 고령자의 다른 일자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에 특화된 고용서비스와 교육훈련 체계 구축



기대효과



-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의 현장학습 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
- OECD 최장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청년에게도 일자리를 제공
- 취약노동자의 경쟁력, 취업능력을 강화해 더 나은 취업 등으로 지위 향상을 지원해 개인의 고용안정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실업, 조기퇴직, 육아 등 노동시장 위협에 대비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과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 체제로 고용서비스 기능을 OECD평균 수준으로 강화
- 세대간 고용갈등을 초래하지 않고 기업에서 신규고용 창출 가능
-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재고용과 계속 고용을 활성화
-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연령 제한 없이 일할 기회를 주어 베이비부머 문제 해결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현실진단

- 영세 저임금 사업장의 경우 기본 노동법 미준수,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 사회보험 미적용, 산업안전·보건 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영세기업과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금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고 기금 지원도 대기업 위주로 돼 있어 일자리 문제 해결의 어려움 존재함
- 자영업자나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이나 복지 등의 격차가 심각함에도 정부나 기업 등 우리 사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매년 산재 노동자가 10만명씩 생기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18조원에 달함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편이며, 1인 이상 사업체 임금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달하는 노동자가 1750만명 중 258만명으로 14.7%에 달함

실천과제

- 청년들이 기피하는 영세사업체 저임금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해 일자리 공급 확대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기여
 - 기본 노동법 준수(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 서면계약), 4대 사회보험 적용, 개인별 맞춤형 능력개발 기회 제공,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사회통합 사업체'로 인증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하고 영세사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이를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해 '사회통합 일자리 혁신기금'을 설치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금, 유사 사업예산 등 재원을 통합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 '한국형 실업부조'의 법제화로 영세사업체 노동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주 등의 실직 중 구직기간의 소득지원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 "기간제, 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과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임금 원칙을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차별금지
- 공공부문에 대한 직무단위로 사용기간 제한
 -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조달정책과 연계된 비정규직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 유도
-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 특수고용종사자협회와 같은 별도 단체 결성을 통한 공동 문제 해결보장
- 사회적으로 합의한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해 발생한 중대한 산업재해·직업병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 직업병 인정 요건을 보다 완화
 - 직업병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더 부담하게 법제도 개선
- 최저임금 수준을 임기내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기대효과



- 고용과 복지를 연결하는 복지 체계 수립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을 보호
- 직무단위 정규직화로 비정규직 문제 점진적 해결
- 산업재해, 직업병 발생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사회질서 유지와 공정사회, 사회통합 실현
-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 보장, 양극화 해소, 빈곤 대책 마련

02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02

현실진단

- 고학력 청년취업난은 청년들의 절망과 불안을 넘어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사항
- 통상적인 노동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국민합의를 토대로 특단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채택할 필요

실천과제

-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5년 한시로 청년고용특별조치의 법제화
 - 향후 5년간 대기업·공기업이 일정비율로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융친화적인 사회적 책무를 규정
 - 대기업 청년채용 공시제 실시
 - 신규청년채용에 대한 채용 인센티브 강화와 자본인센티브(투자세액공제제도) 축소
 - 청년일자리 창출과 정부조달정책 연계 활용

- 청년들의 '자발적 사회 공헌 프로그램' 시행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청년들의 자발적 사회 공헌프로그램으로 가칭 '청년 Help Korea 봉사단'을 설립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경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공헌 일자리를 창출
 - 청년들이 사회적 공헌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취업에 가점을 주는 제도 시행

기대효과

- 현행 '청년고용촉진법'은 이행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또는 현행 법의 개정으로 공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청년 추가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사회적 책무로 규정해 경제 단체가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 청년들은 1년간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그 기간 중 수당, 사회보험 혜택 등을 받게 지원하고, 계약기간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경력을 인정해 다른 취업시 우대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02

현실진단

- 노사 당사자의 이익충돌로 사회통합적 차원의 노사관계 미비
- 기업간·직종간 과도한 격차와 공정한 보상체제 미흡
-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공정한 질서, 즉 법과 원칙을 형성하고, 노사관계에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조정자, 질서관리자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 다양한 문제 발생

실천과제

- 현행법의 토대 위에서 노사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전국단위, 지역단위,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 정리해고 남용방지
 - 정리해고 남용 방지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신속히 판정하도록 '신속 판정제도'를 도입
 - 정리해고에 따른 충격 완화, 전직지원 등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지원 강화
- 사내 하도급 문제는 불법을 준수하고 이행토록 조치하는 데 중점
- 기본적으로 노사정 간에 의견 차이가 큰 사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
 - 법적 안정성 측면과 노사관계 발전을 고려해 문제 개선 필요. 다만 복수노조 시행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감시 강화
-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추진
-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기대효과

-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노사문화와 관행을 정립
- 정리해고제도 남용 방지로 고용안정성 보장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근로자

3대 목표

- 1 중소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2 혁신과 기업가정신으로
좋은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
- 3 근로자와
가족이 행복한
중소기업

12개 정책약속

-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 2 국가 R&D 지원체계 및
지원자금의 중소기업 집중
- 3 중견기업으로 커가는
성장사다리 만들기
- 4 정부조달제도 개선으로
수익성 및 성장기회 제고
- 5 기업가정신 고취와
창업활성화 토대 마련
- 6 여성과 청년의
지식·기술창업 적극 지원
- 7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및
행정규제의 혁신적 정비
- 8 부품 및 원자재
공동구매 체계 구축
- 9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 10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 도입
- 11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
- 12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근로자복지시설 확충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현실진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미래 위험요인 중 하나임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는 불공정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배타적 전속거래 요구, 구두 발주와 기술 탈취, 대형 유통사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요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1차 이하 협력업체 간 불공정 거래는 관심의 사각지대여서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 불공정 거래의 영향이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도 그대로 파급됨
- 대기업 집단의 중소기업 사업 영역 진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존립 기반이 위협 당함

실천과제

-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부당성 여부에 대한 대기업의 입증 책임 부여
 - 피해가 구체화된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발해 자기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 전속 고발권 개선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에 납품단가 협상 조정 권한 부여

- 1차 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 동반성장 실적 우수 1~2차 협력업체에 정책자금, 신용보증 등 인센티브 제공
 - 1차 협력업체가 2~3차 협력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인센티브 도입
-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매수수료 상한제를 시행
 - 판매수수료율에 상한선(20~30%)을 두는 방안을 도입
- 대기업 공장이 해외로 이전할 때 협력 중소기업 동반진출에 대한 불공정 관행 시정
 - 대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때 함께 이전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정
 - 정기적인 서면 조사 및 현장조사, 협력사 손해배상제 도입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질적 시행 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법제화 검토
 -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엄격한 시행
- 대기업의 기술인력과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
 - 법 집행강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결과 공표, 정부 구매 및 입찰 자격 박탈 등

기대효과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됨
-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대기업 스스로 변화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가능해짐
-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여 대기업의 힘의 논리에 의한 불공정거래 요구 시정
- 대기업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관계 형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임
- 동반성장의 2~3차 협력업체 확산으로 건강한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인력과 기술탈취를 예방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술력 제고



국가 R&D 지원체계 및 지원자금의 중소기업 집중

현실진단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추진은 협소한 내부자원에만 의존하는 단독개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선 기술 동향에 뒤지는 경우가 많음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자원의 상대적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인력·기술·지식을 외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연구지원 체계가 필요함
- 현재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 자금은 대기업 1조2,330억원(지원과제 1,019건), 중소기업 1조6,350억원(지원과제 7,046건) 수준임
-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기술개발 자금력이 뒷받침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줄 정당성은 매우 낮음
- 중소기업에 정부 R&D 지원 자금 배분 비중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은 특허가 침해당하거나 특허 관리 및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R&D의 지를 약화시키고, 소중한 지적재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음

실천과제

- 국책연구기관의 기능을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대폭 개편해 강소기업의 출현을 촉진
 - 기초과학 연구가 주인 대학의 기능은 응용기술 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니즈와는 다소 괴리가 있으므로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파트너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
 - 중소기업의 외부 R&D자원 접근과 활용이 쉽도록 국가혁신체계(NIS) 및 지역혁신체계(RIS)를 재설계
 - 출연(연)의 고급 인적·물적 자원이 중소기업의 R&D활동 지원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출연(연)의 기능을 전폭 수정하고, 출연(연)의 조직과 성과 평가체제를 개편(Connect & Development)
- 국공립 연구소 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협력지원 파견제' 도입
 - 출연(연) 등에 근무하는 국공립 연구 인력을 중소기업에 협력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1~2년 정도)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소-중소기업 간 협력파견제 실시
- 대학, 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이 공동참여하는 산업기술 연구조합 기능을 정상화
 - 산업기술혁신조합을 R&D 기획 및 협동 수행 등 본연의 기술혁신 중간 매개조직 역할을 수행하도록 재구축
 - 부실 조합을 정비한 후, 조합에 각 산업별 R&D 로드맵 작성, R&D 데이터 구축, 공동 기술 개발 과제 등의 지원으로 자립화의 기반을 마련
- 국가 R&D지원 자금의 중소기업 배분을 대폭 증대
 - 기업에 대한 R&D 지원자금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
 - '생산비절감형' R&D에서 '혁신제품 개발형' R&D로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배양을 유도
 - 단독 기술개발, 애로 기술 타개를 위한 지원을 지양하고, 공동 기술개발, 신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
- 특허은행 설립
 - 중소기업 특허의 탈취, 분쟁 및 소송, 특허괴물로부터의 보호, 특허의 활용도 제고



기대효과



- 중소기업이 국공립 연구소 등 국가혁신체계로 접근이 쉬워져 중소기업의 기술적 기회 제고 및 기술 역량 배양이 쉬워짐
-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로 R&D 효율성 및 혁신능력 제고 효과가 있음
- 중소기업업계의 첨단기술 접근도 제고
-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제고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기반이 구축됨
- 특허은행이 설립되면 중소기업의 특허가 보호되고, 관리 및 활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됨



중견기업으로 커가는 성장사다리 만들기

02

현실진단

-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중견 기업군이 취약해 기업 분포가 극심한 첨탑형 구조
- 최근 중견기업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1,400개에 불과한 실정임
- 중간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 정체 구간이 다수 확인됨
- 성장 정체의 원인은 중소기업 졸업 기피를 위한 분사·아웃소싱, 생산 품목당 내수 시장 규모의 한계(과당 경쟁), 생산성 정체, 지원 체계 미흡 등임
- 성장동력 창출 능력을 갖춘 새로운 기업군이 없는 것은 '경제의 성장과 활력' 측면에 근본적 문제에 근본적 문제

실천과제

- 중소기업 졸업 이후 금융·세제·R&D 등의 혜택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점진적으로 감소
 - 5년 연장, 매년 20%씩 점진적 축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규모별로 차별화된 중견기업 정책 세분화(Segmentation)
 - 중견기업의 초기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등으로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맞춤형 정책 시행
- 맞춤형 금융지원 제공으로 정책 효과를 높임
 - 상장 중견기업 :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
 -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중견기업 : 정책금융 및 신용보증 공급 대상을 확대
 - 즉시 전환 중견기업 : 일정 기간 단계별 조정으로 신용보증 및 정책금융 이용을 확대
 - 글로벌 중견기업 : 공장 설립 등 해외진출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개편
- 은행의 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와 금리 인하
 - 중견기업 전용 신용평가기준을 적용
 - 정책자금 금리 혜택 유예기간을 제공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 기업은 신용대출, 보증기관의 보증한도와 보증서 발급을 확대
 -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보증한도 유지 등
- 중견기업 전용 R&D 자금 지원
 - 기술료 납부 차등 적용을 통해 중견기업의 정부 R&D 과제 참여 유인 제고
 -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계한 공동연구개발 사업 확대
- 중견기업 글로벌화 집중 지원
 - 중견기업이 해외 진출시 자금, 기술, 시장 개척 등 종합적으로 지원
- 중소·중견기업 기업 승계 원활화 지원
 - 기업상속 공제요건 수요자 맞춤형으로 완화, 상속세 감면 최고한도 확대
 - 독일식 상속·증여세 감면제도 도입 등의 세제 혜택

기대효과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해 한국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지고 건실한 경제 성장이 가능해짐
-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높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제공함
-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출현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됨



정부조달제도 개선으로 수익성 및 성장기회 제고

현실진단

- 부족한 판로와 낮은 수익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봉쇄되어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대기업과의 수익성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영업이익률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7.2~8.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5~4.8% 수준)
- 2011년말 기준 정부 조달시장의 규모는 약 48조원으로, 이 중 중소기업 관련사업(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약 34조원인데, 그 중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불과함(중소기업 관련사업의 약 66%)
- 이 23조원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의 직접 계약 규모는 더 낮은 실정이며, 특히 재하도급의 경우 정부조달에서조차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같은 횡포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실천과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거의 100%를 중소기업과 직접 계약
 - 대기업이 재하도급 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직접 분리발주
 - 중소기업 간 하도급 폐해방지를 위해 도입한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강화하여 재하도급 금지
 - 다만 공공안전, 품질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 일정 기준에 의한 심사절차를 거쳐 예외 인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기준의 확대 및 다양화 시행
 -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인 제품의 확대·다양화를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직접 조달이 가능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조달 비중을 확대
- 중소기업 공공구매 법정목표 비율 설정기준을 다양화
 - 취약한 유형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법정목표 비율을 다양하게 설정
 - * 미국은 총량 목표비율을 23%로 하고, 영세중소기업 5%, 여성중소기업 5%, 낙후지역 중소기업 3%, 상이군인 중소기업 3% 등 다양한 목표 비율을 설정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기회를 높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 제공
- 중소기업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제공



기업가정신 고취와 창업활성화 토대 마련

현실진단

- IMF 외환위기 이후 대내외 환경이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가면서 우리 사회의 기업가정신은 크게 쇠퇴함
- 이러한 상태로는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이나 혁신경제시대를 열어가기가 힘든 상황
-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실패비용이 증가함
-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희생이 과다함

실천과제

- 기업가정신 교육의 확대와 체계적 추진
 -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센터를 활성화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기능을 강화
- 사업실패 비용을 보완하고 재도전 기회를 제공
 - 정책 자금을 대출할 때 기술 수준이나 신용도에 따라 연대보증 등을 선별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보증제도를 검토

- 장기간 세금을 성실하게 낸 중소기업인은 세금 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재기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신용보증서 발급시 가점을 주거나,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주는 '세금 마일리지 제도' 도입
- 재도전 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재기(再起)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재창업에 필요한 지원책 마련

기대효과

-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청년 기업가가 양성됨
- 대학 기반 여성과 청년층의 지식·기술창업이 활성화됨
- 준비된 창업으로 창업성공률이 높아짐
- 재도전 활성화로 소중한 경험과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함
- 재창업자에 대해 최소한의 금융거래와 가정 유지가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따뜻한 사회가 실현됨



여성과 청년의 지식·기술창업 적극 지원

현실진단

- 21세기 새로운 산업발전 패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 특유의 감성 등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경제활동이 중요한데도 여성 창업은 생계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퇴직 이후 이루어지는 생계형 창업과 달리 청년창업은 지식·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여성 및 청년층의 지식·기술 창업이 중요하나, 체계적인 지원 제도와 창업 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창업을 쉽게 못하는 현실임

실천과제

- 기업가정신 교육의 확대와 체계
- 여성 및 청년의 지식·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 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창업 교육을 확대 실시
 - 여성과 청년의 지식·기술 창업 전용 신용보증·정책자금 지원
 - 여성과 청년의 지식·기술 창업자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여성 지식·기술창업보육센터 설치
- 건전한 창업실패에 대한 재도전 장치 마련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목표비율 이행력 강화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여성기업 제품 구매 목표비율 확대
- 여성의 지식·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창업대책 마련
 - 생활형 지식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
 - 이공계 전공 경력 단절 여성의 자아실현,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

기대효과

- 지식·기술 집약적인 여성·청년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해 창조경제시대의 기업가 정신 활성화를 도모함
- 여성·청년층의 창업을 활성화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착되고 있는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재개시킴
- 범국가적인 지식·기술 창업을 활성화해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임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및 행정규제의 혁신적 정비

02

현실진단

- 현재는 지식경제부의 차관급 외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청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를 노출함
-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 지원기관을 수시로 신설 해온 결과 산하기관 수가 23개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다기화됨
- 그동안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음
- 이와 같은 다양한 규제들로 중소기업들은 절차적 규제비용(규제 행정비용)과 실질적 규제비용(규제 순응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면이 있고, 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 위주로 추진돼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수준임

실천과제

- 중소기업 지원 행정조직을 실질적으로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
-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폐합하여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함

- 중소기업의 규제 행정비용 감축 목표제 도입
 - 집권 기간 중 중소기업이 각종 규제로 인해 부담하는 규제 행정비용의 30%를 줄임
- 규제차등제 도입
 - 동일한 규제라 하더라도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 능력이 매우 취약한 중소기업의 불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규제 내용을 차등화
-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전담 규제개혁 추진단’ 설치
 - 중소기업 관련 규제 전수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심의, 불필요한 규제 적발, 규제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 규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
-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이 지방정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경로를 정비

기대효과

-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통합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수행하게 됨
- 중소기업 시책과 지원기구의 통폐합을 통한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함
- 과도한 정부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절감하게 됨
- 규제 대응 능력에 따라 기준, 절차, 주기, 제재 수준 등을 차별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임
- 중소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장려하게 됨
- 규제 생산자인 공무원 중심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오는 기존의 방식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게 됨



부품 및 원자재 공동구매 체계 구축

02

현실진단

- 중소기업은 원부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제품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원가를 줄이는 것이 중소 벤처기업들의 적정 마진 확보 및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임
- 원부자재 구매 시 대기업은 대량 구입으로 가격 인하의 우위를 갖는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소량 구매로 대기업에 비해 약 2배가량 비싸게 사게 돼 원가 포지션이 높게 됨
- 따라서 중소기업의 부품과 원자재를 공동구매해 가격협상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함
- 지식경제부 해외 원자재 구매망 구축 사업과 중소기업청 독자사업의 협의 어려움, 조달청 비축물자 사업 등의 중복사업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구매대행에 관한 관련 조합 등을 운영할 경우 조합의 일괄구매 보증 발행기준 완화와 부품 및 원자재 혁신 구축망 자금이 부족함

실천과제

- 업종별 온라인 구매 클러스터 구축
 - 중소기업들에게 원자재, 부품, 기술, 서비스 구매에 필요한 국내외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공동구매를 지원함
- 협동조합 주도의 혁신 공동구매망 구축
 -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기구(조합 등)를 운영
 - 온라인상에서 대기업 구매 수준의 가격 소싱을 통해 가격 경쟁력 제고
 - 해외 원부자재 및 부품 구매망을 구축

기대효과

- 중소 벤처기업의 부품·소재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 중소·벤처기업의 부품 공급체계 안정화 도모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02

현실진단

- 3D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산재 발생률이 높음. 특히 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산재 발생률이 높음(최고 8배 이상)
- 산업재해로 근로자의 고통이 증가하고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연 17조 원)
-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청년층의 취업 기피를 불러 지속적 인력난이 발생함
- 개별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은 한계가 있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청년들의 문화 감수성과 시대적 여건을 감안한 획기적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함

실천과제

- 클린사업장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작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
 - 기업의 자기 부담을 줄이고, 지원 금액을 늘려 실제 작업환경이 개선이 되도록 함
 - 3D 사업장은 기술을 지원해 작업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

- 산업단지(집적단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오래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
 - 산업현장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결해서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산업현장을 청년들이 문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으로 변신
 - 청년들의 문화, 예술적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활동기회를 제공
 - 빈 공장 등을 예술가들의 활동 공간이나 체육시설 같은 주민 이용 시설로 제공

기대효과

- 밝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산업단지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일으킴
-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와 직업병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쾌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함
-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으로 변화됨
- 청년 인력 유입으로 중소기업 발전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짐
-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지역주민들과 활발히 교류하게 되고 기업 발전의 생태계가 구축됨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 도입

02

현실진단

-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기피로 중소기업은 늘 우수인력 부족 문제에 부딪히고 있음
- 우수인력 부족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은 적은 급여를 주게 되고 다시 우수인력은 기업을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제약 요소가 됨
-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기피는 낮은 연봉, 직장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판, CEO의 미래 비전 부재 등에 기인함
-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 연구인력에 대해 직접적인 급여 보상 등으로 유인할 수도 있으나 이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유인하지 못하는 도덕적 헤이 발생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부 재정 부담의 과다가 우려됨
- 따라서 정부는 기업 스스로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인력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실천과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도입
 - 인력개발 투자, 연구개발 투자, 종업원 복리후생, 급여 수준 등을 높여 근로자에게 자기 자신과 기업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고, 인적능력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정부가 인증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인증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
- 인증기업에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우선 지원
 - 기존의 R&D 자금 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우선 적용해 지원함
 - 법인세 감면 혜택 지원
-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함

기대효과

- 인증기업의 사회적 평판을 높임
- 인력, 특히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문제 해소에 기여함
-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함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

02

현실진단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급여 복지 격차가 매우 크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 인력난과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사회양극화 및 사회갈등이 심화됨
- 그동안 추진해온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만 집중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에는 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빠른 시간 내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임금격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존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저임금과 기본적인 복지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함

실천과제

- ‘중소기업근로자 공제회’ 설립
 -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회를 설립하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
 - 정부 예산과 고용보험기금(중소기업 출연) 출연 및 근로자 출자로 기금을 조성
 - 조성된 기금 중 일부를 중소기업 발전자금 등 활용

-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재단 설립
 - 공제회를 운영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호부조 및 생활안정 사업을 수행
 - 사각지대 근로자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시행
 - 산업단지(집적단지)에 근로자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지원
-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예산 확대와 저임금 완화
 -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복지예산을 늘려 저임금 영세기업 근로자(근로빈곤층)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 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
 - 최저임금 인상(평균임금의 50%)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적용 범위와 지급금을 상향 조정

기대효과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을 직·간접으로 보전해 줄 수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함
- 근로빈곤층이 줄어들고 임금 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대기업과의 격차 완화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양질의 인력 유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 공제회 기금이 중소기업 성장 재원으로 투자돼, 일자리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함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근로자복지시설 확충

현실진단

-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보육·교육·문화 등 복지 인프라가 미비함
- 장시간 근로와 보육료 부담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욕구는 절실하나 중소기업은 보육시설을 갖춘 곳이 거의 없음
- 중소기업 근로자는 비용 부담과 시간 부족으로 별도의 자기개발과 여가생활을 거의 누리지 못함
- 근로자들의 보육·교육·문화 등 복지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기업의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과 운영 부담으로 기피함

실천과제

- 산업단지 등에 직장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포함) 설치
 - 중소기업 집적단지 공유공간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시설비를 지원
 - 공간을 기부채납하거나, 시설 설치가 어려운 산업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함

-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 집적단지(산업단지) 또는 단지 인근에 설치해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
 -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운영
 - 교육 문화 시설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공동 설치하고 근로복지재단과 연계해 운영

기대효과

- 복지 사각지대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서비스가 확충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직장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춤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근로복지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불평등 의식이 완화되고 교육 문화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됨

새 희망의 바람이 골목 구석까지 닿는 자영업자 보호 정책

3대 목표

- 1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경감
- 2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한 행위 규제
- 3 자영업자의
전직, 전업 용이

3개 정책약속

- 1 자영업자의 고비용
구조 개혁
- 2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경쟁력 강화
- 3 정보서비스 및
전직·전업 서비스 강화



자영업자의 고비용 구조 개혁

현실진단

- 임대인의 자의적인 임대료 인상이 자영업자의 생업을 위협하고 있음
- 간이사업자 기준이 현실과 괴리
-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 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높은 가맹점 수수료
- 다수의 자영업자가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실천과제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가칭)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 방지
 - 임대료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
 - 임대차보호법에 이와 관련한 법조항을 신설하고, 임대료 인상이나 신규 세입자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데 기준 지표로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한 임대료기준지수를 개발해 활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안정성을 보장
 - 전통시장에서 상인협동조합의 상가 마련을 지원해 영업안정성을 향상

- 영세사업자의 세금과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사업자 기준 현실화
 - 물가 상승, 카드 사용 활성화로 인한 매출 증가를 감안해 현재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인상
 - 부가세 면제 기준도 현재의 연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
- 카드사, 회원, 중소가맹점의 비용 분담 원칙을 합리화해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최대한 경감(1% 이하)
 - 과도한 마케팅 비용은 중소가맹점이 아닌 카드사가 부담하고, 신용매출로 인한 비용은 카드 사용자가 회원비로 부담하게 하는 등 비용분담 원칙 조정
-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사회공감금융'을 설립
 - 햇살론, 희망흄씨론 등 기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재정비하고 재원을 확충한 '사회공감금융'을 통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사회공감금융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마을금고, 신협, 미소금융 등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게 하는 기능 담당
 - 지역밀착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의 보증 및 이차 보전에 사용
 -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을 담당

기대효과

- 자영업자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임대료, 세금 카드수수료, 고금리 등 4대 고비용 문제가 완화돼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
-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대한 과중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자영업 영위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 이행 가능
-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사회의 중심이 되는 서민·중산층이 튼튼해짐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경쟁력 강화

02

현실진단

- 프랜차이즈 본부의 횡포로 가맹점(31만개)의 경영 악화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및 불공정 행위로 자영업자가 사업할 수 있는 업종 축소
-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가 275만개, 종사자 수가 533만명
- 창업과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진입과 퇴출이 과다
- 영세한 자영업자가 대부분

실천과제

-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가칭) '가맹점연합회'가 프랜차이즈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
- 인테리어 교체, 설비 및 자재의 가격 인상 등 가맹점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해당 (가칭)가맹점연합회가 협의
 -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강화·정착
 - 설비 및 물품은 사양만 제시하거나 원가를 (가칭)가맹점연합회를 통해 공개·협의

-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 영세사업자의 생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함
 -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하는 관련 점포 등에 대한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골목상권 보호 강화
 -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진출한 기존 대기업의 점진적 철수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협동조합을 활성화해 공동 창업을 유도하고, 자영업자와 경쟁하는 사회적기업은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관련 사업 분야로 유도
 - 공동 창업은 자영업의 영세성을 줄이고, 개인의 위험을 낮추는 한편, 조합원들의 노하우 및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
 - 연대보증제도를 가산보증료로 대체하고 추가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사회적 기업이 개별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낮은 물류 등을 담당해 자영업자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이 되도록 유도
- 자영업자에 적합한 사회서비스업을 활성화
 - 육아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문화, 관광, 복지, 환경 등 사회서비스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 강화

기대효과

- 프랜차이즈 본사나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자영업자가 안정적 영업 가능
-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여 골목 상권 보호 강화
- 프랜차이즈 본부가 특정 설비나 잦은 인테리어 변경 요구 불가
- 영세한 자영업자 감소가 기대됨



정보서비스 및 전직·전업 서비스 강화

02

현실진단

- 창업과 관련된 정보가 금융서비스 및 (재)교육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과잉 진입 현상이 발생하고 전업에 도움이 안 되는 등 산업생태계가 열악
- 시장에서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영업에서 근로자 등으로 전직이 어려운 상태
- 창업 실패가 금융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져 재기가 어려움

실천과제

- 광역별로 있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준비 없는 창업으로 인한 실패 위험성 감소
 - 사업 분야 선택, 창업절차 지원, 훈련, 자금조달, 입지분석, 경영진단, 전업, 전직 등 사업 전 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창업과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이 용이하도록 전직자 고용지원금 지원
 -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재창업자는 기존 창업교육 중 일반적 사항을 생략한 재창업 특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 전직을 위한 직업 훈련자에게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해 훈련기간 동안 생계 지원
- 창업에 실패한 경우에도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 보험료 일부 지원 등을 통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외에도 자영업자의 업종별 협회, 조합, 상인회 등을 통한 자발적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 자영업자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 노하우 교육을 지원하는 '장인교육' 실시

기대효과

- 신규 진입이 줄어들고 전직이 쉬워져서 자영업자 간의 과당 경쟁 완화
- 지역의 원스톱 창업서비스 시스템 및 신규 진입시 대출을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이 시장 상황·사업성 등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과잉 진입이 축소되고, 업종별로 자영업자의 수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임
- 경영노하우 교육으로 자영업자의 경쟁력 향상
- 자영업자에서 근로자 등으로 전직 용이
- 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복지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호혜와 협동의 사회적경제

3대 목표

- 1 경쟁사회를 넘어
협동사회로 전환
- 2 복지, 의료, 주거 등
각 부문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 확대
- 3 체계적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

5개 정책약속

- 1 자립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2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보육, 주택, 의료)
- 3 공공조달시장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 4 공익형 청년·여성 인턴제 도입
및 창업 인큐베이팅 강화
- 5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 중심 통합 지원체계 구축



자립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실진단

- 선진국에서는 복지와 일자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시장과 국가의 실패를 보완하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사회 혁신의 수단(소셜 벤처)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EU,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사회적경제 비중은 GDP의 약 4~7%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약 0.04%에 불과함
- 그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으로 단기 창업과 일자리의 양적 확대, 인식개선은 이루어졌으나, 관 주도의 직접적 지원에 치중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정부 의존성이 확대됨
-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중 영업이익 발생 기업이 20% 이내이고, '09년 이후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기업 인력 중 60% 정도가 계속 고용 유지 중
-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 상시적 공동협력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파 시너지 창출 기반이 부족하고, 법, 제도 등 포괄적 지원기반도 미흡함

실천과제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조세 지원제도 개선
 -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법적 지위, 직접지원이 아닌 생태계 조성 지원,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담은 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위상 제고
 - 중장기 사회적경제 육성 로드맵 수립, 사회적경제 영향 평가제 도입 추진
 - 공익 목적 활동증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세 및 중소기업지원 제도 개선
- 공공 유휴자산을 활용한 사회혁신클러스터 조성
 - 지역기반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혹은 지자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역별, 업종별 사회혁신클러스터 구축
 - 광역 단위별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동 입주해 공동학습과 공동 마케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지원체제 마련
- 사회적경제 참여 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한 공교육 교육과정 개편
 -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도입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통합적 지원 정책 수립을 통한 성장 인프라 구축
- 시장경제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고 공정한 환경과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하게 됨
- 사회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 및 업종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과 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 공교육 과정 도입을 통해 신뢰와 협동의 가치 확산, 미래 소비자, 사회적기업가, 협동조합원 육성에 기여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현실진단

-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가 크고 복지, 교육, 의료,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방식이 활용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일자리 창출과 일부 공적 복지보완 수단 등에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음
-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보육 공동체 활성화는 팽창하는 영리형 민간 보육기관의 경쟁 격화, 급식 부정, 어린이 학대와 같은 문제의 방지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현행 재개발 방식은 세입자 뿐 아니라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조차 70%가 추가부담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고, 대학생 주거 문제나, 쪽방촌을 전전하는 주거빈곤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요구됨. 주택 협동조합은 이런 문제, 특히 주택 수요자의 필요와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모델의 하나가 될 수 있음
-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의 1차 의료영역에서 건강문제의 80-90%정도를 해결하고 있고, 의료 생협은 지역공동체 기반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실천과제

-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보육협동조합 확대
 -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지원
 - (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육 품앗이, 공단 및 상가 지역에 공동보육협동조합 설립지원
- 협동조합형 주택공급 방식의 확대
 - 저소득자,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장기 안심주택, 희망 하우스 등에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 도입, 기존 재개발위원회의 협동조합 전환 추진
 - 주택협동조합 설립 지원시스템 구축 및 주택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법, 제도의 개편 추진
-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생협 활성화 지원
 - 현재 15개 설립된 의료 생협의 확대 설립 추진

기대효과

- 보육, 주택, 의료 관련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다양한 협동 조합 활동을 통해 공동체 복원에 기여할 것임
- 의료 생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밀착형 일차 의료 지원시스템의 정착으로 국민 보건 권이 개선될 것이며 공공 의료 지원 비용도 점진적 감소가 기대됨



공공조달시장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현실진단

- 공공 조달시장은 자유경쟁 원리에 입각한 최저가 낙찰제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업 비중이 높고, 2011년도 말 인증 사회적기업 공공구매액은 약 2000억원 (0.2%)에 불과(추정치)
- 사회적경제의 공급능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으나, 적절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확대 가능.
- 서울시의 경우 사회배려기업 공공조달 5% 목표제 시행을 통해 수요 확대를 추진한 결과 2011년 0.06%에서 2012년 500억(1.8%)으로 큰 폭의 공공구매 확대가 예상됨
- 사회적기업 신용대부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약사업인 미소금융재단으로 이관되면서 극심한 왜곡이 발생함. 2010년 미소금융 총 대출금 688억원 중 사회적기업 비중은 2.4%에 불과(16억원)하고, 사회적가치가 아닌 상환능력 중심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실천과제

-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3%로 확대 추진
 - 사회적경제 공급 역량 및 R&D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구매 지원센터 운영
 - 민관 거버넌스형 공공조달 위원회 설립 등 사회적경제의 안정적 공공구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도입
-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시 사회적책임 조달제로 전환
 - 사회책임조달제(EU,2014): 유럽연합은 2001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채택 이후 지역고용, 좋은 일자리, 사회권 노동권 준수, 사회통합, 차별해소 등을 중요 조달 결정 기준으로 고려하는 사회책임 조달 정책 도입
- 서비스 바우처와 장기요양보험 공급처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참여확대 방안 마련
- 사회투자금융공사(투자자금 5조원 조성)를 설립하여 사회적 금융을 확산시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지역공동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금운영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요구되던 틈새시장 개발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보호된 공공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거버넌스에 기반한 공공구매 지원센터와 공공 조달 위원회를 운영하여 구매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R&D 및 시설 지원을 통한 공급역량 강화 기대
- 사회적 금융의 확대는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사회적 투자를 활성화해 사회적경제 규모화와 자립적 생태계 조성 지원에 기여할 것임



공익형 청년·여성 인턴제 도입 및 창업 인큐베이팅 강화

02

현실진단

- 청년, 여성 등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이 단기 처방 위주로 돼 있어, 일시적 취업상태와 질 낮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음
- 청년 세대의 사회적경제 참여 정책은 소셜벤처경연대회와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에 국한되고 있는데, 수혜 규모도 3천명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사전 준비와 경험 없는 참여로 차세대 인재 발굴과 고용 유지가 어려움
- 취업 및 창업 이전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실천적 경험을 축적하는 제도 필요
-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실현과 비즈니스 지속가능성의 동시 추구로 인해 매우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 체계적인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영국의 Young Foundation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경우 18개월,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경우 3년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고 있음

실천과제

- 사회적경제, 비영리기관, 소셜벤처 등의 인턴십을 통해 청년 및 여성 사회혁신 인재를 공동 양성함
-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인큐베이팅 강화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성 중심의 지원제도로 개편 추진
- 사회적 기업 등의 창업 실패시 책임의 사회적분담과 제도전을 위한 정책시스템 지원
- 기술기반형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인큐베이팅 지원
- 경과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 교육 훈련 기관으로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실업자가 사회적기업을 디딤돌로 해 일반기업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기대효과

- 사회통합의 과제와 일자리 문제를 사회혁신 및 지역혁신의 과제와 연결시켜 해결
 -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문제 해결
 - 청년 및 여성들에게 실험과 도전의 환경 제공
- 발전단계와 유형에 맞는 체계적 인큐베이팅, 자원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 명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실직자의 노동능력과 특성에 따른 고용서비스 제공 유형을 다양화 해 서비스 효과 및 사회적기업의 인력 확보 제고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중심 통합 지원체계 구축

현실진단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농어촌 공동체회사(농림식품부) 등 부처별로 분절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으로 비효율 및 소통 비용 낭비가 초래됨
- 현재까지 사회적경제 정책 거버넌스는 대부분이 수립과정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주도로 이루어져서, 중간 지원조직 등 시민사회 역량이 행정의 하위체계로 편입되고, 그 결과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에 커다란 한계로 나타남

실천과제

- 부처간 유사, 연관 사업들간의 통합적 정책 조율 기능 강화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활동을 범 부처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시민사회, 사회적경제계, 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 지역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과정을 공동으로 참여해 결정
- 지역 생태계 조성의 허브 역할을 할 중간 지원기관 육성
 - 행정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지역 전문가 육성 등

기대효과

- 부처간 통합적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통해 간막이 행정과 부처간 중복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 거버넌스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경제 성공요인임. 지역 사회적경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뢰와 협동이라는 사회적자본이 형성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사회적경제는 질적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함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

3대 목표

- 1 서민에게는 주거안정을,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안정을 보장
- 2 공평과세 실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달성
- 3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을 높여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3개 정책약속

- 1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보호
- 2 고액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로
공평과세 실현
- 3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으로
정부의 도덕성 제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보호

현실진단

- 지금까지 사유지 강제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업자가 활용토록 했고, 정부 직접 건설분도 임대보다는 분양에 치중했음
-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에 크게 미달
- 2010년 이후의 전세대란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와 급진적인 도시재생 정책이 야기한 결과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성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실천과제

-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 달성
 -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서민들의 생업 여건에 맞는 입지 선정, 평형 다양화, 임대료 차등화 등을 도모
 - 정부가 도심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정부 주도형 임대 사업(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을 활성화
 - 집주인에게 세금감면, 집수리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장기로 임대하게 하는 계약임대 방식을 활용
- 공공택지에서는 공공분양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에 주력
 - 서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보금자리 주택 중 분양주택의 공급은 중단
 - 앞으로 정부가 새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는 가능한 한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과 토지임대부 주택 위주로 건설
- 실질적인 소셜 믹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실행
 - 공공택지에서 한 단지 안에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섞어서 건설함으로써, 현재 '지구 내 혼합'에 그치고 있는 소셜 믹스 정책이 '단지 내 혼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를 정비해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
 - 적절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적절한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주택 관리의 중요한 임무로 포함
 - 임차인대표회의나 임차인조합과 같은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임차인의 관리 참여를 확대
- 공공주택(임대, 토지임대부)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협동조합 참여 장려
 - 공공임대주택 협동조합에 단지 관리·보수·운영 권한과 단지 내 상가의 운영·관리 권한을 부여
 - 공공토지임대부주택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공공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게 함



- 대규모 주택멸실을 방지하는 재개발 방식 지원 및 확산
 - 도시 재생 정책의 속도 조절과 방식 전환을 통해 기존 주택의 멸실 속도를 늦추고 재개발 지역에서 소형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도록 하는 재개발 방식을 적극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힘의 비대칭을 해소
 -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자동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과다한 인상을 제한하여 최소 4년 동안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보장
 -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금을 증액
-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확대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곤경에 처한 세입자 지원
-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제도) 본격 시행
 - 2013년 시범사업으로 1만 가구에 지급한 후, 2017년까지 20만 가구로 확대
 - 독거노인 등 주거 조건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들께는 우선적으로 지급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영업자들의 영업안정성을 보장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확대
 -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상한을 하향 조정
 - 재건축 등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의 매물비용 중 일정 부분을 임대인이 보상
 -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금을 증액
- 전통시장 등 판매시설에서 상인협동조합의 상가 마련을 지원해 영업안정성을 제고
 -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인협동조합을 설립해 건물을 매입할 경우, 정부는 토지를 매입해 상가 마련을 지원
 - 상인들에게 토지를 장기사용토록 하는 대신 합리적인 임대료를 납부케 함

기대효과



- 건설업자들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막대한 토지 개발이익을 누리는 일은 어려워지고, 서민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될 것
- 토건국가형 경기부양이 아니라 서민친화형 경기부양 효과가 발현될 것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구축돼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불안이 해소될 것



고액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로 공평과세 실현

현실진단

-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부담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세(보유세+거래세) 중 보유세의 비중이 너무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음
- 특히 상가·빌딩의 부속토지에는 주택과 일반 토지보다 훨씬 가벼운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재벌 및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향유
-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한시 감면 및 유예 조치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실천과제

- 재산세 제도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함
- 고액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 강화
 - 재벌 및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집중 보유하고 있는 별도합산 토지(상가·빌딩의 부속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 과세상 불공평을 시정
 - *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인별 합산 보유가액(공시지가 기준)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므로 서민이나 중산층과는 무관

- 과표 구간 조정, 세율 인상,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해 2008년 완화되기 전 수준보다 무겁게 과세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및 잡종지)의 보유세 부담은 완화되기 전 수준으로 회복
 -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나대지나 잡종지를 과다보유한 사람들은 투기 목적이 있다고 간주하여 과세 수준을 2008년 완화되기 전 상태로 복원
- 추가 세수의 용도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
 - 세수와 복지지출의 연결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 비거주용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완화
 - 보유세 강화를 거래세 완화와 묶는 패키지형 세제개편의 일환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일반과세로 전환
 - 토지 취득세 세율은 인하

기대효과

-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추진하므로 투기적 보유가 억제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
- 재벌 및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상가·빌딩의 보유가 아니라 생산적 투자를 통해 이윤을 얻고자 노력하게 될 것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으로 정부의 도덕성 제고

현실진단

-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고위공직자일수록 가용 자금과 정보가 많아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경제정책과 각종 부동산정책이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에 따라 수립·변경된다는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 존재

실천과제

- 부동산백지신탁제의 대상
 -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 위 대상자의 배우자
 - 제도 시행 후 대상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 부동산백지신탁제 대상자의 의무
 - 대상자는 보유 부동산에 대해 실수요임을 입증해야 함

- 실수요임을 입증하지 못한 부동산(이하 '대상 부동산')은 취임 후 9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취임과 동시에 수탁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함(시가 상당액 합계가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제도 적용을 면제)
- 대상자는 취임 이전에 대상 부동산의 처분계획(자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공표해야 함
- 백지신탁 편입 회피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위장 처분할 경우 처벌함
- 부동산 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고위공직자 소유 부동산의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부동산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설치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중 3인은 국회의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
 - 실수요 여부는 거주, 영업, 기타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속 부동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 수탁기관의 역할
 - 수탁기관은 '대상 부동산'의 관리·처분 및 매각금액의 운용 등을 담당
 - 수탁기관은 '대상 부동산'을 수탁 후 6개월 이내에 최고가 매각의 원칙에 따라 매각하되,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 기한 연장 가능
 - '대상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그 매각금액을 운용하고 신탁 해지 시에 신탁운용금을 퇴직자에게 지급
 -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 추진 과정에서 대상자가 사임할 경우, 또는 '대상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현물로 반환
 - 단, 현물 반환의 경우, 신탁 해지 시 시가 상당액과 신탁 기간 중 수익(임대료 등)을 합한 금액이 신탁 당시 시가 상당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
- 공직 취임 후 고위공직자 부동산 관련 행위 규제
 - 고위공직자 재임 기간 및 퇴임 후 2년 동안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의 신규 취득을 금지

기대효과

-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향상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회복될 것
- 고위공직자 후보 인재풀이 넓어져서 국정 운영이 원활해질 것
- 청렴한 고위공직자들이 공정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전통이 확립될 것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과학기술

4대 목표

- 1 혁신경제를 이끄는 과학기술
- 2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과학기술 행정
- 3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
- 4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8개 정책약속

- 1 정부 R&D 지원은 선도형 산업, 중소·중견 기업, 기초 과학에 집중
- 2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연구개발 사업 및 관리 시스템
- 3 정부 출연(연)의 역할 정립과 책임 운영 시스템
- 4 대학 연구는 소수 집중에서 다수 참여 지향
- 5 부처 혁신체제 구축과 의사결정에 민간참여 확대
- 6 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 지원
- 7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 8 남북을 하나 되게 하는 과학기술



정부 R&D 지원은 선도형 산업, 중소·중견 기업, 기초 과학에 집중

현실진단

- 그간의 정부 R&D 지원은 추격형 산업, 대기업, 응용과학에 집중되어 왔으나 앞으로의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에는 부적절
- 혁신경제의 견인차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나, 대부분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저부가 가치 제품의 생산과, 낮은 이익, 이에 따른 연구개발 능력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상태
- 대기업의 민간 R&D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고, 자체적으로 자원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정부 R&D 자원은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그리고 미래 산업을 위한 기초연구에 집중하는 정책의 틀이 필요

실천과제

- 정부 R&D 지원은 선도형 산업과 기초과학,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집중
- 은퇴 전문가들이 기술과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고경력 전문가 지원 사업을 확대
- 중소·중견 기업에게 연구 장비, 기술·특허 정보 등 출연(연)이 보유한 자원을 개방
 - 출연(연) 인력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주할 수 있도록 출연(연) 운영 시스템 개선
- 중소·중견 기업의 민간 R&D 세액 공제 확대 추진
 - R&D를 통해 고용창출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세액 공제

기대효과

- 국가 R&D 예산의 추가 확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며, R&D 금액, 인력, 정보, 장비 등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어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중소, 중견 기업을 대기업과 함께 국가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 경제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성장하게 함
- 미래를 이끌어 갈 선도형 산업과 기초 과학을 튼튼히 하여 장기적 국가 경쟁력 제고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연구개발 사업 및 관리 시스템

02

현실진단

- 다수 부처가 경쟁적으로 R&D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산학연 연구 수행 주체 간 구분 없는 수주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과도한 경쟁과 양극화, 피로도 증가. 소형과제, 중·대형과제, 기업 관련 과제 등이 전문적 구분 없이 혼재되어 발주되고 있음
- 단기간, 소규모, 결과 지향 위주의 연구 발주, 획일적 평가제도와 경직된 관리 시스템은 연구 몰입도를 저하시키고 도전적·창의적 연구를 방해
- 상업화를 목표로 다수의 정부 R&D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장과 유리된 대학 및 출연(연)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어 성과 창출에 한계

실천과제

-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위주로 R&D 지원의 축을 전환하고, 세계 최고의 연구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규제’ 중심의 R&D 관리 시스템을 ‘자율과 책임’ 중심의 R&D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
 - 목표, 규모, 기간 등 과제 특성에 맞게 다양한 평가 지표와 평가제도를 도입
 - 성실 연구에 대한 실패는 과감히 용납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도입
 - 연구비 사용 등에 관한 경직된 규제 완화
- 그간 혼재되어 있던 산·학·연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
 - 산·학·연 연구수행 주체별 사업과 공동사업으로 구분하고 유효 경쟁을 도입
 - 대학은 인재 양성과 혁신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공공기관인 출연(연)은 기업과 밀착하여 혁신경제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
- 기술 상업화의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업화 연구는 기업 중심으로 추진
 - 연구 기획, 공동 연구자 선정, 연구진도 관리, 상업화 계획 등을 기업이 주도

기대효과

- 정부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미션별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혁신 체계를 강화
- 연구 몰입도가 높아져 연구의 질이 향상되고, 연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어 도전적·창의적 연구 확대
- 기술의 상업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시킴



정부 출연(연)의 역할 정립과 책임 운영 시스템

현실진단

- 정부 출연(연)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최근 정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기관이 아닌 개인단위로 과제를 수주하는 PBS(Project Based System)로 인해 조직적 시너지 창출이 미흡하고 각 연구자가 다수의 소규모 과제를 수행하여 연구 몰입도 저하
- 경직된 평가 시스템은 자율성 확보와 창의적,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에 한계로 작용

실천과제

- 정부 출연(연)은 중소·중견 기업 지원,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 거대과학 연구를 수행하도록 역할 정립
- 단기적 성공률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장기 미션형 출연금의 정착
- 책임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정부 독립성 강화
 - 정부와 출연(연)간 접촉 창구를 단순화하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
 - 기관으로서 조직적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투명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 평가 시스템 도입
- 2년 이상의 동일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기대효과

- 장기 미션형 과제의 수행과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용,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선도형 경제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지속성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
- 출연(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구 효율성을 증대하여 혁신 경제에 이바지



대학 연구는 소수 집중에서 다수 참여 지향

02

현실진단

- 경제 성장을 목표로 정부가 R&D 투자를 특정 분야에 집중시켜 소수의 이공계 대학 연구자가 전체 이공계 대학 연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 집중이 발생하고 있음
- 대학은 우수인력의 활용도가 낮고 인재 양성과 지식 창출·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
- 연구 의욕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다수의 연구자들에게 연구 자원이 주어지지 않아 대학의 자생적 혁신 역량 저하

실천과제

-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연구비의 대상을 확대
 -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식 창출 중심으로 평가
 - 기술 축적과 진보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과제 위주로 운영
- 교육-연구 선순환을 통해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의 역량을 향상
 - 대학 여건에 맞추어 교육과 연구간 적절한 균형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대학 및 교원 평가시스템을 개선
 - 공학교육인증 등 형식주의 보다는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 확대
 - 기술 경영, 기술 정책 등 융합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기대효과

- 많은 대학 연구자들에게 연구 자원이 배분됨에 따라 다양한 혁신의 싹이 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젊은 연구자들에게 연구 환경 정착의 기틀이 마련됨
- 연구 주제의 수직적 결정을 지양하고, 다양한 혁신 결과물들이 도출되는 보다 효율적이며 수평적인 혁신 시스템을 통해 대학의 연구를 활성화시킴
-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우수 인재 양성 환경을 조성



범 부처 혁신체제 구축과 의사결정에 민간참여 확대

현실진단

- 개별 부처 관점의 분절된 R&D 사업으로 유사·중복 투자, 칸막이 등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종합조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2012년)되었으나 예산권 등 핵심권한의 부재와 위원회라는 근본적 한계로 한정적 역할
- 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부처별 정책-R&D 사업 간 정합성 확보가 필수이므로 종합 기획·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
- 기존의 정부 주도 의사결정은 전문성 논란을 초래하여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데 제한요인으로 작용

실천과제

-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R&D 수행부처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부처를 설립(가칭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국가CTO)
 - 사람중심 융합형 혁신 R&D를 총괄하며 예산권을 법으로 보장하여 실질적인 권한 부여
- R&D 수행부처는 부여된 임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처마다 CTO를 도입(지방정부 포함)
 - 부처별로도 기획·조정 능력 등의 전문성 제고를 추진
- 정부 의사 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기대효과

- 범 부처 차원의 국가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구축되어 정부 차원의 비효율이 개선되고 지방정부에도 CTO를 도입함으로써 부처 간, 지역 간 분산된 혁신체제 일원화
- 예산권을 확보함으로써 단순히 개별 부처가 추진하는 R&D 사업의 미시적 조정이 아닌 전문가에 의한 거시적 관점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조정이 가능해짐
-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 전문성이 제고되고 수평적·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향상됨



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 지원

02

현실진단

- 경제 변동기마다 과학기술인들이 직장과 직업의 안정성을 우려하고 젊은이들의 이공계 기피 및 이탈이 날로 심해짐
- 경제의 급속한 양적 팽창 정책 속에서 과학 기술인들은 경제 건인의 주체로서가 아닌 경제 요소로서 간주되며, 효율성 극대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 대상이 되어, 결국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연구 의욕 또한 저하
-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과학 기술인 배양이 필요함

실천과제

- 과학 기술인이 전문분야 이외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개발
 - 과학 기술 정책뿐 아니라, 모든 국가 정책 수립과정에 과학 기술인 참여 확대
 - 중소기업 등에 기술 자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확대
-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 환원(65세)을 포함한 가칭 '플래티넘 인재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은퇴 후에도 고급 지식과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젊은 과학 기술인들과 여성 연구자들을 위한 가칭 미래개척연구 추진
 - 현실적으로 기존 연구자들과의 공정경쟁이 어려운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 기회 확대
- 과학 기술인에 특화된 전문 경력 지원 센터 설치
 - 과학 기술인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고 대학·출연(연)·기업 간의 이동 통로등을 확대
- 과학 기술인들을 위한 창의적 능력 향상을 목표로 기술 경영, 기술 정책 등의 융합적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대효과

- 과학 기술인의 경력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은퇴 후에도 전문 지식과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사회적 지식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됨
- 안정된 연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결과물들이 더욱 많아지고, 연구인들의 자긍심이 고취됨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현실진단

- 삶의 질 향상, 공공복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등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
-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산업발전의 도구로서만 간주되면서 일반 국민의 삶과 유리되어 왔음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따뜻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절실함

실천과제

- 고령층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기술'의 지원 확대
 - 건강, 안전, 안심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R&D 및 상용화 추진
- 기후변화, 재난재해, 질병 및 기아 등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고 저개발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 연구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관계부처들과 협의하여 과학기술과 교육, 의료, 건설, 금융 등이 포함된 통합형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 과학기술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의 초·중·고, 과학관 등에 가칭 '생활 과학 연구소(Living Lab)' 설치 운영
 - 우리 생활이나 지역사회에 숨어있던 과학기술을 밖으로 끌어내 쉽게 이해하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전국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지역기반 생활 과학 연구소를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 인문·사회, 예술·문화, 과학기술과의 다양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기대효과

- 삶의 질 향상, 공동체 문제 해결, 국제사회 위상 제고 등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
- 생활 주변에서 과학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제고
-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의 보급 등 과학문화의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저변 확대



남북을 하나 되게 하는 과학기술

현실진단

- 새로운 남북파트너십 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역할 증대. 공생과 상생의 가장 확실한 방책 가운데 하나가 과학기술이라는 인식. 탈 이념화아래서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심화 필요성 점증
- 북한의 식량, 환경, 산림, 광물자원, 공업시설 및 항만 등 전방위 협력 가능성 상존. 양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윈-윈 협력을 하는 성공 모델이 없음
- 북한, 중국, 러시아가 얽히는 철도망, 가스망 등은 그 규모로 봐서 남북의 기술과 자본의 패키지 협력 필요

실천과제

- 북한과 함께하는 한반도 녹색혁명 실현과 식량과 산림문제 동시 해결
 - 산지, 벽지, 냉지 등 낙후된 지역에 첨단기술을 통한 식량 혁명 추진
 - 황폐화한 산림을 복원하는 기술협력과 탄소배출권 등을 통한 경제협력 전개
 - DMZ와 백두대간의 생태연구와 보존사업 전개
- 남북 청년과학기술자 교류와 과학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 남북이 관계하는 각종 망사업(통신망, 전력망, 가스망, 철도망 등)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연구를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북방경제권 과학기술포럼'을 설치

기대효과

- 그동안 주춤했던 식량 기술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북한의 식량난을 덜고, 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북한 산림면적 916ha중 18%인 163만ha가 황폐산림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개간단지(다락밭)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산림녹화는 조림, 탄소배출권, 소득증대, 에너지 확보, 농업 확대 등 다방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음
- DMZ와 백두대간은 세계 생태연구의 장으로서 가치가 크지만, 적절한 보존을 전제로 생태관광자원으로서도 기대됨
- 중국의 동북3성 및 러시아 연해주-시베리아-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철도망과 에너지망이 건설되면서 기술협력과 기술수출의 가능성이 커져 한국의 새로운 기회로 부상 기대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1.
격차를 해소하는
창의·희망 교육

2.
시대를 바꾸는
창조적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는 창의·희망 교육

3대 목표

- 1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존중받는
교육 실현
- 2 창의와 소통과
혁신을 통한
교육체계 개선
- 3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 실현

8개 정책약속

- 1 학벌 철폐와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 혁신
- 2 창의·개성을 갖춘
공교육을 회복해
사교육비 경감
- 3 국가의
등록금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기회 균등 실현
- 4 빈곤·소외계층에게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시해
사회통합 실현
- 5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6 삶의 회복을 보장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 7 학생·교사가 중심인
스마트교육 실현
- 8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학벌 철폐와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 혁신



현실진단

- 대학서열화와 이에 따른 입시경쟁 과열은 공교육 파행과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초래
- 지역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으로 교육 격차와 국토 불균형이 심각
- 극심한 학벌의식 팽배로 취업, 승진 등에서 불공정과 부정이 만연함

실천과제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대학 육성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성 확보
 - '거점국립대학'의 지정 및 육성: 연구 분야의 특성화 및 연구중심 대학원 활성화를 통하여 우수 대학으로 육성
 - '특성화 혁신대학'(국/사립)의 지정 및 육성: 교육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취업 및 창업과 연계함으로써 대학서열화를 대폭 완화
 -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육성: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 국가에 의한 책임관리 체제 도입
- '지역고용할당제' 실시와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
 - 공공기관에서 지역대학 졸업자 채용을 유도하고, 점차 대기업과 여타 민간 기업으로 확대 적용해 인센티브 부여
- '차별금지법' 제정
 - 대학입시나 취업할 때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출신지, 성별이나 피부색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대학이나 직장에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

기대효과

- 대학서열화 및 지역격차 해소
- 대학입시 경쟁 과열과 사교육 성행을 막아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으로 받는 고통을 획기적으로 감소
- 능력에 따라 취업, 승진이 이루어지게 하여 공정과 정의사회의 바탕을 마련
-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해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교육의 활성화 달성
- '거점국립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국/사립)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혁신을 주도



창의·개성을 갖춘 공교육을 회복해 사교육비 경감

현실진단

- 현재는 초6, 중3, 고2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시행으로 인해, 이를 대비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교육을 파행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
- 고교 서열화, 교육내용의 획일화, 계층 간 불평등 문제의 심화와 일반고의 위기 현상을 초래
-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창의성과 지속가능한 실력 배양에 어려움
-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넘어 출제되는 대학별 고사, 수시로 바뀌는 복잡한 대입전형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심각

실천과제

- ‘수평적 고교선택제’와 ‘자율진로탐색 교육과정’ 도입
 - ‘선지원 후추첨’ 방식 도입 : 외교, 국제고, 자사고를 학교의 의사에 따라 존속시키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전·후기를 통합함
 - 다양한 직업/진로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과목선택권과 학점제를 도입
 -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취업자는 4년간 병역의무 연기제 도입

- ‘학교공교육지원법’ 제정
 - 교사 중심의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권을 강화함
 - 질적평가 방식의 학생평가제도를 개선함
 -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여 개별맞춤교육이 가능하게 함
- 국가수준 최소 달성 교육목표의 실현(중기 정책)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국가수준 최소 달성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했는지 여부만을 판정하는 간소한 기초학력 도달평가만 실시함
 - 전인적·실천 연구자로서 교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선발 체제를 개편함
- 대입전형의 간소화와 대입경쟁의 공정화
 - 대입전형의 종류와 명칭을 4가지로 간소화함(수능전형, 논술전형, 내신전형, 입학사정관전형)
 - 학생부 이외의 각종 스펙 자료 제출을 금지함
 -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명확히 관리함
 -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도입 : 본래의 취지와 장점을 회복하고, 공공성을 높여 공교육 혁신을 유도함
 - 계층·지역 등을 고려한 기회균등 선발인원을 20%까지 확대
- 학원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대책 마련

기대효과

-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혁신해 고교간 차별적 관계를 해소하고 학생간 양극화를 해소함
-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공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교생활 충실도와 잠재역량 평가 중심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함
- 기초학력 책임 교육으로 사교육 경감을 유도함
- 학생들의 자신의 관심사 몰입과 잠재력 개발을 통해 학교내 폭력 및 왕따 현상 해소
- 교사가 교육과정의 운영과 평가를 주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충실도를 높이고, 상위 극소수만이 아닌 모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 제고



국가의 등록금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기회 균등 실현

현실진단

- 공공재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고, 고등교육 이상은 교육의 혜택을 받는 민간기업과 학생의 책무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고교 수업료 지원 혜택 대상에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여전히 제외된 상태
- 세계 2위의 높은 대학등록금 수준과 대출 연체로 인해 청년신용불량자(2012년 8월, 1만4360명)가 양산되고, 취업도 어려워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삶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

실천과제

- 고교 무상교육 순차적 단계로 실시
 - 기본 학교교육비(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를 포함해 교과서와 학습자료비 등을 국가 부담
- '청년 안심등록금제'('반값등록금' + '학자금신용보증기금')
 - '반값등록금'을 국공립 대학 모두 국가가 부담함
 - '반값등록금' 단계적 수혜 대상 : 소외/취약 계층 자녀, 전문 직업대학 체제를 갖추는 전문대학(2014), 지방대 이공계 확대(2015), 지방대 전체 확대(2016), 수도권 전체 확대(2017)
 - 등록금의 나머지 부분 :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장기 저리로 대출
-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자구노력 및 기업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
 - 대학은 산학협력을 의무화하고, 기업은 대학재정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

기대효과

- 공공재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함
- 고등학교와 대학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공립 및 사학의 건전성과 공공성 확보
- 대학과 산업계가 좀 더 긴밀한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해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
- 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에 매진하도록 하여 미래 사회 인력으로서 우수성을 확보
-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돼 취업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끊어주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줌



빈곤·소외계층에게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시해 사회통합 실현

현실진단

- 경제력 격차(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등의 소외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점차 심화
- 취약·소외집단(장애아 특수교육,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교육 소외와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복지 차원의 대응이 절실
-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학교교육에 뒤처져 중도 포기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한국 사회에 동화 혹은 두 문화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병행할 필요가 있음

실천과제

- 사회통합 실현 차원에서 교육복지를 지원할 관련 법 및 시행령 보완
 -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아교육법에 통합교육(특수교사 양성, 진로/직업상담, 부모교육 등) 포함
 -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균등 입학 전형을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함
- 통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 방안 마련
 - 관련 학교 구조의 변화를 위한 교육청 및 학교행정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외계층 자녀(농산어촌, 빈곤, 저소득층) 교육 대상자 등에 대한 조기 파악
 - 농어촌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작은 학교에 대한 회생책을 강구(초중등통합, 도·농간 상호협력체제 구축 등)
- 맞춤형 균형 교육복지 교육프로그램 구축
 -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 구축
 - 소셜미디어 활용 포함한 다문화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다문화가정 학생과 미등록 이주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내용을 개선함

기대효과

-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기회평등을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아시아지역 교육·문화를 리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교육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의 교육복지를 확대함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현실진단

- 승자독식의 경쟁, 물질만능주의, 공정한 과정을 무시한 목표달성 추구 등의 사회문화를 인정, 사회적 가치, 삶의 여유 등을 지향하는 문화로 전환이 시급함
- 중학교 학생들의 정체성 미확립과 성적 저조로 인한 패배감이 만연함
-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 최근 1년간 피해율(18.3%), 가해율(15.7%)
- 최초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학교폭력이 집단화하는 경향을 보임
- 학교폭력이 휴대폰 문자, SNS 등을 통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청소년 자살률 증가 : 15~19세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실천과제

- 폭력과 자살 예방을 위한 학교와 가정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전반적인 연계 대책 마련
 -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아닌, 개인·가정·학교·사회구조와 문화 및 가치관 등 유기적 관계에서 풀어야 함
 - 공적 가치(자유, 평등, 박애, 공정, 공공 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비폭력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함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학교 내 '소통과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마련과 관리 대책 마련
 -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문화 정착을 지원함
 -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
 - 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적부 기록을 징벌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함 (졸업 시 삭제)
 - 초·중학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위기학생 지원 시설을 운영함
 - 교사양성 프로그램 개선과 집중 연수를 통해 교사의 상담과 직무역량을 강화함
- 학교 안팎 연계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청소년지원센터를 확대함
 - 학교 관리자와 교사·학부모·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함
 - 긴급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경찰,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등)

기대효과

-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는 학교 문화가 정착됨
- 예방·대처·회복 관련 일자리가 창출됨
- 지역사회 공동네트워크 구축으로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는 등 사회통합 효과가 있음



삶의 회복을 보장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현실진단

- 노인인구 비율이 11%(2010년 기준)에 이르렀으나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율과 참여 프로그램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임
- 2011년 평생학습 참여율은 32.4%로 대학진학률의 절반도 안 되며, 대학진학률보다 평생학습참여율이 높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음

실천과제

- ‘시민개방대학’ 운영
 - 기존 전문대학 중 일부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함
 - 대학과 민간 평생교육기관이 MOU를 맺어 다양한 기관의 이수 학점을 통합·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함

- 온·오프 연계 평생학습체제 및 N-스크린형 평생학습체제를 구축
 -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확대·강화로 개인 맞춤형 평생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함
 - 인터넷 기반 EBS 방송을 활용함
 - 평생학습 교육과정 : 직업노동교육, 평생교육, 영어학습, 부모교육, 예비부모 교육 과정을 개설함
- 100세 시대를 위한 ‘제3세대 대학’ 설립
 - 은퇴자 취업교육, 노년기 인문교양교육 및 재무설계교육, 취미교양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함
 - 기존 평생교육시설, 노인대학, 방송통신대 평생학습관 시설을 적극 활용함
- 교육·복지·일자리의 융합적 전략으로 교육 불안을 해소
 - 지역거점대학 및 특성화 혁신대학, 청년안심등록금제, 지역고용할당제, 균형적 고용법 등의 연계 체계를 강화함
 - 직업진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교육, 취업상담 및 알선 지원 서비스 업무를 일원화한 (가칭) ‘취업능력개발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함

기대효과

- 국민들의 사회 적응성과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함
- 학교교육에서 배제된 학생을 조기발견하고 교육청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책임교육을 강화함
- 모든 계층(주부, 노년, 근로 취약계층, 해외 한인교포 등)이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주기와 친화적인 평생교육체제가 구축됨
- 교양 차원의 교육을 넘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기를 제공함
- 소셜네트워크나 PC를 활용한 스마트교육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학생·교사가 중심인 스마트교육 실현

현실진단

-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공교육에 접목시키려는 의지와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과 교사에 의한 활용이 적어 예산 낭비를 초래함 (예: 에듀넷, 초·중·고 'CD 전자 교과서' 등)
- 관 주도적인 하향식 스마트교육 정책의 수립과 진행이 불러오는 폐해가 큼
- EBS-수능연계 출제(70%)로 인해 교사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고 교과서가 외면당하며, 수업이 문제풀이식으로 전락함

실천과제

- 관 주도의 하향식에서 학생·교사가 중심인 창의·통합형 스마트교육으로 전환함
 - 문제해결형 논술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식 운영에 필요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함
 - 온라인 기반 지식 커뮤니티에서 루브릭 평가지표의 공동개발을 지원함
 - 외부 환경의 변화(예: 태블릿 PC의 보급, SNS 생태계 확산)가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행연구를 강화함

-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스마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교육 소외를 경험하는 사회적 소수자와 장애인, 학습 부진아를 위한 맞춤형 스마트교육 프로그램 개발
- 스마트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재설계
 - 교육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개방교육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체제를 제도화해 학교 현장의 자료 접근성을 높임
 - '스마트 교수·학습 센터'를 만들어 교육자료 개발과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에듀팟(Edupot)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보완할 수 있는 공교육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함

기대효과

- 스마트 교육이 고차적 사고력(창의·통합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 협동협력 학습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 찾기와 처리능력 등) 개발 기여
- 국내외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기회 확대와 더불어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접근성 제고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현실진단

- 일관된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절실함
-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이 민주적 합의에 기초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증대함
- 교사/교수-학생-학부모 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주체들은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왔음

실천과제

-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 교원(교사와 교수), 학부모, 학생,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함
 - 교육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정책으로 반영함
 -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 개발과 대통령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등을 논의함
 - 교육행정의 민주화·현장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교육 현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함

기대효과

-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교육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향을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음
- 교육주체 간 협력 체제와 활발한 소통 구조를 조성함

시대를 바꾸는 창조적 문화예술

4대 목표

- 1 모두가 만들고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 2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신나는 세상 만들기
- 3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
- 4 전통에서 배우고 세계와 대화하는 문화예술

11개 정책약속

- 1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신장
- 2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예술의 자생성 확보
- 3 문화예술 인프라의 구축과 내실화
- 4 문화산업 분야 경제민주화 실현
- 5 문화예술인의 노동조건 개선
- 6 문화예술 성장 단계별 인큐베이팅 시스템 마련
- 7 문화예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의 융복합 활성화
- 8 문화예술 유관기관의 거버넌스 체제 강화
- 9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 10 남북 문화예술과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
- 11 문화다양성을 위한 협력과 연대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신장

현실진단

- 문화예술의 사회적 중요성에 부합하는 문화기본법 마련이 요구됨
- 필요한 문화예술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 확보가 절실함
- 문화예술의 존립 기반인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필요성
- 입시위주 교육, 기능습득 위주 문화예술 교육으로 인한 창의성 위축
- 문화예술로부터 배제된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 기본권 보호가 필요함

실천과제

- 문화권 신장을 위한 문화기본법 제정과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 문화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담은 문화기본법 제정
 - 공교육 과정 문화예술교육 강화와 문화예술 평생교육 활성화
 - 생활공간과 일터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 소외와 배제가 없도록 계층·지역·세대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
 - 맞춤형 문화센터 설립과 운영 지원
 - 장애인 문화 접근권(배리어 프리) 보장 의무화

- 임기 내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확대
 - 향유·참여·창조하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 국가나 정부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 소송 금지
 - 상업적 목적의 저작권 침해와 순수 향유 목적의 저작권 공유 구분

기대효과

- 문화예술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적, 철학적, 문화적 토대 마련과 예산 확보
- 표현의 자유 보장을 통한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창의성 증진
- 문화적 창의성과 감수성의 향상을 통한 창의역량 확보와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격차 해소와 보편적 문화권의 실현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예술의 자생성 확보

현실진단

- 지역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 육성할 수 있는 기본법인 '지역문화진흥법'의 부재
- 양극화, 수도권 집중화, 경쟁의 가속으로 인한 공동체와 생활문화 영역의 파괴
- 행정편의주의, 정량적 성과주의로 인한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정책의 경직성
- 구(舊) 도심과 신(新) 도심의 문화격차, 구 도심의 우범지역화, 구 도심의 유희 공간 증가와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실천과제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
 -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 활동 강화
 - 지역공동체 만들기와 연계한 문화예술 활동 권장
 - 주민자치센터 등 생활권 단위 문화시설과 관련 자원 활용의 체계화와 생활문화 정책의 효율성 제고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경제 기반 확장
 - 청년, 경력단절 여성, 시니어 등이 생활권 문화 활동을 통해 공동체 기반 소규모 창의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주역이 되게 하는 지원체계 구축
- 문화예술을 접목한 구 도심 재생
 - '문래예술공단' 등의 사례처럼 구 도심의 현재 모습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해당 공간에 차별적 문화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획과 컨설팅 체제 구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합리적 개편과 함께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제도 도입
 -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과 프로그램 지원
 - 다양한 도시재생과 도시 활성화 모델 개발
 - 지역의 구도심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 확보

기대효과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 완비
-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 공동체의 복원과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의식 제고
- 문화활동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문화-경제 네트워크 생성
- 대안적 도시재생 방안 마련



문화예술 인프라의 구축과 내실화

현실진단



- 문화예술 인프라의 양적 증가를 뒤따르지 못하는 질적 운영 영역
- 새로운 세대의 흥미와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공공 문화기반시설 운영체 계 마련의 필요성
- 시민의 건강한 삶은 교육·복지·문화·경제의 총체성이 반영되는 공공의 문제

실천과제



- 공공기반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
 - 다양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
 - 불필요한 자격증제도(ex. 문화예술교육사, 문화복지사 등)의 폐지
 - 문화예술 전문 단체, 사회적 기업, 메세나 활동 민간기업 등과의 참여형 파트너십 강화

- 지역문화 허브로서의 도서관과 영상미디어센터 확충과 활성화
 - 향유, 교육, 창작의 일체화가 365일 지속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
 - 도서관 중심의 지역 지식공동체와 스토리텔링 클럽 만들기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확충과 미디어교육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향유, 창작 활동의 질 적 향상)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
 - 엘리트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 확대
 - 공공 스포츠센터 운영과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
 - 엘리트, 생활, 학교 체육의 연계활동 확대 지원
- 예술영화등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확대

기대효과



- 공공문화기반시설의 합리적 운영
- 시민들의 보편적 문화 향유권 보장
- 미디어 활용능력 배양을 통한 미디어 격차 해소
- 여가문화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문화산업 분야 경제민주화 실현

현실진단

- 문화산업분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
-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대규모 유통회사(전략적 투자자)에 의한 문화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독과점 가속화
- 한정된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으로 인한 문화다양성의 상실과 문화생태계 파괴

실천과제

- 문화산업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문화산업 독점규제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집행 강화
 - 문화산업 공정거래 지표 개발
 - 투명한 문화산업 유통 시스템 구축
 - 가치사슬별 수익 구조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제고
 - 우리 실정에 맞는 수익배분 구조 마련

- 저작권의 합리적 관리와 저작권 활용 수익 분배체계 구축
 - 창작자, 유통전문회사, 소비자(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스러운 가운데 저작권 수익 배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게 하는 환경 조성
 - '문화콘텐츠유통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부가 콘텐츠의 유통현황을 공개해 유통사와 생산자 사이에 정당한 이익이 분배되는 환경 조성

기대효과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콘텐츠의 생산 촉진과 유통 채널 확보
- 콘텐츠의 다양성, 문화산업 운용 체계의 합리성 확보를 통한 문화산업의 균형 발전
- 문화콘텐츠의 공정거래를 통한 문화산업 전반의 창의성과 건강성 획득
- 문화예술창작자들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이를 통한 창작-유통-재창작의 선순환 체계 마련



문화예술인의 노동조건 개선

현실진단

- 단발성 프로젝트, 비정규직, 저임금, 도제식 인력 양성으로 인한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노동환경
- 도시지역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공간 운영비의 부담
- 문화예술인의 비조직화로 인한 정책적 지원의 어려움

실천과제

- 문화예술인의 고용환경 개선
 - 문화예술인의 표준고용계약서 작성 의무화
 - 4대 보험 보장
 - 재교육 인센티브 제도 확대
 - 미성년 출연자의 야간 촬영 금지와 학습권 보장
- 문화예술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활동 지원과 도심재생형 창작공간 지원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문화예술협동조합의 구성 유도과 이를 통한 공공 문화행사 참여, 문화 공간 운영 관련 인센티브 부여 (프랑스 SCIC 사례)

- 구도심 유휴공간을 재활용한 임대 창작실 지원과 장기임대 창작실 (가칭)'예술가 시프트' 지원
- 스포츠 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선수 권익 신장을 위한 환경 조성
 - 선수협약회의 역할 강화와 '스포츠윤리위원회' 설치
 - 스포츠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기대효과

- 문화예술인의 노동권 보호를 통한 생존권 보장과 기초적 삶의 질 확보
-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 구축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혁신기업 모델을 문화예술 분야에 접목시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 가능
- 스포츠 선수와 구단·단체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환경 마련



문화예술 성장 단계별 인큐베이팅 시스템 마련

현실진단

- 장르와 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문화산업 진흥으로 인한 문제 발생
- 문화산업 진흥과 건강한 문화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안정적 기금 마련의 필요성
-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의 재기를 위한 패자부활 지원책 부재
- 프로슈머의 등장에 따른 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다변화 필요성

실천과제

- 창의콘텐츠 발전을 위한 펀드 조성과 운영을 비롯한 장르·분야별 성장 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확충
 - 문화예술 전문성을 갖춘 창의콘텐츠 발전을 위한 펀드 설치
 - 완성보증보험, 수출보험 등 창의 콘텐츠 관련 금융지원제도 적용 확대
- 패자부활이 가능한 혁신적 지원책 마련과 비상업적 목적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유연한 저작권 적용
 - 기존 성과 중심의 지원 기준 개선
 - 유연한 저작권 적용을 통해 잠재적 핵심 창작자 발굴 육성의 기회 확대

기대효과

- 실효적이며 유연한 문화콘텐츠 창작 지원
- 패자부활을 통해 시행착오 과정에서 얻은 자산이 사장되거나 잠재역량을 갖춘 인력들이 쉽게 퇴출되는 문제 해소
- 폭넓은 2차 창작 인정을 통해 문화산업 전체의 창의적 활력 제고



문화예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의 융복합 활성화



현실진단

- 문화예술의 점증하는 사회적 중요성과 활용 가치의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 인문, 과학기술 등의 분야가 문화예술과 융복합될 때 내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
- 미디어 컨버전스에 따른 문화 콘텐츠 융복합 현상의 가속화

실천과제

-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 R&D 지원 기관의 문화예술 융복합 연구 지원 강화
 - 문화산업(창조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융복합 연구 지원
- (가칭) '문화콘텐츠위원회'의 문화예술 융복합 지원 체제 구축
 - (가칭) '문화콘텐츠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 R&D 지원체제 강화
- 스포츠문화콘텐츠를 창의적 자원으로 활용
 - 스포츠 아카이브 구축사업 및 스포츠 정보의 콘텐츠 사업화 지원 보장
 - (가칭) '스포츠역사박물관' 건립을 적극 검토

기대효과

- 문화예술과 타분야의 융복합 창작활동 장려
- 국가의 창의적 기반 확충
- 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수요 충족



문화예술 유관기관의 거버넌스 체제 강화

현실진단

- 현장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 진흥 거버넌스의 필요성
- 물리적 결합에 머물러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제점 노출
- 문화콘텐츠의 불합리한 심의에 의한 창작 자율성 저하
- 게임산업의 위상과 규모에 맞는 게임 진흥과 규제 기구의 부재

실천과제

- 문화예술 진흥 기구의 현장밀착형 지원 시스템 마련
 - 문화예술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기간, 성과평가방식의 탄력적 적용
 - 현장성을 갖춘 전문인력 등용
- 문화콘텐츠 관련 기구의 입체적 재구성
 -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대체하는 (가칭) '문화콘텐츠위원회' 구성
 - 대중음악,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방송영상 등 분야별 거버넌스 강화
 - 관련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 R&D 지원 기능 강화
 - 게임 진흥과 규제의 일원화를 위한 게임산업위원회 분리 구성
- 문화산업 자율심의 정착
 - 청소년보호법 대체 입법화를 위한 '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추진 (청소년들의 권리와 문화 활동을 보장)
 - 보호 중심에서 참여 중심으로 청소년 심의정책 개선
 - 청소년 대표자의 심의위원 참여 보장

기대효과

- 문화예술유관기관의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
- 장르와 분야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산업 진흥
- 자율심의제도 정착을 통한 심의 시스템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 게임산업에 대한 체계적 진흥과 합리적 자율규제 시스템의 완비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현실진단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9조)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정책은 대단히 취약함
- 전통문화(문화유산)예산은 정부예산 총액의 0.17%미만
 - OECD 주요국가 문화재 재정 : OECD평균 0.24% (중국 0.3%)
- 문화재 행정과 정책이 어렵고 복잡해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고, 방재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함
- 약탈문화재 환수운동의 국제교류의 성과가 미미함
- 국가 간 문화주권 확보와 영토 확대를 위한 역사적, 문화적 경쟁 가속화

실천과제

- 문화재 보존 관리와 창조적 활용의 효율성 제고
 - 문화재 분포 현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역별 균등지원 방식 개선, 지정문화재 확대, 미래 예비문화재 관리
 - 문화재 보수·복원·방재를 총괄 관리하는 (가칭) ‘건조물문화재관리공단’ 설립
 - 문화재 보호 예산의 확대
 - 전통문화 교육과 향유 공간 확대 (한옥, 사찰, 서원, 향교 등의 향유와 활용 지원)를 통한 문화관광 자원 확보
 - 중요무형문화재 지원 강화와 적극적 활용
 -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선정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로 전통기술의 전승 보전
 - 원형은 유지하되, 감동을 주는 다양한 변화와 창조적 활용을 지원
-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 활용과 전통문화의 국제적 교류 활성화
 -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관리 강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 국외 소재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와 국외 소재 문화유산 현지 활용 활성화
 - 전통문화 공연, 전시, 연구조사 등 국제교류 지원 확대
 - 유네스코 등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기대효과

- 전통문화가 이미 도래한 문화시대의 국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
 - 국가의 문화적 품격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 함양과 역사·문화 자원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유산 향유를 통한 미래문화 창조의 영감 개발
- 국가유산의 총체적 보호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보존·관리·활용·가치 창출을 위한 장기적·거시적 문화재 정책



남북 문화예술과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

현실진단

-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북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교류의 공백 발생
- 정치적, 경제적 관계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자유로운 남북 문화적 교류의 일상화 필요성
- DMZ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DMZ 중장기 활용 방안 모색과 난개발 방지

실천과제

- 남북 문화예술·스포츠·관광 교류 활성화
 - 문화예술 인프라 공동 활용 지원
 - 남북 스포츠 교류위원회 설치와 남북한 상시 공동 운영
 - 남북한 정기 스포츠 교류전 활성화(ex, 경평축구 부활 등)
 - 중요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과 참여
 - 남북 관광교류 재개와 확대

- 남북 문화유산교류 확대
 - 통일 대비 문화유산 보전 전략 수립을 위한 남북 공동연구팀 운영
 - 새터민의 경험을 살리는 북한 문화유산 전문가 양성
 - 민족 문화유산 보존과 세계화를 위한 공동사업 확대
 - 평양역사유적지구, DMZ, 백두대간 등의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
 - 비무장지대의 평화생태문화지역 조성

기대효과

- 남북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과 통일기반 조성
- 남북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위한 정서적 공감대 마련과 민족의 동질감 회복
- DMZ 생태계 보존을 통한 인류 생태문화유산의 보호와 확보



문화다양성을 위한 협력과 연대

현실진단

- 이주노동자가 100만명에 이르고 다문화가정 수가 120만명에 이르는 등 한국 사회는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재편 중
- 인종갈등과 인종차별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부상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조치의 미흡
- 문화다양성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적 문화 교류 진흥의 필요성
- 상호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한류정책의 재편 필요성
- 예술공연(E6)비자의 체계적 관리 부실

실천과제

- 다문화헌장 제정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DA)'의 실효성 제고
 - 문화다양성기금(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
- 국제 교류 문화정책의 혁신과 문화예술인 교류활동 지원
 - 문화예술 ODA를 통한 상호주의와 동반 발전 원칙의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증진
 - 문화예술가들의 교류를 통한 창조적 활동을 돕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예술공연(E6)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출연료 체불, 인신매매 등 문제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
- 한류를 통한 상호주의 원칙의 문화다양성 확보
 - (가칭)'문화콘텐츠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 활용을 통한 해외 시장 연구와 동향 파악
 - 한국학 관련 연구활동 지원
 - 상호주의를 통한 해외 관광객 동기 유발

기대효과

-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권리 신장과 보호
- 흡수와 동화가 아닌 차이의 존중과 공존을 통한 사회 통합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선도적 활동을 통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과 대외 신인도 상승
- 한류의 지속과 세계 문화와의 상생
-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류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04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1.
믿을 수 있는
안심육아

2.
일·침·돌봄을 나누는
성평등 사회

믿을 수 있는 안심육아

3대 목표

- 1 육아지원 사업의 공공성 확대
- 2 진정한 무상보육 전면 실시
- 3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

5개 정책약속

- 1 나홀로 아동 돌봄 체계 구축
- 2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 어린이집 확충
- 3 다양한 육아 인프라 제공으로 빈틈없는 육아 지원
- 4 추가비용 없는 진정한 무상보육
- 5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 체계 구축



나홀로 아동 돌봄 체계 구축

현실진단

- 2011년 현재 나홀로 아동 97만명 중 47.7%(약 46만명) 하루 3시간 이상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만 지내고 있음(여성가족부, 2011)
- 2011년 12월 현재 보육시설은 초등 돌봄기관은 어린이집의 약 25%에 불과
- 육아정책은 0~6세 돌봄에만 치중

실천과제

- 마을마다 학교마다 초등학생 방과후 어린이센터 설치
 - 나홀로 아동 46만명의 50%에 해당하는 약 23만명을 돌볼 수 있는 방과후 어린이센터 약 8000개 실(1실 30명 돌봄 기준)을 설치함
 - 계층과 무관하게 돌보아야 할 나홀로 초등학생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사교육에 집중하는 시설이 아닌 어린이센터로써 다양한 취미, 신체, 창의활동,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 교과학습 지원
 - 주민자치센터, 구청,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공공기관 내의 공간을 활용하여 시설을 확보함

- ‘초등돌봄교실’ 전면 확대
 - 1개교 2교실로 2배 확대함으로써 초등 돌봄 아동 수 24만명으로 확대함
 - 보호(휴식, 식사, 수면등), 놀이 중심 대집단 활동, 어린이센터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진로 탐색 직업교육과 교과학습 지원 함께 수행
 - 교육청 관할 ‘초등돌봄교실’ 확대 이후 ‘방과후 어린이센터’로 통합할 예정임

기대효과

- 초등학생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아동 대상 성범죄 및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
- 초등학생을 포함한 돌봄의 공공성 확대로 여성의 안정적 공적 경제활동에 기여
- 초등학생 방과후 지도자가 약 1만6천명 필요하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1교실 2인)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 어린이집 확충

현실진단

- 선진국 국공립 어린이집 점유율은 스웨덴 80.5%, 덴마크 67%, 일본 49.4% 등과 비교할 때 한국은 5.3%에 불과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나 시설 수가 적어 대기 아동 수 매년 증가함(현원 14만1117명, 대기 아동 16만8153명, 2011년 6월 기준)

실천과제

-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로 확대
 - 100인 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500개소 5년간 약 2500개소 설치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전면 국·공립화, 공공건물 어린이집 설치 확대, 민간 연대를 통한 기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함
- 공공성을 지닌 양질의 어린이집 설치 확대
 - 대학, 정부기관, 공기업, 기업 등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함
 - 대학과 공공기관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유무를 대학과 기관의 평가 지표로 삼고, 기업은 혜택을 줌으로써 설치를 유도함

기대효과

-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체감할 수 있음
-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으로 민간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유도해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함
- 직장어린이집 확대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시킴



다양한 육아 인프라 제공으로 빈틈없는 육아지원

현실진단

- 어린이집 이용 이외 다양한 육아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절실함
- 무상보육 이후 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전년 대비 전국 21.1% 증가해, 실수요자 외 불필요한 종일 보육 아동이 증가함
- 어린이집 등록 쏠림 현상은,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가정마저도 무상 서비스 이용 심리를 발동시켜 어린이집 이용이 필수적인 맞벌이 부부 아동도 이용을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생김

실천과제

- 지역거점형 육아지원센터 설치로 시간제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
 - 지역(시·군·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
 - 지역사회 공공기관(보육정보센터, 영유아 플라자)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시설을 확보함
 - 육아상담, 육아 정보 네트워크, 시간제 보육 실시 등 종합 육아 지원 시스템
- 공공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해 가정에서 하는 보육을 지원
 - 보육교사 및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을 2011년 기준의 2배 이용 확대를 추진함
 - 24개월 미만 자녀 가정, 장애아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시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파견 보육교사 고용, 등록, 관리 교육 파견 등 통합적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함

기대효과

- 종일 보육 어린이집 과잉 수요 및 보육 재정 효율성에 기여함
- 육아지원센터 근무 인력이 센터당 6명씩 필요해 200개소에 배치할 경우 12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됨



추가비용 없는 진정한 무상보육

현실진단

- 부모의 양육비 부담과 OECD 권고 수준에 못 미치는 낮은 보육 예산
- 육아 지원 예산이 증가했는데도 부모의 부담이 지속됨
 - 정부 지원 예산은 2008년 4조, 2010년 5조5천억원, 2012년 8조1천억원으로 급증함
 - 현재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인데도 입소비, 견학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부모들에게 월 8만~25만원을 추가로 거둬

실천과제

-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에게 추가비용 없는 무상보육 실시
 -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
 - 입소료, 현장견학 등의 추가 징수가 없도록 적정 보육비용을 산정해 무상보육을 지원함
 - 영유아 통합 표준 보육과정(누리과정) 보급 시행에 맞춰 불필요한 특별활동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함. 특히 0~2세에 대한 특별활동비 비용 징수는 규제를 강화함
-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
 - 부모 혹은 친인척이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0세-20만원/1세-15만원/2세-10만원을 양육 보조금으로 지급함

기대효과

- 추가비용 없는 무상보육 실시로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줌
- 어린이집 이용자뿐 아니라 가정에서 육아를 전담하는 집도 보육비를 지원해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지원을 고루 받게 됨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 체계 구축

현실진단

- 보육서비스 질적 관리와 직결되는 보육 교사 근무환경
 - 약 18만명에 이르는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상당수 보육교사는 비정규직임
 - 보육교사 1인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이 9.5시간인데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24%
 - 보육교사의 기본 급여는 약 127만원,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임금은 114만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 어린이집의 안전, 급식, 건강 관련 환경 개선은 1회성 점검으로 그쳐 안전, 급식 관련 사고가 자주 남
 - 2009년 보육실태 조사 결과, 보육시설의 60.5%가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운영평가를 해, 객관적 평가를 받은 운영 정보가 적음

실천과제

- 공공시설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으로 보육교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함
 -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규직화 유도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함

- 보육교사 중앙관리 시스템 운영
 - 보육교사 중앙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과 급여 관련 정보를 공개 관리함
 -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수준과 평가 인증을 연계함
 - 보육교사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해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함
- 어린이집 안전·건강·급식 관리 전문인력 고용해 점검을 상시화
 - 퇴직한 간호사, 의사, 영양사, 안전관리 경력 공무원 등을 채용해 어린이집 순회 점검을 향상함
 -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여 및 상시적인 어린이집 관리, 지도, 감독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강화 방안
 - 학부모 참여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
 - 어린이집 영유아 출결 상황, 예·결산 공개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
 - 평가 인증, 장학지도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

기대효과

- 우수한 인력이 보육현장에서 꾸준히 일해 서비스 품질을 높임
- 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으로 교직원 근무가 안정화됨

일·쉼·돌봄을 나누는 성평등 사회

3대 목표

- 1 사회적 분담을 통한 '좋은 돌봄'의 실현
- 2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 3 24시간 안전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7개 정책약속

- 1 0세부터 100세까지 평생돌봄체계의 구축
- 2 20~60대 중단 없는 여성 일자리 확대
- 3 입사부터 퇴사까지 성차별 없는 일터 조성
- 4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권리를 보장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
- 5 여성복지기본선 실현
- 6 여성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문화환경 구축
- 7 국가의 성평등 추진역량 강화



0세부터 100세까지 평생돌봄체계의 구축

현실진단

- 방과 후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있거나 아이들끼리만 있는 아동은 2011년 97만명에 이르며, 아동과 청소년 돌봄은 모든 계층에 걸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아동과 노인 등에게 제공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 공급의 민간시장 의존도가 높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인 부담이 큼
- 돌봄 일자리의 대부분은 여성이 담당하며,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과 근로조건도 매우 낮은 수준임

실천과제

- 전국 초등학교에 '어린이센터' 설치 및 다양한 유형의 돌봄 제공
 - 국공립 어린이센터 설치(8,000개실, 23만명 돌봄 제공)
 - 가정-학교-어린이센터-지역사회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예산 OECD 평균 수준으로 증대

- 돌봄 서비스 기본체계 구축
 - 돌봄 서비스의 공적 제공을 위한 통합적인 체계 마련 및 국가 책임 강화
 - 돌봄 서비스 종사인력 자격 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 등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돌봄 노동자의 생활임금과 기본권 보장
 - 돌봄 노동자의 경력인정 기준 마련 및 처우개선을 통한 생활임금 보장
 - 근로시간 규제를 통한 돌봄 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 보장·장시간 노동 금지
 - 남성 돌봄 노동자 양성과 취업기회 제공

기대효과

-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평생 돌봄 사회의 기반 구축
-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제도적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돌봄의 질을 향상
- 돌봄 노동자의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의 창출
-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함으로써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20~60대 중단 없는 여성 일자리 확대

현실진단

- 청년여성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여성들이 원하는 지식정보서비스 산업 분야의 일자리 부족
- 30대 초반 자녀 출산·양육 시기에 집중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가사와 가족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책임
- 평균수명 증가·남성 조기 은퇴로 50~60대 여성들의 경제적 요구는 높아지나 노동 시장에서 중고령 여성근로자는 매우 취약한 위치

실천과제

- 20~30대 여성들을 지식정보서비스 산업부문 전문인력으로 육성
 - '2030 여성전문인력 육성 계획'의 수립과 시행
 - 공공부문 여성고용할당제 추진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확대 및 '여학생 사회체험 학기제' 실시
 - 저소득층과 고졸청년층 여성 대상 '경력개발 교육바우처제도' 시행
- 30~40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가족양립제도 실효성 강화
 -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확실하게 보장
 -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인상, 가족돌봄휴직 유급화
 - 비정규직·영세사업장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육아휴직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
 -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직장맘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확대
 -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별 휴식공간을 지자체와 연계운영
- 50~60대 사회서비스 여성근로자 경제적 지위 개선
 -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여성할당제 실시
 - 중고령 여성근로자 고용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지원

기대효과

-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 여성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를 통한 성평등 돌봄사회 구현



입사부터 퇴사까지 성차별 없는 일터 조성

현실진단

- 여성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42.8%)이 남성(27.8%)에 비해 높고(2011.8 기준), 여성비정규직 임금격차가 가장 큼(남성 정규직 임금 100, 여성 비정규직 40.5)
- 전통적인 성별고정관념으로 여성은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 2009년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8.9%(남성 100, 여성 6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청년층 여성의 대기업 취업률은 18.5%에 불과하고, 기업은 물론 정부 내 고위직 여성은 극소수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사건 해결과정에서 2차 피해로 인해 높은 퇴사 비율

실천과제

- 여성 비정규직 감소 및 고용의 질 개선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사회보험가입률 향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성별 형평성 평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및 성별임금격차 OECD 평균수준으로 축소
 - 여성집중직무의 노동가치 재평가 및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노동시장 내 상위 직무의 성별 비율 발표 및 개선
- 공기업 채용·승진시 여성할당제 추진
 - 정부와 공공부문 인턴제 일정 비율 여성정규직 우선 채용
 - 공공부문 여성임원 비율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확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작업거부권, 사업주의 보고의무 법제화

기대효과

- 여성 비정규직 감소와 정규직 증대를 통한 여성고용 안정화
- 성별 임금격차 축소 및 성별 직업분리 현상 개선
- 대기업과 공기업,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승진기회 확대를 통해 고위직 여성인력 육성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권리를 보장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

현실진단

- 성폭력 신고율 7.6%(여성가족부, 2010), 가정폭력 기소율 10%(법무부, 2010)에 불과해 사실상 가정폭력 사건은 비범죄화되는 현실
-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2011년 48.1%(‘2012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 발표 자료)로 매우 높음
- 형사사법절차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심각
- 여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시설 입소자들의 개인정보가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수집 및 집적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지원예산의 만성적 부족
- 학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형식적 운영
-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에 대한 수사 의지의 결여 및 수사력 미비로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약화
- 공무원, 국회의원 등 특히 고위 공직자에 의한 여성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및 대처 미약
- 데이트 폭력, 전 배우자(애인)의 위협 및 보복 등 스토킹에 시달리는 여성 증가
- 어린이 등하교길 및 여성의 밤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이 위축

실천과제

- 여성관련 범죄의 제도 운영 개선
 -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 조항 폐지
 - 가정폭력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전면 재검토 및 현장 체포우선제도 도입
 - 성매매 알선 업주에 대한 단속강화와 강력한 처벌 시행
- 여성폭력 사건 전담자의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여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피해자 지원관련 통계시스템의 구축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30% 확대 및 지원체계 안정화
 - 무료법률, 의료비, 주거, 취업지원 등 피해자 자립을 위한 지원 확대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현실화 및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 각급 학교의 교육 및 공무원 연수시 성평등 인권교육 의무 실시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광고 등 효율적인 대 국민 홍보 확산
-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성범죄 처벌강화
- ‘스토킹 방지법’ 제정
- 범죄 예방을 위해 건물의 설계 단계부터 안전한 환경 디자인을 하는 셉티드 (CPTED) 적극 시행
 - 지역사회 치안능력 강화하고 마을 안전을 위한 주민자치활동 지원

기대효과

-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고 피해자는 권리를 보장받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구축
- 확실한 피해자 지원으로 피해자들의 치유에 밑거름
-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권교육의 평생 실시로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
- 여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어린이·여성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일상 보장



여성복지기본선 실현

현실진단

- 장애인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장애여성은 저학력 비율이 높고 취업률이 낮아 빈곤층 비율이 높음.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그리고 모성권 침해 등 장애와 성별로 인한 이중차별에 놓여있음
-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구의 9.2%(통계청, 2010)에 이르나 아동보호와 생계책임을 동시에 저야 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비현실적인 한부모 아동양육보조 수당과 낮은 보조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해질 위험이 높음
- 65세 이상 여성인구는 326만명으로 남성보다 100만명이나 많고(통계청, 2010), 노후소득보장 체계 미비로 빈곤율이 높고 혼자 사는 여성노인의 비중이 높으며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10년 이상을 살아야 함
- 결혼이주여성의 신원을 배우자가 보증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성폭력, 성매매 등 많은 이주여성이 폭력에 노출돼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 미비

실천과제

- 장애여성에 대한 취업·양육 지원 및 폭력·차별 금지
 - 장애인 고용할당 내 여성할당제 실시
 - 장애여성 양육지원 서비스

- 한부모·비혼모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아동양육보조수당 명칭변경(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아동·청소년 포함)
 - 한부모 가족 초기 적응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 비동거 부모의 양육비이행제도 마련
 - 한부모생활안정지원사업 및 고용지원서비스 유기적 연계구축, 교육훈련 기간 중 생계 소득 보전
 -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양육비, 생계비 현실화)
- 여성노인의 노후생활과 건강권 보장
 -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가사도우미·간병도우미 서비스 제공
 - 보건소 중심 지역(여성)노인주치의 제도 도입
 - 여성노인 독거세대 연결망 구축
- 이주여성의 체류안정과 인권 보장
 - 한국인 배우자 신원보증 관행 개선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피해자 구제
 -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적 행동에 대한 처벌·배상 규정 강화
 - 중도입국·미등록 자녀에 대한 교육·사회적 지원
 - 시민의 다양한 문화교류 기회 제공과 문화다양성 감수성 확대

기대효과

- 이중차별에 놓여있는 장애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기본권 보장
- 한부모·비혼모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빈곤 예방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다양한 가족 선택권 실현
- 여성노인의 사회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
-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주민 정책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치 실현



여성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문화환경 구축

현실진단

- 국방·통일·외교 분야 여성 참여가 저조하고, 평화·안보·여성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 수립 및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SOFA 개정 필요
- 유해물질 관리 허술로 인해 불임, 아토피질환 등 환경요인의 질병 급증 및 심각한 여성질환 증가
- 여성농민은 농가인구의 절반을 넘음에도 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하며, 여성농업이라 할 수 있는 발농업의 위기와 동시에 여성농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도적 지원 부족
- 국가차원의 양성평등문화확산 및 여성적 가치 창출 사업이 부족하고 특히 여성문화예술종사자의 고용여건 열악

실천과제

- 평화·통일·외교 분야 여성 참여 확대 및 국제관계 개선
 -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 평화·통일·외교 분야의 여성대표성 제고 : 여성대표 참여 의무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15% 북한여성지원항목 지정
 - SOFA 개정시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조항 신설
 -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명문화
- 저소득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 여성농(어)업인 센터 확대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 친환경 작물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통음식 문화 보존 지원 확대
 - 저소득 여성농업인 경제적·의료 복지 지원 확대
 - 청년 여성 귀촌 인턴제 실시
-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및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 양성평등문화확산 사업 재도입 및 문화·미디어 관련 종사자 성평등·인권 감수성 향상
 - 여성적 가치 문화 예술 진흥 및 일자리 창출 : 여성문화예술 지원, 공예산업 지원, 여성적 관점 미디어·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 여성문화예술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안정화

기대효과

- 국방·통일·외교 분야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함께 기여
- 유해환경 개선을 통해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교육받는 건강한 환경 조성
- 여성농민의 농업인 지위 보장 및 복지 지원을 통한 미래지향적 농업 발전 기대
-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여성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정으로 여성적 가치의 문화예술 진흥 기대



국가의 성평등 추진역량 강화

현실진단

-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났다고 하나 입법·사법·행정부, 그리고 주요 공공기관의 여성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 업무로 통합되면서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업무의 위상과 비중이 약화되고, 성평등 추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총괄·조정기능 미약
-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물적·인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여성정책이 상대적으로 지체

실천과제

- 입법·사법·행정부 내 여성대표성 강화
 - 장·차관 여성 임명 확대
- (가칭) '성차별 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명실상부한 성평등 추진기구로 위상 정립
 - 국무총리실 소속 성 주류화 위원회 설치
 - 1부처 1 여성정책담당관 지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및 기능 확대
 - 고위공직자 성평등 정책 교육 의무화
- 여성친화적 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여성참여 활성화
 - 여성친화지역정책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 지원
 - 자생적 지역 여성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여성정책 활성화

기대효과

- 입법·사법·행정부 내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고 여성정책 추진기구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성차별 금지 및 구제 업무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지역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여성정책을 내실화하며 성평등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1.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2.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3. 꿈이 자라는 아동·청소년 세상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3대 목표

- 1 노인 빈곤 해결로 안정된 노후 보장
- 2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와 소득 보장
- 3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과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10개 정책약속

- 1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
- 2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으로 노인빈곤 해소
-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공공성 강화로 노인 돌봄 부담 해소
- 4 어르신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 5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6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의 소득과 근로권 보장
- 7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
- 8 장애인의 중복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
- 9 부양의무자 기준 실질적 완화 및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 10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

현실진단

- 노후소득보장이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긴 노후가 개인과 사회에 공포와 재앙이 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대응 회피는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져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 국민연금에는 수십 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외에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체감할 기회가 없고, 각종 가입자 지원 사업은 SOC사업 중심으로만 투자하고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1/4인 670만명이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가 심각함

실천과제

-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에 대한 규정 신설
 - 기금의 운용방식을 현행 부분적립에서 부과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 방안 검토
 -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도록 중간층의 소득보장체계 구축
- 가입자의 복지를 위한 자금 대여 확대 및 보육, 의료, 주거, 노인요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복지시설의 비중 확대에 국민연금 기금 투입

- 국민연금 소수 가입자의 각종 위원회 참여 보장
 - 임의가입자(전업주부)와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 고령자)와 같은 소수 가입자 대표를 운영위원회 구성에 늘도록 법률 개정

기대효과

- 국민연금 기금 고갈 후에 대한 의구심의 해소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여 주어, 향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유인 향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지원 사업 확대로 체감 만족도 증가
-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축소 및 가입 격차 해소로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에 접근
- 국민연금 운용에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 반영으로 민주성 제고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으로 노인빈곤 해소



현실진단

- 노인의 75%가 자체 소득 없이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로 생활
 - 노인 빈곤율은 100명당 4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3명)의 3배
 -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자살 이유 중 '노인빈곤으로 인한 생활'이 1위임
- 기초노령연금은 65살 이상 어르신에 약 70%에게 최고 월 9만 4600원 (평균 7만 2000원) 지급
-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용돈의 수준에 불과하여 노인빈곤 개선에는 역부족

실천과제

-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매년 20% 정도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를 지급
-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지방비의 부담이 없도록 국고로 지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기대효과

- 기존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의 총액이 최대 18만원이 되도록 함
- 376만명의 수령 대상 노인뿐만 아니라 매년 50만명씩 노인 인구가 되는 베이비 붐 세대에 소득 안전망 역할
- 노인 당사자 뿐 아니라 1250만명 자녀들의 부모 부양 부담 완화
- 노인빈곤의 완화와 내수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 심각한 노인자살과 노인빈곤 문제의 완화
- 현대판 고려장을 예방하고, '노인빈곤 제로'로 존엄한 노후 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공공성 강화로 노인 돌봄 부담 해소

현실진단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들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줄여왔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로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옴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연간 1200만원의 의료비 부담 완화
 - 비이용자보다 진료비를 연간 418만원 덜 사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5.7%(33만명)에 불과하여 OECD 평균 12.1%(’10년)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종사자도 낮은 수가와 과도한 업무로 창출된 일자리의 질 저하
-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부족으로 요양서비스의 질 관리 한계
 -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지방단체 소속 기관수는 2011년 현재 225개로 전체 기관의 1.5%에 불과하여 독일 등 주요 국가의 10%에 크게 미달함

실천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정률을 현재 5.7%(33만명)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중증 재가와상(在家過狀)노인과 경증치매 노인을 포괄하여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개선
 - 주/야간 보호의 활성화, 방문간호의 이용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요양 인력 등에 철저한 질 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수준으로 급여 인상
-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점차적 확대 추진
 - 대상 노인 인구의 숫자에 따라 250개 보건소에 공공 Nursing Home 운영
 - 농어촌의 1890여개의 보건진료소를 공공 Nursing Home 으로 전환

기대효과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로 필요한 분들 대부분이 요양서비스를 받게 됨
- 보다 많은 어르신들을 사회가 보살핌으로서 존엄한 삶 영위
- 가족의 간병 부담 경감으로 여성과 가족들의 사회적 활동 증대
 -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던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가능
-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일자리 창출효과
 -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로 정규직 여성의 돌봄 노동자 일자리 창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현실진단

-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29.5%만 경제활동에 참여
 - 이는 평균 40%가 넘는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국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 노인인구는 560만명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일자리는 모두 합하여도 매년 22만개 수준에 불과
- 이들 일자리도 급여 수준이 월 평균 20만원에 불과, 그마저도 7개월 정도만 지급하고 있어, 고용의 불안정이 심각하고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안정적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실천과제

-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업 확대
 - 공공부문 일자리에 노인의무고용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 기업들의 노인 고용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 지방정부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유효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교부금을 확대 검토
-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지역사회와 일반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창출
- 노인일자리 평균 임금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용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단계적으로 12개월로 확대

기대효과

- 신규 노인 일자리 연차별 확대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
- 노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노인 건강 보장, 의료비 절감, 자살 방지 등 효과 가시화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현실진단

-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 되는 등록 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판단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일률적인 복지 급여 제공
-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2년 미만 기간 동안의 일시적 장애로 근로를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시 장애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의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됨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서비스 필요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표가 있지만, 시행령에서 신청자격을 장애 1급으로 제한해 실제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함
 - 활동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장애인이 36만명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5만 5천명을 약간 넘는 수의 장애인만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
-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77.9%는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시설에 입소하며, 68.5%가 자립생활 기반의 부족으로 퇴소의 두려움을 겪고 있음

실천과제

- 장애인 등급제 폐지
 -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장애 등급제는 폐지하고, 장애인 등록제는 존치시켜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 마련
- 장애 범주의 확대 및 일시 장애 인정
 - 1차적으로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을 법정 장애범주에 포함시키고, 지속적으로 비뇨기계, 혈관, 학습장애 등에 대해서도 단계별 범주 확대
- 활동 보조 서비스 대상의 확대 및 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의 상한선 폐지
 - 신청자격에서 장애등급 제한 폐지
 -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을 36만명으로까지 단계적 확대
-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 홈이나 하프웨이 하우스 등의 대안적 거주 공간 마련

기대효과

- 일괄적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정 시스템과 전달체계 마련
- 장애로 겪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장애 인정이 되지 않았던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교통사고 등으로 일시적 장애가 된 일반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활동 보조인 인력 약 30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
- 장애인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탈시설 가능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의 소득과 근로권 보장



현실진단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빈곤한 삶을 영위함
- 장애인연금 제도와 장애수당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5.5%에 불과함. 중증장애인은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 16.3%에 불과함
-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조차 반영되지 않아 기초생활급여를 받아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실천과제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급여 수준의 현실화
- 부양의무자 기준의 실질적 폐지를 통한 장애빈곤의 해소
-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 보조금 고용 제도(중증장애인 고용 시 임금 보조)의 도입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3권과 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 개정

기대효과

- 사회복지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사회안전망 제공
- 최저임금 이하의 장애인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비취업 장애인들의 취업 동기 증가
- 장애인의 근로권 보장 수준 향상 및 지원 고용(중증장애인 근로보조인)을 통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

현실진단

-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 국내에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와 교육과정·방법 등이 구비되어 있지만, 개별 학교에서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현실에서는 장애인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종합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81%로 격차 존재
-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 설치율은 80.6%, 교통수단 76.0%, 보행환경 71.7%이며, 교통수단 중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전체 시내버스의 11.0%에 불과함
- 장애인 중에 상당수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57.3%나 됨

실천과제

-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보 등 장애인 개별화 교육의 실질화 추진
- 시각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등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 치료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부처 간 협력 운영체계 마련
- 저상버스 확대 및 대중교통 시설의 전자문자 안내판, 음성 알림 장치 등의 편의 제공
- 장애인 진료 활성화 및 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체계의 구축
 -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항목을 세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

기대효과

- 장애 종류별, 장애 정도별로 다른 방식의 교육을 통해 교육적 효과 극대화
 - 장애인 교육을 위한 정규직 교원 일자리 확대
-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장애인 건강권 향상 및 장애인 의료 접근성 향상



장애인의 중복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

현실진단

-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정당한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고 있지 못한 상태임. 또한 인식과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전국의 보건소 마다 정신보건센터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함
- 장애 여성의 경우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아동 장애인의 경우, 성인 장애인과 다른 서비스와 관심이 필요하나 세밀하게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거나, 관련 지원제도가 성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실천과제

- 발달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마련,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정신보건센터의 기능 강화 및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공제에 있어 정신 장애인 차별 해소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의 정신 질환자 직업재활 시설 배제 해소,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권리 보장,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상담·보호시설 확충
-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시스템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2013년 시행)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체계 구축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 활성화

기대효과

- 발달, 정신, 장애 아동·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 내 중복차별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실질적 완화 및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현실진단

- 2010년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약 60만 가구 100만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2012년 상반기까지 약 16만6천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이 기준 때문에 기존의 수급 자격을 박탈당했음
- 취약계층 대상 자활사업으로 8만 4천명이 참여했으나 탈수급률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현재 167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5조원 정도의 의료급여비가 투입되고 있으나, 가입자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지 않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실천과제

-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비 혈연 1촌은 제외
 - 현장 사회복지사에게 재량권 부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률 현실화 방안 검토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 욕구별로 교육, 의료, 주거 등 부분급여 검토
 - 빈곤층 대상 역모기지제 도입
- 기존의 보충급여 방식(EITC)에서 노동 장려형 급여 방식 전환 검토
- 의료급여의 사례관리 확대와 대상자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

기대효과

-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절대적 빈곤이면서도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불행한 경우가 없도록 함
- 자활사업의 참가율 증가 및 탈수급률의 획기적 증가로 국가의 공공부조 부담이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함
- 한시적 급여와 부분 급여의 도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와 실질적 보장률의 증가로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격차 해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현실진단

- 사회복지의 급격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들의 개별적 욕구에 근거하여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국가 책임 하에 서비스가 직접 제공되지 않고,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임
-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을 바꾼 전국의 4655개의 동사무소 등 기초행정단위는 간판만 바꾸어 달고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음
 - 실제로 사회복지 관련 전담 인력은 개소당 3.5명(사회복지사는 1.7명)에 불과

실천과제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실질적 증원 검토를 통한 복지 체감도 증가 및 복지비용 누수 방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의 확대 개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SRP(사회자원 연계 시스템, Social-welfare Resource Planning) 도입으로 사각지대와 중복이 없도록 효율화

- 읍면동 사무소에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증가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신분 보장: 정규직 전환 등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인력 공단 도입 등

기대효과

- 주민복지지원센터의 업무 전환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체감도 증가
-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일정 숫자가 갖추어지면, 팀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 가능
- 이미 검증된 전산 관리를 통해 낭비와 누수가 없는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인력의 신분 보장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3대 목표

- 1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불안 해소
- 2 공공의료 확충으로
의료이용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 3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7개 정책약속

- 1 병원 입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 2 환자 간병 부담 해소와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 3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
- 4 병원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완화
- 5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6 공공 보건의료 강화
- 7 모든 국민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 제도 도입



병원 입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현실진단

- 보편적 복지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보장 수준이 너무 낮아 OECD 30개 국가 중 27위에 그치고 있음
- 현재도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중증질환자들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진료비 상한제도의 상한보다 훨씬 높음
- 특히 중증질환의 치료비는 중산층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고, 과도한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 중 하나임
-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비 불안 때문에 약 80%의 가구가 1개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실천과제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후 병원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 최소화 시행

- 2010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36.1%를 단계적으로 인하
-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

* 선택진료, 병실차액, 치료재료 등의 급여화 단계적 추진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한 후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 검토

기대효과

-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모든 국민 가입과 적정 수준 보장성 달성을 추구함. 이는 의료이용의 불평등 해소와 사회연대의 강화에 기여
-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형평성, 거시적 효율성, 의료서비스의 질, 국민 만족도 향상

환자 간병 부담 해소와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현실진단

- 노인의 75%가 자체 소득 없이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로 생활
 - 노인 빈곤율은 100명당 4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3명)의 3배
 -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어르신들이 자살 이유 중 노인빈곤으로 인한 생활고가 1위임
- 기초노령연금은 65살 이상 어르신의 약 70%에게 최고 월 9만 4600원 (평균 7만 2000원) 지급
-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용돈의 수준에 불과해 노인빈곤 개선에는 역부족

실천과제

- 병원이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병 인력을 채용하도록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함
 - 2015년도부터 시행 단계적으로 전체 병상으로 확대
 - 간병인의 처우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확대 시행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활동을 더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한 진료비가감지급을 확대함
 -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된 지침을 적용하는 진료과목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부여

기대효과

-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 완화
- 간병돌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



현실진단

-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은 노인의 식사 내용과 씹기 기능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65~74세 노인의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은 49.5%에 불과
-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은 75세 이상 노인에만 한정하고 있고 본인부담률이 50%로 지나치게 과중하여 실효성이 낮음
-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매우 열악한데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 영구치 수는 OECD 평균의 2배이고 충치 경험 아동의 비율은 60.47%나 됨

실천과제

-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확대
 - 급여 대상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 본인부담금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경감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항목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주치의 제도 시행
 - 충치와 잇몸병의 예방, 구강 건강 증진 중심의 치과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 모든 어린이에게 치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치과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고, 환자가 선택한 치과 주치이는 충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부터 정기 구강검진, 불소 도포, 치면열 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의 예방보건 서비스까지 제공함

기대효과

- 노인 틀니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증진 효과에 기여
- 아동 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
-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로 치과 관련 국민의료비가 절감

병원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완화

현실진단

- 암 같은 중한 병에 걸리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거 서울로 이동하는데,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 상위 5대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음
- 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 잘하는 1등급 병원 51곳 중 절반이 넘는 32곳(62.8%)이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음. 특히, 수술 난이도가 높은 간암의 경우 광주, 경북, 전남, 충북, 제주에서는 1등급 병원이 한 군데도 없음
-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서울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임
- 그러나 실제로 상위 5대 병원과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당 의사 수와 간호사 수가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훨씬 많음

실천과제

- 지역별 병원 인프라의 상향평준화 추진
 - 낙후된 지역의 공공거점병원 및 선정된 비영리 민간거점병원에 대한 신증축과 개보수 및 의료 장비 지원



- 권역별·지역별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 입원한 암 등 중증 환자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에 가산율을 적용함
-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을 강화하여 지역거점병원들이 실질적으로 간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병원진료비 보상 수준 인상
- 100명당 의사수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차등 보상하는 의사등급제를 도입, 지역거점병원들이 보다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유도

기대효과

- 지역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환자의 이동에 따른 불편과 추가 비용을 줄여주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
- 지역병원 양질의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 공적 방식으로 의료 인력의 양적·질적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병원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현실진단

-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95%가 연간 소득 1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고, 체납 사업장의 99%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임
- 2010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세대는 총 153만 세대, 이는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20%에 해당함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급증, 2012년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은 187만 1000여명인데, 이는 2011년도 보다 7%나 늘어난 규모임

실천과제

-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하위 5%~15%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저리로 대출
- 중소 영세사업장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일부 지원

기대효과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 급여 제한으로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의료 이용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평균적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음
- 보편주의 원리의 건강보험료 재원을 이용해 저소득계층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전국적 수준의 사회연대성 제고와 사회통합을 강화함. 이는 사회적 자본의 향상으로 귀결됨

공공 보건의료 강화

현실진단

- 2011년 현재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기관의 비율은 5.9%,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율은 10.4%에 불과함
- 개인 및 재벌자본 소유와 지배를 받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주도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상품화되는 경향이 심화
- 이윤 추구 성향이 강한 민간의료기관들간의 경쟁 심화로 의료자원의 낭비, 국민의료비의 급증,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등 분포, 보건의료체계의 형평성 저해와 불평등 심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병원의 공공적 역할에는 건전한 적자가 동반될 수밖에 없으나,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은 독립채산제에서 정부 지원 없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공공병원들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나 공공병원들 내부에서도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공공병원들이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실천과제

- 공공 지역거점병원의 확충
 -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350병상으로 공공의료가능한 지역거점병원 확대
 - 확충의 방법은 직접 설립, 민간의료기관 매입,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공공성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되 우리나라 병상의 총량이 OECD 평균보다 60% 이상 많은 점을 감안하여 병상 자체가 늘어나는 직접 설립은 최소화함
- 공공병원의 적정진료 및 공익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의 확충 및 공공병원의 획기적 현대화 추진
-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전달체계의 확립 및 공공의료 관리체계의 개혁
 - 권역별 국립대병원과 공공 지역거점병원간의 네트워크 형성
 - 공공의료 관리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 관리의 중심적 역할 부여, 권역별 공공병원 운영위원회 설립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 도모

기대효과

-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및 의료이용의 형평성 강화
- 현대화된 공공병원에 의한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상승 억제
- 공공병원 관리 및 운영의 직접 민주주의 확대



전 국민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 제도 도입



현실진단



- 흡연, 음주, 비만 등 건강위해 행위의 지속적 증가
- 급속한 산업화와 가정 붕괴, 무한경쟁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음
- 증가하는 자살(2000년 10만명당 13.6명 → 2010년 31.2명), 학교폭력, 게임 몰입, 우울증 등을 예방 및 상담 치료하기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의 미비
- 우리 국민들은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주치의(1차의료 전문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의료의 지속성과 조정 기능이 결여돼, 무분별한 의료이용 현상이 나타남

실천과제



- 읍면동별 건강관리체계 및 주민건강자치체계의 구축
 - 읍면동별 주민건강센터 설치, 실질적인 웰니스(wellness) 센터 기능과 일차의료 활동 수행
 - 지역주민 참여 조직인 건강위원회를 설치
 -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인력 확충 및 지원 체계 강화

-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단계적으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를 위한 전국적 전달체계를 구축함
- 정책,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및 그 분포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로서의 건강 영향 평가를 법제화
-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 외상 및 응급진료체계의 강화
-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의 도입,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우리나라의 맥락에 알맞은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1차의료 특별법 제정
 - 바람직한 1차의료 모형과 서비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의료인들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도입

기대효과



- 건강생활실천 향상 및 관련 질환으로 질병 부담의 완화, 건강증진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 방안 마련, 국민의 건강수명 증가
-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더욱 넓혀 대상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
- 선진 응급이송체계 및 응급질환 전문 진료체계의 구축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의 사망 방지 및 장애의 최소화
-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의료인들은 의사-환자 관계의 신뢰가 형성되어 전인적이고 수준 높은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주치의 제도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크게 개선되며,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며 의료 공공성을 높임

꿈이 자라는 아동·청소년 세상

3대 목표

- 1 아동·청소년의 안전 보장
- 2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
- 3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시행

5개 정책약속

-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안전 보장
- 2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
- 3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 4 아동·청소년의 복지 지원 현실화
- 5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 시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안전 보장



현실진단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하루 3.2건
 - 2010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모두 1175건으로 하루 3.2건 발생했고, 오후 12시에서 6시 사이에 주거지 근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아동 대상 성폭력의 양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임. 외국에서는 아동강간의 경우, 법정최고형(조건 없는 20년 이상 유기징역, 종신형, 사형 등)으로 다루고 있음
- 시설별, 지역별 방과후 돌봄 서비스 편차 심각, 고위험군 아동 관리 미흡
-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4만 2398건으로 OECD 주요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실천과제

-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양형 강화 등 강력 대응
 - 중상해를 동반하는 아동 성폭력 범죄 관련 양형 강화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청소년 성매매행위 관련 양형 강화
 - 초등학교 방과후 어린이센터 설치 및 확대를 통해 돌봄 서비스 제공
 -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 가정, 학교, 지역사회 대상 예방교육 확대

- 방과전·후 돌봄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일원화
 - 안심 육아정책에서 제시한 국공립 어린이센터, 초등 돌봄교실과 민간 지역아동센터 통합 인프라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일원화 추진
- 아동·청소년의 생활 안전 보장
 - 어린이보호구역 안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부속물 설치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
 - 아동 교통안전 지도를 사회적 일자리로 활용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를 현실화하고 교육기관 운영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 의무화

기대효과

- 고위험군 아동 관리를 통해 건강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아동 양성
 - 위기상황에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체계 확충을 통해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 가능
- 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제공
 - 학대피해 아동 및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을 높이고 차별 없는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성장 도모
- 생계형 방임 문제 해소 및 여성 인력 창출의 경제적 효과 기대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



현실진단

- 아동·청소년 10명 중 1명은 인터넷 중독
 - 우리나라 청소년(만10-19세)의 인터넷 중독률은 10.4%이며 유아동(만 5-9세)의 인터넷 중독률 7.9%로 성인 중독률보다 높음
 - 게임 중독 청소년의 뇌는 마약 중독 상태와 같으며(Translational Psychiatry, 2011), 폭력성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 인터넷 신문 사이트의 유해성, 선정성 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율규제에만 맡겨져 있음

실천과제

- 아동·청소년 대상 미디어 환경 규제 및 미디어교육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 및 선정성 규제
 - 아동·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인터넷(유사)성인광고 강력 규제
 - 아동·청소년,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확대하여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기대효과

-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으로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피해 감소
- 미디어를 활용한 폭력 및 따돌림 예방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현실진단

- 아동·청소년 하루 평균 1명 이상 자살
 - 2011년 20세 미만 아동·청소년 자살자는 모두 437명으로 2010년 371명보다 17.8% 증가했으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OECD 회원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함
 - 우리나라 초등학생 10.7%, 중학생 15.0%, 고등학생 12.6%가 심층사정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3.6%가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함

실천과제

- 아동·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완화
 - 초중등학생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제한
 - 고교진학체제와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
-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서비스 강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서비스를 확대하여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심리상담 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 내 공공 청소년시설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예능 활동, 봉사활동,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

기대효과

- 청소년기 정신건강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가능
- 자살, 우울증 등 청소년기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소



아동·청소년의 복지 지원 현실화

현실진단

- 아동 인구 10명 중 1명은 빈곤 아동
 - 2010년 우리나라 아동의 7.4%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서 살고 있으며, 10.8%는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살고 있는 빈곤아동임
 - 2011년 보육예산을 제외한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이 2만 19원에 불과하며, 아동가족복지 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으로 잔여주의적 복지정책에 머무르고 있음
 - 아동 빈곤의 주요 원인은 가족 불화와 해체에 있으므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가족 역량 강화가 필요함

실천과제

- 아동복지시설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예산 확대를 통해 시설별 운영비 및 급식비 현실화
 - 학대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치료 강화
 - 청소년 자립지원시설을 확대하여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 내실화

- 빈곤 아동(소수자 아동) 및 청소년의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 강화
 - 드림스타트 대상 지역 확대를 통한 빈곤 아동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여 아동에게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보장

기대효과

- 아동학대 조기 개입으로 재발 방지
-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가족해체 예방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 시행



현실진단

-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중복된 아동·청소년 정책 구조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각 수행하여 부처 간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높은 대표적 영역임

실천과제

-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시행
 - 아동복지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부처간 통합적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
 - 유사한 정책과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관리를 일원화하고 대상을 확대함(예. 교육과학기술부의 Wee 클래스,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여성가족부의 CYS-Net)
 - 아동·청소년정책과 보육정책, 교육정책, 가족정책 간의 조정기능 도입

기대효과

- 일원화되고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
 - 산발적이고 중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일원화된 정책 아래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 가능
- 사각지대와 중복 없는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시행 및 예산절감



06

안철수의약속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1.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2.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업 · 농어촌

3.
공정과 상생의
디지털 미디어 세상

4.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 문화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3대 목표

- 1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지혜로운 이용
- 2 생태계 보전과 훼손된 국토의 복원
- 3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통한 삶의 질 제고

10개 정책약속

- 1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
- 2 원자력 및 석탄 비중의 점진적 축소와 온실가스 감축
- 3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 4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호
- 5 물·자원 순환체계 개선 및 도시 녹지 확충
- 6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에너지 협력 강화
- 7 기후변화와 환경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8 취약계층의 환경·에너지복지 실현
- 9 친환경 먹거리와 녹색 일자리 확대
- 10 환경·에너지 관련 정부조직의 효율적 개편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

현실진단

- 재생에너지는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최대 77%를 차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2009년 1,620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0.8~1조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태양광과 풍력은 향후 3~5년 내에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 전망(유럽태양광산업협회)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현재 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전력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24% 수준)
- 재생에너지 산업의 매출액 및 수출액은 증가했으나, 공급량과 공급비중은 외국에 비해 매우 낮으며 산업 경쟁력도 태양광 이외에는 미흡

실천과제

- 합리적인 중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에 기초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 2017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까지 끌어올려 이 분야 일자리를 5만명 수준으로 확대
- 제도 시행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확보해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병행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정량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 및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핵심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차세대 기술에 대한 R&D 투자구조 개선
- 열에너지 구매 방식과 적용 대상 등 세부적인 제도운영 방안 마련 후 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도입 추진
-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조합)의 투자 참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공공법인으로 재생에너지재단 설치

기대효과

-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2010년 96.5%)를 낮춰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수입 비용 절감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발전 부문 탄소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재생에너지 산업은 성장세가 매우 빠르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원자력 및 석탄 비중의 점진적 축소와 온실가스 감축

현실진단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국내 원전의 잇단 고장으로 원자력은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라는 인식 확산
- 국내에서는 총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9기가 건설 중 또는 건설 계획 단계에 있음
- 원전 및 석탄발전소 확대 →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 → 원전 및 석탄발전소 증설 → 전기난방 급증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악순환이 지속
-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시작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조치 이행과 감축목표 상향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

실천과제

-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결합에 의한 저탄소 분산형 전원계획으로 전환
-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가동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안정적인 설비예비력 확보 노력

- 가동 중 원전을 대상으로 유럽연합 수준의 엄격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발전비용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발전원별 경제성 평가 후 공개
- 현실적인 여건변화를 감안해 배출전망치(BAU)에 기초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배출권거래제 유·무상 할당 비율 재검토
- 에너지 세제와 전기요금체계 개편, 발전·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감축 이행 정도 점검,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저탄소 소비양식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 마련

기대효과

-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효율의 획기적인 개선, 온실가스 감축, 장거리 송전망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
- 국내 원전에 대한 정밀 안전도 검사를 통해 결함 보완 및 가동 중단 여부 결정의 합리적인 근거 마련. 전원별 발전단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전원믹스 및 국가에너지믹스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산업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에너지 비전 수립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현실진단

- 최근 10년간 국내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3.2% 증가했으며, 전력소비는 그 두 배에 가까운 연평균 5.9% 증가
- 에너지세제와 전기요금 정책의 왜곡으로 열원과 난방연료가 유류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력화 및 연료낭비 유발
- 최근 가정 부문의 총에너지 소비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력소비는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
- 국내 전력소비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전력수요 증가는 에너지 다 소비업종의 높은 비중과 데이터센터의 서버, 삼상유도전동기 등 핵심 장비의 낮은 에너지 효율에 기인
-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육성법을 제정('11.11)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빠르게 갖춘 편임

실천과제

- 발전원가의 재산정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요금 현실화 추진
- 난방용 유류세 인하와 발전용 유연탄 과세 등 난방 유류와 전기에너지간의 왜곡된

상대가격을 교정해 에너지 전력화를 막고 에너지믹스를 합리화

- 이산화탄소 배출기준과 교통혼잡비용 등을 고려한 수송용 세제 개편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수송용 에너지믹스 조정
- 도로건설 등에 편중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출 구조 개혁
- 에너지효율 R&D 및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에너지 과소비 산업 및 제품에 대한 지원은 축소
- 산업·건물 등 부문별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 및 효율 관련 정보공개 확대
- 데이터센터 핵심장비(서버)의 에너지 효율 집중 관리, 변압기 최저소비효율 기준 상향조정, 프리미엄급 고효율 삼상유도전동기 생산·판매 의무화
- 에너지 저장기술, 전력망 IT화 핵심기술, 보안기술 개발에 국가적 지원체계 마련
- 지능형전력망 추가 실증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도시 사업 가속화 및 스마트계량기(AMI)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기대효과

- 에너지 전력화를 억제해 연료 낭비, 전력수급 불안,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에 대처
- 에너지세제 및 전기요금 개편으로 국가 에너지믹스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대규모 SOC 건설 위주의 에너지세제 지출구조 개선
- 저효율 에너지 다소비 기기를 시장에서 퇴출함으로써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
- 지능형전력망의 확대·적용으로 전력의 효율적 이용, 온실가스 감축, 녹색 일자리 확충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호

현실진단

- 녹지 및 깃벌의 감소, 생태계 및 자연경관 훼손, 자연공원 탐방객 급증 등으로 국토의 자연환경 훼손 가속화
-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보호대상과 관할주체에 따라 보호지역이 중복 지정되거나 분산 관리되고 있어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 저하
- 생물서식지의 감소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해 멸종위기 동식물이 246종에 달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등으로 한반도 생태계의 변화가 가시화
- 우리나라는 국내 고유생물종이 10만여 종에 불과하며, EU와 일본 등과 함께 생물자원 빈국으로 분류되고 있어 생물주권 기반이 취약

실천과제

- 전략영향평가 적용대상 및 정보공개 의무항목 확대,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도 도입 등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지역·권역별로 '자연생태계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 대규모 SOC 사업의 타당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제도 강화, 녹지훼손 시 대체

녹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녹지총량관리제도 도입 검토

- 자연환경 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지정을 방지하고 효율성 제고
- 2020년까지 육상/육수 17%, 해양/연안 10%의 자연환경 보호지역 확대(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
- 국가생태계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백두대간·수변·습지·하천·토양, 효율성을 상실한 도로·연안의 훼손된 지역에 대한 생태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
- 멸종위기종·고유종 보전 및 복원 확대, 육상·해양 생물다양성 발굴·모니터링 및 서식지 관리강화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생물자원 발굴 및 생물자원산업 육성

기대효과

- 국토의 생명력 강화 및 국민의 생태복지 증진
- 국토의 이용과 보전,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성·투명성·효율성·일관성 제고
- 자연환경 보호지역에 가해지는 인위적인 압력 완화를 통한 생태계 보호
-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면적확대로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태계 보호 및 관리능력 강화
- 생물다양성 증진과 신규 생물자원의 발굴로 생물자원의 부국으로 성장
- 바이오경제시대에 대비해 국가 생물주권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물·자원 순환체계 개선 및 도시 녹지 확충

현실진단

- 도시화·난개발 등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인한 도시홍수 빈발, 하천 건천화, 지하수 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해 물 순환체계 개선 필요
- 수량과 수질관리의 이원화, 수리권과 물 값 분쟁,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 물 관리 예산의 중복 및 편중투자 등 산적한 현행 물 관리제도의 개편이 시급
- 4대강 사업으로 물 흐름 정체구간이 증가해 녹조류 대량 번성 등 수질 악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4대강 사업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평가 필요
- 4대강 사업에 이어 지류정비 사업 및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수변구역 개발사업으로 4대강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악화 우려
- 최근 5년간('05~'10) 국내 총 폐기물발생량은 연평균 약 4.2% 증가했으나, 폐기물 재활용률은 정체 상태에 있는 등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 미비

실천과제

- 지자체의 물 순환체계 복원사업 지원 및 관련 제도 개선
 - 인공습지·생태유수지·빗물저류시스템 등을 설치해 도시지역의 물 순환체계 복원
 - 불투수층 면적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토지이용별 생태면적률 상향조정 검토
- 신규 대형 댐 건설 중단 및 기존 댐과 보의 효율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
- 하구역 생태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

- 4대강 사업에 따른 환경성·경제성·기후변화 취약성·안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와 평가를 토대로 4대강의 습지 복원을 포함한 생태적 건강성 회복 검토
- 4대강 사업방식을 답습하는 지류하천 정비와 수변구역 개발 등 문제가 되는 추가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대책을 수립
- 폐전기·전자제품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재활용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
- 농어촌 마을 단위로 영농어폐기물 공동 수거·집하용 클린하우스 설치
- 뉴타운 건설 등 기존 도시 재개발 방식의 전면 재검토 및 친환경 개발 방식 마련
- 지역·계층 간 녹지 접근성 격차 해소를 목표로 도시 취약지역의 녹지 공간 확충

기대효과

- 모든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제공
-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방지 및 훼손된 수생태계 복원
- 하구역 수질오염 개선 및 하구 생태계 복원
- 4대강 사업과 후속사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4대강 생태계 회복 및 바람직한 물 순환 체계 복원
- 자원 재활용률을 높여 경제적 편익과 일자리 창출 동시 추구
- 영농어폐기물 안전처리 및 재활용으로 농어민 건강과 농어촌 생태계를 보호하고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
-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 및 쾌적성 제고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녹지 공간 활용의 지역·계층간 형평성 보장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에너지 협력 강화

현실진단

- DMZ 일원은 한반도 생물종의 50% 이상이 서식하는 지역으로서 남북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공동관리 시급(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만성적인 에너지·식량난,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 부족 등으로 북한주민들의 기본 생활과 생존에 위협이 가중
- 북한은 산림과 토양의 황폐화, 하천관리 부실로 매년 홍수 등 자연재해에 직면해 있으며, 한반도 전역의 기후변화 적응력 약화 초래
- 북한의 임진강과 북한강 상류지역 댐건설과 무단방류로 임진강·북한강의 수량, 수질, 수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증대하고 인근주민 및 탐방객들의 안전 위협

실천과제

- DMZ를 생명평화지대로 지정하고 남북한 공동으로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을 추진
- DMZ 일원을 한반도 생명평화 관광벨트로 조성
 - 철원-평창-설악산-금강산-원산을 연결하는 동해 생명평화 관광벨트 조성
 - 남북한 공동으로 설악산과 금강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신규 건설 지원
-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 및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조사 및 지원 사업 추진
- 남북 환경·기상·백두산 화산 관측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 가칭 '남북 공유하천 공동 이용 및 관리위원회' 공동 설립 등 남북 공유하천 공동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 임진강·북한강의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및 응급대응 시스템 설치·운영

기대효과

- DMZ를 분단·전쟁·파괴의 상징에서 통일·평화·생명의 공간으로 전환시켜 남북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기반 확대에 기여
- 에너지부족·식량난·환경황폐화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 환경 친화적인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 확대
- 임진강과 북한강 상류지역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
- 장기적으로 남북 공유하천 수자원 배분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



기후변화와 환경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현실진단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및 질환 증가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과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사회적 안전망은 약화 추세
- 많은 지역의 오염수준이 국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 피해 우려 지속
- 생활용수용 지하수와 마을상수도에서 선진국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 검출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 위협
- 구미지역 불산 유출사고 등 주민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환경사고의 예방·대응·보상을 위한 관리체계가 허술

실천과제

- 기후변화 적응정책 전담기구 설치 운영 등 기후변화 적응시스템의 체계화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
- 법령, 정책, 계획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에 기후영향평가 항목 추가 검토
- 기후변화의 건강영향 감시 및 피해 예방 대책 강화
- 농축수산 및 농축어민 재해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 기후변화 피해저감 대책 강화
- 2030년까지 국가 환경기준의 초과 지역 제로화를 위한 정책 추진
- 국가차원의 '아토피질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지원 제도 강화
- 먹는 물 기준 신규 검사항목에 라돈 등 방사능 물질을 포함시키고 저농도 방사성물질 함유 폐기물에 대한 법적 관리기준 도입
- 화학물질 관련시설의 독성·위해성·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상시 감시체제 마련
- 가칭 '화학물질안전청' 또는 권역별 '화학물질안전센터' 설치 검토
- 화학물질사고 등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법제 및 환경보험제도 도입

기대효과

-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보호
-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통합성과 효율성 및 집행력 제고
-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진단 및 치료 체계 개선
- 방사성 물질 등 오염물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 환경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보상 체계를 개선해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보호



취약계층의 환경·에너지복지 실현

현실진단

- 깨끗하고 안전한 공기, 물, 에너지, 생태계 등은 인간의 생존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보편적 복지의 근간임
- 소득과 학력수준이 낮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어린이·노인 등 생물학적 약자의 환경오염 노출정도가 높고 환경성 질환에 취약
- 서울시 침수지역 수해주민의 47.5%가 소규모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는 주로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서 발생
- 물과 에너지의 접근성과 비용부담에서 계층과 지역 간에 존재하고 있는 격차와 불평등 해소 시급

실천과제

- 물과 에너지 등 공공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관련 법규에 명시해 환경·에너지 복지의 법·제도 기반 마련
 -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복지' 개념 명문화, '에너지기본법'의 개정, '환경복지 기본계획' 및 '에너지복지 기본계획' 수립

- 환경·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저소득가구 전기요금 할인 방식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량제로 전환
 -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확대·추진하는 등 120만 가구로 추정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제도 강화
- 환경서비스의 지역·계층간 격차 해소
 - 도시가스 미 보급지역에 배관 인입비용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인프라 확대
 - 상하수도 요금의 지역격차 등 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

기대효과

- 물과 에너지 등 공공재의 복지 강화로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
- 깨끗하고 안전한 물과 에너지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확대
-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비용 부담 완화
- 계층·지역간 환경서비스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환경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악순환 차단



친환경 먹거리와 녹색 일자리 확대

현실진단

- 2010년 현재 식량자급률은 26.7%에 불과하며, 농업경시정책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기반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음
- 최근 10년간 국내 농업 기상재해 피해 복구비는 연평균 6,705억원에 달하며, 벼 잠재수량은 2011~2040년 6.4%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지난 10년간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7% 증가했으나, 국내 수산물 생산량 증대는 한계에 도달
-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의 확산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빠르게 증가
- 환경 분야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 기술력 확보를 명분으로 대기업 지원이 강화되면서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고용 효과가 미비한 상태

실천과제

-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수산업 지원 확대 및 농어촌 경관·자원 보전 대책 마련
 - 화학비료와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 지원과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보급
 - 고탄소·노후 어선을 저탄소·신형 어선으로 교체해 어업비용을 절감하고 어민 복지 증진
- 로컬푸드 소비와 직거래 활성화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친환경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확대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농어민 소득 보장
- 녹색기업 육성 및 환경전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일괄 발주되고 있는 환경시설 공사 중 환경전문공사를 건축·토목공사와 분리 발주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 검토
- 주민 참여형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활성화
- 재생에너지 시설 관리, 환경교육 등 환경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 추진

기대효과

-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
- 농수산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 식품가격 안정과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
-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로 저소득층 고용기회 확대
- 환경전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환경·에너지 관련 정부조직의 효율적 개편

현실진단

- 기후변화의 가속화, 대규모 국토개발 및 에너지 소비의 급속한 증가, 원전 확대정책의 부작용 및 환경·에너지 불평등의 해소 등은 환경·에너지 행정이 당면한 현안 과제로 부상
- 공급 위주 국토·에너지 개발정책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돼 왔으며, 부처 업무의 분산·중복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

실천과제

- 공급·이용 관련 업무와 수요관리·감독규제 업무를 분리하고,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업무의 통합·조정 관점에서 개별부처의 개편 검토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조정하는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방안 검토
- 국가의 핵심 환경·국토·에너지정책의 방향 설정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도하고 관계부처는 정책을 집행하는 체계 고려

기대효과

- 환경·국토·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통합성 제고
- 환경·국토·에너지정책의 조정 기능 강화로 불필요한 부처 간 갈등 방지
- 업무의 분산·중복 해소를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요인 제거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업·농어촌

3대 목표

- 1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 2 농어촌 사회의 활력 증진과 기초복지 확충
- 3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10개 정책약속

- 1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먹거리 종합관리 체제 구축
- 2 직접지불제도 확충을 통한 농어가 소득 보장과 경영 안정화
- 3 환경보전형 생산시스템으로 전환
- 4 협동을 기초로 한 푸드시스템 혁신
- 5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과 R&D 혁신
- 6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증진
- 7 농어촌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 8 생활권이 재생되고 경관·환경이 보전되는 농어촌 공간 재창조
- 9 거버넌스·지역 중심의 농정추진체계 구축
- 10 상생의 국제 농어업 협력체계 구축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먹거리 종합관리 체제 구축

현실진단

-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먹거리의 공급 안정성, 안전·안심, 적절한 식생활·영양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먹거리 관련 제반정책의 통합적 관리가 중요
- 우리나라 현실은 통합적 전략이 부재한 채 부처간 분산관리에 따른 비효율 노정
- 사회 전반의 식량안보 의식 결여로 먹거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 심화
 - 2011년 곡물자급률은 22.6%로 OECD 최하위권

실천과제

- 국가식품계획 수립 및 제도화
 -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식품기본법'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새 기본법에 '국가식품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 식량자급력의 강화
 - 제도화를 통한 중장기 식량안정공급체계 구축 : 기본방향을 국내생산 잠재력의 확충에 두고 적정자급목표를 명시
 - 곡물자급률 제고를 위한 필요농지 확보를 위해 보전농지 총량을 설정하고 개발 및 전용을 규제

- 국내 생산 확대 여력이 있는 밀·콩·보리의 증산, 조사료 생산량 확대 및 급여비중 제고를 통한 수입사료곡물 수요대체 추진
-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일시적 충격 흡수장치로서 쌀 이외에 밀·콩·옥수수로 공공비축을 확대
- 저소득층의 식량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양안전망 확충 관점에서 식품권(food stamp)제도 도입 검토

기대효과

-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식품업무의 분산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
- 국내곡물자급기반 확충과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 완충장치 확보
- 곡물가격변동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먹거리 불안 완화



직접지불제도 확충을 통한 농어가 소득 보장과 경영 안정화

현실진단

- 농가소득이 하락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59%에 불과하고, 양극화의 진행으로 빈곤농가가 증가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농가가 23%에 달함
- 규모를 키워 성장한 농가들은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에 직면
-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는 쌀에 편중되고, 공익성 진작을 목표로 하는 직불제가 다수 도입되었으나, 정책 체계에서는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고 있음
- 경영을 안정화하는 장치는 쌀의 가격변동에 대해서만 존재하고, 농산물 수입확대와 기상이변 및 각종 질병으로 소득불안정 심화

실천과제

- 직접지불제도를 개편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농어민의 실질소득을 향상
 - 직불금은 농어민의 실질소득 향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재 수준보다 큰 폭으로 확대하되, 지급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해 직불금이 단순한 소득이전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위험관리제도의 확충으로 농업경영의 안정화 추진
 -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 제도를 도입해 가격변동과 물량변동 위험을 통합해 농업 수입 안정화 도모
 -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곡물 수입 안정장치 마련
 - FTA 피해보전 직불금 현실화 :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을 향상

기대효과

-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확보되는 농업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빈곤농가를 줄이고, 농가소득 안정화
- 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고 농촌경관 개선이 촉진되며, 조건불리지역의 인구유출이 억제되고 농지와 토양 등 자원 보존
- 중규모 이상 농가의 경영안정으로 지속적 발전과 농촌활력 증진



환경보전형 생산시스템으로 전환



현실진단

- 화학비료·농약의 과다투입, 에너지과소비 등 고투입, 고비용, 환경오염형 생산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
-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불안정성 심화
- 수입곡물 의존형 축산이 자급률 하락의 주요 요인이며, 가축분뇨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상황
- 구제역, 조류독감 등의 반복적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엄청난 사회적 비용 발생

실천과제

- 2013년을 '환경친화형 푸드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로드맵 설정
 - 중장기 생산정책 기초를 생태·자원순환형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 30% 달성을 목표로 함

- 기후변화 대응형 농어업생산체제 구축
 - 기후변화 대비 작물 생산기반 정비
 -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실시
 -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제도 활용 강화
- 가축 분뇨대책 및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수립·시행
 - 축산허가제와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통한 축사환경 개선 및 양분총량제 실시를 검토
 - 가축분뇨 국가통합관리체계 구축과 바이오매스 종합전략 수립
 - 가축전염병 종합관리대책 수립

기대효과

-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산·소비 구조 확립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및 다기능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 생산시스템의 대응력 확보
- 해외의존형, 환경오염형 축산구조의 극복



협동을 기초로 한 푸드시스템 혁신

현실진단

- 지역산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이 늘고 있으나 안정적 판로가 확보되지 못해 지속적 성장에 한계
- 신용과 경제 사업의 분리라는 농협개혁은 금융산업 개편 차원에 머물고 경제사업이 지주회사체제로 개편됨으로써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의 정체성 정립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미해결인 채 남아있음
- 대형마트 중심의 농산물 소매시장에서의 교섭력 제고를 위한 전국적인 조직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

실천과제

- 도시의 생활협동조합 육성으로 친환경 및 지역산 농산물 직거래 기반 확충
 - 읍·면·동 단위 생협 및 아파트 협동조합 등 소비자의 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 생활협동조합 등 기존 소비자협동조합의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 로컬푸드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 학교급식·공공급식·공공조달 영역의 친환경·국내 농산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 농민장터, 농가직판장, 꾸러미사업, 농가식당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직판시스템 구축 지원과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 농협을 경제사업 중심조직으로 혁신하고 마케팅보드(유통위원회) 설치를 추진
 - 농협 경제지주를 경제연합회로 전환하고 상호금융연합회를 신설하며 조합원자격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역연합, 품목연합 및 품목별 전국연합의 활성화를 통해 전국적인 시장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협법 개정 검토
 - 유통명령, 유통협약 등을 마케팅보드를 중심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수급과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기대효과

- 소비자 생협조직 활성화로 친환경·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
- 로컬푸드 활성화로 소비자의 먹거리 신뢰 제고
-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로 조합원(농민)의 수취가격 제고
- 마케팅보드(유통위원회) 법제화로 농어가 소득 안정화와 생산, 공급의 안정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과 R&D 혁신

현실진단

- 농고, 농업계 전문대학, 농대 등 직업기초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농업 및 관련 산업 분야로의 정착은 부진
- 농업인력정책은 소수의 경쟁력 있는 개별농가 육성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지역 단위 경영주체 부족문제 해결은 곤란
- 새로운 인력으로 귀농·귀촌자에 관심이 집중되나 체계적 지원정책 미흡
- 국가적 목표와 전략 중심의 연구개발 기획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농업 R&D와 지도 기능이 현장의 요구와 괴리된 채 진행되며,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미흡

실천과제

- 농업교육을 미래 농산업인력 육성체제로 철저히 개편
 - 농고 교육은 도별 '농업 마이스터고' 체제를 갖춰 기초인력을 집중 육성하며, 한국농수산 대학에 준하는 지원 수준의 도별 농업전문대학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
- 농가등록제의 실시와 지역단위 농업인력 육성종합계획 수립
 - 모든 농업경영체의 교육이력, 정책지원내역, 소득 등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통합 관리하며 등록된 농업경영체만 정책 대상으로 함

- 지역별로 특화된 농업에 적합한 지역단위(시·군·도) 인력 육성계획 수립
- 제도적 지원체계 정비를 통한 범정부적 귀농·귀촌정책 추진
 - 1시·군-1 귀농·귀촌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커뮤니티형 집단 귀농·귀촌 촉진
- 농식품 R&D 기획 체제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철저한 연구 단계, 연구 부문별 역할 분담 체제를 강화하며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극대화
 -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체계적인 R&D 협력 강화
 - 기술보급체제를 혁신해 농업지식 클러스터와 연계,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 시행
-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농식품 융합의 지식클러스터 체제 구축
 - 산학관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집약된 지식혁신시스템에 기초해 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대효과

- 체계적인 농업후계 인력 확보, 지역단위 인력 육성 및 관리 시스템 완비
-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R&D혁신과 지역농산업 재조직화·협동클러스터화를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시장에 대응하는 협동 지역경제망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증진

현실진단

- 농촌의 고령화, 과소화로 공동체가 붕괴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회사, 협동조합 등 새로운 주체의 대대적 육성이 시급
- 지역개발 관련 중앙부처별 사업이 시·군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사업간 중복과 자원 배분의 왜곡현상 발생
- 지자체마다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부인재 활용을 위해 '계약직공무원제도' 수요가 늘지만 제도적 한계에 봉착
-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위한 농어업인의 가공·판매 등 진출 수요 증대

실천과제

- 농어촌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 사회투자금융공사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를 지원
-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사업 등을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중간지원조직의 시·군단위 설립을 제도화

-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인재 유입 촉진
 - 기초지자체 단위의 주민역량강화 종합관리체계 구축
 - 계약직공무원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귀농·귀촌인의 마을간사 채용 지원
 - 농어촌의 6차산업화로 부가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
 - 농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제도와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 6차산업 : 1차산업(농업생산 등), 2차산업(식품제조업·특산물가공 등), 3차산업(유통·관광·음식업 등)을 결합한 개념

기대효과

-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춰 조정해 정책 효율성 증대
-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동체 회사 등 다양한 지역주체 활성화
- 내실 있는 주민교육의 실행과 외부인재 유입 활성화
-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및 농외소득원 확대로 경제적 발전 동력 창출



농어촌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현실진단

- 기초생활여건, 의료, 교육, 문화, 복지의 낙후로 농어촌 주민 삶의 만족도 저하
- 고령화, 취약계층 및 빈곤세대 증가로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안 가중
- 의료서비스 수요는 증가하지만 양적·질적 공급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
- 농어촌지역의 교육 공동화 현상 심화

실천과제

-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
 - 중앙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
- 농어촌 주민 대상의 복지안전망 강화
 - 고령농가와 영세농가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농지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4대 사회복지망 확충
 - 농작업 재해보상을 위한 제도 및 보상체계 강화
 - 고령농, 영세농,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 농어촌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주민의 보건의료체계 혁신
 - 농어촌 지역의 공공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 농어촌 지역 1시·군당 1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지원
-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주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 1면 1초·중학교 유지 제도화
 - 농어촌 주민에 대한 시·군 거점 중심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기대효과

- 도시와 농촌 간 삶의 질 격차 해소 및 지역 격차 해소 달성
- 고령영세농, 여성농업인,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 공공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 및 의료 복지전달체계 개선
- 농어촌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주민의 평생학습기회 보장을 통해 삶의 질 개선



생활권이 재생되고 경관·환경이 보전되는 농어촌 공간 재창조

현실진단

- 공간과 토지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부재해 계획간 충돌과 유사 사업의 중복 투자가 발생하며, 방향성 없이 단위사업으로 개발돼 농촌 자연환경과 경관이 훼손되고 있음
- 농어촌 중심지인 읍·면의 기능 저하
- 주민 공동체의 자율적 규제시스템이 없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농어촌의 어메니티가 광범위하게 훼손

실천과제

- 농어촌 공간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정비계획제도의 수립 및 시행
 - 농어촌만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제도를 구축해 도시, 건축, 조경, 환경, 농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하는 참여형 농어촌 재생계획을 수립
- 농어촌 중심생활권의 재생
 - 농어촌 정주여건을 고려한 중심지 체계 정비

- 주민의 자발적 어메니티 보전활동 지원
 - 지역 자원보전관리협약 제도 도입과 비영리조직 중심의 '1행정리 1경관협약' 운동 추진
 - 환경·경관·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지속적 보완·확대와 토양 및 수자원 보호, 생물다양성 유지, 하천 오염관리, 생태 통로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직불제 개발
- * 어메니티(amenity) : 자연·문화·복지 등 삶의 쾌적함을 주는 여러 요소들

기대효과

- 농어촌 난개발 억제
- 농어촌 생활중심지가 살아나 삶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농촌공간이 가능
- 사라지는 경관, 자원, 전통의 발굴·보전·관리를 통한 농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거버넌스·지역 중심의 농정추진체계 구축

현실진단

- 농정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가 사실상 없으며, 현안 대응에 급급한 ‘프로그램 농정’, ‘개별사업의 설계주의 농정’으로 일관
- 문민정부 이후 지속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 정부주도의 일방통행식 농정 전개
-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와 책임성 제고,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 달성하는 선진형 거버넌스 필요성 증대
-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메뉴 방식의 농림사업 관행으로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적 행정이 지속됨

실천과제

-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식품기본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중장기계획에 입각한 정책 추진
 -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전체예산 증가율에 맞춰 늘려가며, 예산의 일정부분을 기본계획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으로 편성해 안정적 확보

- 민관거버넌스로서 농어업·농어촌·식품특별위원회 설치
 - 중장기 농정 비전과 목표,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제시와 국가식품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 농어업 회의소 추진
 - 시·군, 시·도 농어업 회의소의 단계적 설립과 전국회의소 설립을 추진
 - * 농어업 회의소 : 농어업인을 대표해 농어업정책에 참여하는 민간기구(8개 시군 시범사업 중)
- 지방농정의 강화와 농정추진체계의 재정비
 - 농림사업을 어젠다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농정을 강화함. 특히 현행 포괄보조방식의 농촌 개발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중기단위 국가 농촌개발 프로그램 운영
 - 농정지원 조직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기구를 설치

기대효과

- 거버넌스에 의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 구조 확보
- 농어업인의 단일한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기능을 농어업 회의소로 이관해 농정 효율화 추구
- 중장기 계획에 입각한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의 다양한 필요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적 지역농정 시스템 구축



상생의 국제 농어업 협력체계 구축

현실진단

- 전방위적 FTA 추진에 따른 광범위한 농어업 분야 피해 예상
- 글로벌 식량위기, 가축질병 등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한 동북아 농업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이명박 정부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남북 농업협력 필요성 증대

실천과제

- 경제논리 보다는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신중한 농업협상 접근
 - 한중 FTA의 신중한 추진으로 농어업 피해 최소화: 민감품목 예외 추진
- 동북아 농업협력 강화
 - 한반도 식량안보를 위한 북방농업 협력 추진
 - 기후변화, 물 부족, 가축질병 해결을 위한 한중일러 공동협력 강화
- 남북 농업협력을 통한 통일 대비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재개
 - 북한농업의 재생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기대효과

-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량확보 방안 마련과 동북아 국가간 상생의 농어업 협력체계 구축
- 남북 화해협력 촉진과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구축 및 민간 교류협력 확대

공정과 상생의 디지털 미디어 세상

3대 목표

- 1 언론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보장
- 2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진
- 3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 조성
콘텐츠산업 중점 육성

7개 정책약속

- 1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 2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 보장
- 3 보편적 서비스 강화와 미디어 다양성 구현
- 4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체감 통신비 인하
- 5 공정·상생의 미디어 생태계 조성
- 6 콘텐츠 핵심인력 양성 및 아시아콘텐츠 허브로의 도약
- 7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및 자원 확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현실진단

- 언론 자유국 지위 상실 등 언론 자유 후퇴
- 정부 비판 보도 및 게시물에 대한 공권력의 형사처벌 시도
- 불공정 방송과 제작 자율성 위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편향적·자의적 심의
- 해직 언론인 대량 발생과 방송사 파업

실천과제

-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 보장
 - 정책비판을 이유로 한 정부의 대언론 소송 금지
 - '진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 일반인의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보도·제작 자율성 보장
 - '종사자와 합의에 의한 편성위원회 설치' 등 방송편성규약 구체화
 - 부당 해직언론인에 대한 복직 등 지위 회복

-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자율규제 확대
 -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
- 방송통신심의제도 개혁
 - 방송의 공공성 심의 기능 유지
 - 통신심의회는 민간자율 및 공동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 심의위원회에 대한 정당 추천 배제
 - 심의위원 수 확대 및 세대별 성별 다양화, 시청자 참여 심의 도입

기대효과

- 정부와 언론의 정상적 관계 정립 통한 언론자유 발전
- 의사표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장 형성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 보장

현실진단

- 공영방송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시비 격화
-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에 대한 정권의 지배 논란
- 방송영역 공적 가치의 현저한 퇴조
-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불안정성

실천과제

- 방송법 개정 통한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 지상파방송을 공영과 민영으로 법적 분리하고 차별적 책무 부여
 - 공영방송을 방송정책의 핵심영역으로 규정
- 공영방송 이사진 및 경영진 선출방식 변경
 - 공영방송 이사진은 국회의 합의를 통한 추천으로 구성
 -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
-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
 - 수신료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검증 및 방송의 질적 발전 보장을 전제로 한 합리적 수신료 결정

- 공영방송 편집권 독립 명시
 -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등 공영방송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의 편집권 독립
 - 공정성 논란의 경우 이사회 자체적인 진상조사 및 실질적 규제 강화

기대효과

-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정치적 독립성 보장
-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방송발전의 동시 추구



보편적 서비스 강화와 미디어 다양성 구현

현실진단

- 디지털미디어 정보격차가 사회계층 간 격차로 확대
- 국민의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 미흡
- 남북교류 등 사회통합을 선도해야 할 언론의 역할 미흡
- 지역공동체 및 소수계층 정보소통 매체 부족

실천과제

- 디지털 미디어 복지 제고
 - 디지털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 및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추진
 - 라디오 및 유료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 e-클린(건전 인터넷) 환경 조성
 - 인터넷 자율규제 강화 통한 이용자 선택권('보지 않을 권리') 보장
 - 필터링(유해정보차단) S/W의 무상 보급 확대 및 기술 지원

-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 디지털 과몰입(게임 몰입)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제도 마련
 -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힐링 프로그램' 마련
-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실질화 통한 남북교류 강화
 - 남북 서울, 평양에 양측 언론사 특파원 공동취재본부 시범 설치 추진
 - 남북 언론 간 교류 협력 활성화
- 취약매체 및 지역밀착형 매체 지원 통한 다양성 구현
 - 지역, 계층, 인종, 취향 등을 고려한 소출력의 공동체 라디오방송 확대 설립 추진

기대효과

- 디지털미디어 격차 해소 및 복지 강화 통한 이용자 복지 증진
- e-클린(건전 인터넷) 환경 조성, 미디어교육 강화
- 언론 분야의 교류와 소통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
- 지역방송과 취약매체 지원을 통한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체감 통신비 인하

현실진단

- 가계 통신비(가구당 통신비) 증가
 - 2012년 2/4분기 가구당 통신비는 월평균 15만 4400원으로 2011년보다 9.3% 증가
- 통신시장 독과점 체제 고착화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 미흡
- 지나치게 복잡한 무선통신 요금체제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약화

실천과제

- MVNO 활성화 통한 경쟁 촉진 및 서비스 경쟁 유도
 - 통신망 도매대가 인하 (원가산정방식 도입 검토 등)를 통한 신규사업자 유입 촉진
 - 경쟁 제한하는 각종 요인 개선 (의무제공사업자 범위 확대 등)
- 체감 통신비 지수 도입 및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체감 통신비 지수' 도입 통한 통신비에 대한 지속적 점검 체제 구축
 -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통한 다양한 단말기 유통 유도
- 통신요금 산정의 투명성 제고
 - 실질적이고 투명한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 체계 구축

- 소비자 선택권 강화
 - 간편한 요금제, 서비스 비교 등 소비자 정보 강화
 - 무료 음성통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 공공지역 무료 WiFi망 확대

기대효과

-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유도
 - MVNO 활성화 통한 다양한 통신서비스 도입
- '체감통신비 지수' 도입 통한 실효성 있는 통신비 대책 수립
 - 다양한 단말기 보급 등 소비자 중심의 유통질서 구축
- 투명성 강화 등 이용자 주권 강화
 - 무료음성전화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 공공지역의 무료 WiFi 망 확대 통한 이용자 복지 제고



공정·상생의 미디어 생태계 조성

현실진단

- 건전한 경쟁질서 미확립에 따른 불공정한 방송통신시장 환경
- 시장지배적 유통사업자가 생태계를 지배하는 낙후된 산업 현실
 - 콘텐츠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불공정 생태계'
- 방송통신 융합, 스마트TV 도입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방안 미흡

실천과제

- '망 중립성 도입' 등 콘텐츠와 이용자 중심의 법·제도 정비
 - 방송법과 IPTV특별법 통합 및 스마트TV 도입 등에 따른 새로운 규제체제 도입
 - 방송, 통신, 제조사, 포털 등의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 미디어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강화
- 방송통신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및 적절한 수익배분 확립
 - 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및 수익배분 개선
 - 콘텐츠 비정규 인력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 콘텐츠산업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현실화 및 상생질서 구축
 - 방송 등 관련업종의 표준계약서 재점검 통한 실효성 강화

기대효과

-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공정하고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체제 확립
 - 이용자가 서비스와 콘텐츠를 자유롭게 접근 및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서비스, 콘텐츠 경쟁 체제를 유도해 스마트미디어 산업 발전 기대
- 방송통신시장의 성장동력을 확충해 글로벌시장의 경쟁력 확보



콘텐츠 핵심인력 양성 및 아시아콘텐츠 허브로의 도약



현실진단

- 콘텐츠 핵심역량인 창의와 기획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미흡
- 협소한 내수 시장 및 콘텐츠 사업자의 영세성을 인한 성장 동력 한계 노출
- 미래 콘텐츠 기술 등 R&D에 대한 지원 부족

실천과제

- 콘텐츠 핵심인 창의성과 아이디어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스토리 자원 양성' 등 콘텐츠 R&D 집중 지원
 - 창의성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분야의 스토리텔러 등 인재 육성
- '아시아 콘텐츠 허브' 구축
 - 콘텐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
 - 글로벌 문화·콘텐츠·미디어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 보완
 - 국내외 맞춤형 콘텐츠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연계 시스템 구축
 - 디지털C세대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확보
 - 멀티미디어콘텐츠 포맷 집중 개발
 - Cultural Technolgy 등 융합 콘텐츠 R&D 투자 지원

기대효과

-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핵심역량 지원 통한 토대 강화
- 아시아콘텐츠 허브로 도약해 글로벌 교류 및 진출 확대
- 융합 콘텐츠개발 강화 및 R&D 투자 확대 통한 미래콘텐츠 시장 주도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및 재원 확대

현실진단

- 콘텐츠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지원' 시스템 미흡
 - '아이디어 가치'에 대한 평가 및 지원시스템 미흡
 - 콘텐츠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안정망 제공 미흡
- 국가경제를 선도할 핵심 주력산업인 미디어·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미흡
 - 2011년 기준 콘텐츠분야 총 예산은 6004억원 (문화부, 교과부, 방통위 등 포함)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0.2% 수준에 불과

실천과제

- 콘텐츠 가치가 존중되는 지원 시스템 구축
 - '콘텐츠 아이디어뱅크' 구축 및 운영 : 아이디어와 투자자 사이를 적극 연계, 아이디어 시장 최소화
 - 콘텐츠 종사자 (영세사업자 포함)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육성
 - 창작물을 담보로 투자가 가능한 '콘텐츠 완성 보증제' 활성화

- '창의혁신예산제도' 도입
 - 콘텐츠 산업 특성이 반영되는 선진적 예산 및 감사 시스템 도입
- 미디어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
 -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일부 예산 조정 등
- 콘텐츠 관련 민간 투자 촉진
 -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

기대효과

- 콘텐츠 가치가 존중되는 시스템 강화 통한 산업발전지원
- 콘텐츠 산업 특성을 반영한 내실있는 지원
-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촉진해 관련 산업 발전 도모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 생태계

3대 목표

- 1 혁신경제의
기반으로서
IT/SW 생태계 구축
- 2 사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자 환경 보장
- 3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확산

4개 정책약속

- 1 혁신경제
IT 생태계 조성
- 2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강국
- 3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및 통신 정책
- 4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는 IT



혁신경제 IT 생태계 조성

현실진단

- 독과점인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직적 결정에 따른 비효율과 불투명성
- 작은 가게들의 IT경쟁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
- 생활 IT교육을 통해 IT친화적 사회문화 형성이 절실한 상황
- 혁신역량이 있는 IT 벤처기업들의 집중발굴이 시급
- 대기업 SI중심으로 시장 집중이 강화되고 중소 SW기업의 이익률 저하현상

실천과제

- 혁신적 IT 생태계를 위한 망 중립성 확보
 - 시민에서 정부까지 모든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칭) '인터넷망 열린위원회' 설립을 법제화 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인터넷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차별행위를 금지

- 일자리가 늘어나는 IT 생태계 구축
 - 홈페이지나 SNS를 운영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가칭 '작은가게 온라인 활용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립하여 작은 가게들이 웹 및 소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 군에 IT전문연구소를 설립, 민군합동으로 IT첨단기술 및 사이버 국방을 위한 기술을 집중 개발
- 평생IT교육 및 생활IT교육 확산
 - 대학교 관련학과에 기초연구소 및 산학협력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년층이 상을 대상으로 한 생활IT 교육을 지원
- 혁신역량이 있는 IT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확대
 - 창업초기 벤처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활성화
- SW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적합 업종 확대
 - 공정거래위를 통해 소프트웨어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지원

기대효과

-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 보장
- 혁신 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고 인터넷 시장의 시장 혁신을 강화
- IT 저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SW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강국

현실진단

- 한국 특유의 정부 주도 인증체계는 한국 IT의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예로 과도한 액티브엑스 사용은 웹편의성을 낮추고 있음
-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디지털사회 지적 자산 확대 및 활용이 미흡한 수준임
- 현재의 저작권제도는 창작자보다는 각종 저작권협회에 이득이 돌아가는 체계임
-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농어촌 주민, 외국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디지털 접근 기회 및 활용 능력의 보장이 취약함

실천과제

- 인증/보안기술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
 - 액티브 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지원
 -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보안 부실을 방지

- 은행, 카드사 등이 인증/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 다양한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경 조성
-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
- 공공정보 표준화, 개방 및 공공정보 활용 지원
 - 공공정보를 표준화하고 비밀이 아닌 공공정보는 온라인 공개
- 창작자의 디지털 저작권 존중과 사용자의 공정이용 확대
 - 현행 저작권법을 참여, 공유, 협력의 방향으로 개정
- 디지털 격차 극복과 차별 없는 웹 접근성 확대
 - IT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장애인과 장년층 등을 위한 IT 평생 교육 지원
 - 농어촌과 영세 도시지역민을 위한 무료 무선 접속점 설치 지원

기대효과

- 다양하고 안전한 보안 기술을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이용 편익증가
-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정부정책의 투명성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 창작자에게 공정한 대가가 지불되고, 사용자에게는 자유로운 소비의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문화 환경조성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및 통신 정책

현실진단

-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가격 체제로 인해 소비자의 통신비 가계 부담 증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회는 언론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음

실천과제

- 시장 투명성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통신요금 하락 유도
 - 이동통신사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MVNO 활성화 및 무선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의 도매 판매제를 허용
 - '이동통신 요금 및 무선 데이터 요금 내역제'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가격 결정권을 확대
 - mVoIP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통화복지를 높이고 이동통신 음성 요금 부담을 축소
 - 단말기 보조금 정보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규제를 통해 통신시장의 비가격경쟁 요인 제거
- 정부주도 인터넷 행정심의회에서 업계 자율규제 확대

기대효과

- 시장투명성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통신비 가계 부담을 줄임
- mVoIP 허용을 통한 실질적 통화요금 인하
-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 유도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는 IT

현실진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경향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방향
- 게임 몰입, 사생활 침해 등 IT역기능에 대한 우려

실천과제

-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정비 및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 정보제출 요구를 포함한 조사권, 개인정보 수집자에게 수정, 삭제,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개인정보의 유통 금지권, 침해신고의 접수 등 개입권을 2011년 설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부여
- 역기능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안 마련
 - 게임 몰입 및 치유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연구 및 공론화하고 게임업체들의 참여를 유도

기대효과

-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개인정보의 유통 피해를 줄임
- 게임 몰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기능 해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1.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2.
세계로 뻗어가는
평화외교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3대 목표

- 1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를 선순환적으로 해결
- 2 화해협력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 구축
- 3 북방경제의 블루오션 개척

6개 정책약속

- 1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의 병행 추진
- 2 서해 평화정착과 남북한 신뢰구축 제도화
- 3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 구축
- 4 인도주의, 인권문제의 실질 해결
- 5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제도화와 초당적 협력
- 6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방경제 시대 개막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의 병행 추진

현실진단

-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이 마치 냉전시대로 회귀한 듯 불신과 전쟁의 위협으로 최악의 상황
- 전투 상태를 잠정중단하는 정전협정은 체결됐으나 전쟁 상태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규정하는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못해 법적인 전쟁 상태가 지속
-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및 각급 남북합의서의 이행이 중단된 상태
- 6자회담이 4년 가까이 개최되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 시급

실천과제

- 남북대화를 바로 재개하고 정상간 핫라인 설치
 - 남북장관급회담을 정부간 대화와 협상의 기본 틀로 회복하고 정례화
 -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정상간 핫라인 설치를 최우선적 과제로 협상
 - 인도주의적 협력,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정부 출범 직후 바로 개최

-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 마련
 -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남북관계의 자산을 존중 이행하는 정책의지를 표명
 - 남북한과 미중이 참가하는 한반도평화포럼 개최 추진
- 포괄적 접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병행해 '9.19공동성명'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재천명
 -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추진
 - 대화와 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비확산 합의이행을 유도

기대효과

- 남북정상간 핫라인이 설치되면 서해에서의 무력충돌 방지와 전쟁위협 방지, 위기 관리에 큰 진전을 이룰 것임
- 남북장관급회담이 정부 간 대화와 협상의 기본 틀로 회복되고 정례화되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고위급회담,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
-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복원함으로써 새로운 한반도 평화공존의 틀을 확립해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과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대화 환경 조성
- 6자회담의 재개 및 추진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 관계 형성을 이룩
- 북측으로 하여금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여 6자회담의 추동력을 재확보
-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및 핵관련 기술·장비의 제3국 수출을 방지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 조성
-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에 기여



서해 평화정착과 남북한 신뢰구축 제도화

현실진단

-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 획정과 달리 해상군사분계선의 획정에 실패하면서 분쟁의 씨앗을 배태
-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주장하는 북측과 이를 사수하려는 남측간에 1999년 이래 군사적 충돌이 지속
- 남북 간에 조그만 무력충돌이 국지전, 나아가 전면적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있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가 필요
- 정전체제하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은 무력충돌이나 사소한 정치적 오해가 발생하기만 해도 중단되는 사태가 되풀이
- 정례적인 기존 대화채널로서 남북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적십자회담 등이 있으나 우발적 분쟁과 돌발사태를 협의하기에는 부적절

실천과제

- 서해 평화의 조기정착
 -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의 군사직통전화 설치

- 사문화된 2004년 남북장성군회담에서의 '6.4합의' 복원(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위한 함정간 신호체계 정립 등)
- 해상경계선으로서 NLL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협의해 나가되, 단기적으로 남북 동시조업보다는 입어로 제공을 통한 단독조업 또는 교차조업 추진
- 남북분쟁해결기구 설치
 -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관장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의 정례화와 남북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장성급회담 및 남북장관회담 개최
 -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과 관련 부처가 협조하는 (가칭) '남북분쟁해결위원회'를 쌍방의 합의 아래 설치

기대효과

- 서해해상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마련
- 성어기(6월, 9~10월) 서해 황금어장에서 우리 어민의 이익 보호
-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위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시 확산 방지 및 조기 원상회복
- 남북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키며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넘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반 문제의 해결에 기여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 구축



현실진단

- 통일은 하나의 사건이나 결과가 아니라 상호 신뢰 형성, 호혜적 협력사업을 통해 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각 분야별 통합을 심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
- 화해협력 단계에서의 불신 해소와 신뢰 구축에 기반해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나갈 필요
-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 화해협력, 평화번영의 대북정책을 통해 과정으로서의 통일 진전
 - 이명박 정부는 주관적인 북한붕괴론에 입각함으로써 통일 과정의 진전에 역행

실천과제

-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이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 발전, 제도화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
 - 정치 : 남북총리급회담을 총괄 회담기구로 하고 분야별 장관급회담을 정례화, 제도화
 - 군사 :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정례화해 군사적 신뢰구축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발전
 - 경제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정례화, 상설화
 - 사회문화 : ‘남북사회문화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제도화
- ‘통일고문회의’를 ‘통일미래기획위원회’로 재편
 - 국민들의 다양한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기대효과

- 한반도 평화정착
 -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과 선순환 구도하에서 추진하므로 평화체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북간 협력을 도모
- 통일의 기틀 마련
 - 남북 화해 협력의 진전을 통해 평화적, 점진적인 방식으로 최종 통일을 대비



인도주의, 인권문제의 실질 해결

현실진단

- 남북간 인도적 문제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그리고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말함
- 남북간 인도적 문제는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
- 1988년 이후 적십자에 '이산가족 신청'을 한 12만 8747명(올해 8월말 기준) 중 41%인 5만 2744명이 이미 사망
-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데에는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
- 남한에서도 대북관, 통일관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큼
- 지속적인 탈북, 강제송환, 2만 4천여명의 국내 입국 탈북자의 정착 곤란, 입국 후 제 3국행 등 탈북자 문제의 다변화
- 국내 입국 정착제도에서 효율성 문제가 발생

실천과제

- 인도적 문제 해결에 최우선 주력
 - 인도적 문제를 정치군사적 차원의 남북관계와 분리해 최우선 해결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상시화
 -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적극적 해결
 - 필요시 물질적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추진
-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노력
 - 종합적 북한인권 개선 계획 수립
 -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과 보건의료 협력 우선 추진
-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 정착을 맞춤형으로 실시
 - 강제송환 금지, 자유의사 존중 원칙에 따라 재외탈북자들의 인권 보호 및 국내 입국을 추진
 - 탈북자들의 조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 증대
 - 입국자의 2/3가 여성, 아동임을 감안해 맞춤형 치유와 맞춤형 정착 지원정책 확대

기대효과

- 인도주의, 인권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으로 민족화해와 민족동질성 회복
 - 남북간 신뢰 회복 증진
 - 한국의 국격 제고
- 북한인권의 실질 개선으로 북한주민의 자유권 사회권 증진에 기여
- 재외 탈북자 보호의 실효성 증대와 탈북자 정착 내실화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제도화와 초당적 협력

현실진단

- 남북 갈등과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대북정책의 지속성 결여
 - 대북정책이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대립의 중심
 - 정권 교체로 대북정책이 단절되고 역진하는 우여곡절 지속
 - 초당파적 협력이 필요한 대북정책이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발전법이 사문화

실천과제

- 남북 당국간 중요 합의에 대한 국회 차원의 동의 추진
 - 대북정책에 관한 국회의 역할을 최대한 존중
- 대북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국민협약' 체결 노력
 - 보수와 진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가이드라인 마련
- 남북관계발전법의 실질 이행
 - 정부출범과 함께 남북관계발전 5개년계획 수립

기대효과

-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로 정책 추진력과 정책 효과성 담보
 - 보수와 진보가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대북정책 공감대를 마련하고 소모적인 이념 갈등을 최소화
 - 여야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대북정책가이드라인 합의 가능
-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의 추진력과 실질적 효과 제고
 - 여야 합의로 만든 남북관계발전법의 정상적 이행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방경제 시대 개막

현실진단

-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한국 경제는 내부적으로 돌파구를 찾는데 한계
- 지난 20여년간 남북경협은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질적 개선의 필요성 증대
-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접경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
-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중단
- 한국은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의 자원·에너지 개발과 도입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사실상 협력은 초보단계
- 최근 세계 곡물시세의 급등과 주요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조치는 주기적인 글로벌 식량위기를 초래

실천과제

-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 중소기업 활로 모색
 - 북방경제의 블루오션과 중소기업 육성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미래 지향적 성장 잠재력 확보
 -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 프로젝트 추진 : 중소기업의 북방시장 진출을 통해 한국 경제 1% 추가 성장, 1만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 9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 개성공단 확대, 중소기업 전용 임가공 단지 조성, 나선 특구 및 황금평 개발에 적극 참여 등
- 남북경제협력 제도화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남북 합의 사항은 철저히 이행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경험 제도화 마련
 - 남북경협 제도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정례화와 제도화 추진
- 환황해·환동해 경제권 형성과 접경지역 성장동력 확보
 - 인천~해주~개성을 잇는 삼각경제협력지대를 축으로 중국의 다롄에서 상하이까지, 한반도의 신의주에서 인천~평택~군산~목포에 이르는 환황해 경제권 형성
 - 한반도의 동해안과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일본을 연결하는 환동해 경제권 형성
 - 서해에서 동해까지의 남북 접경지역의 균형적 개발
- 대륙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이 결합하는 복합물류망 구축
 - 유라시아대륙철도(TSR, TCR, TMGR, TMR)와 연결되는 북한철도 구간의 단계적 현대화 및 국제물류사업 착수
 - 대륙철도 연결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남북한과 북방국가(중국, 러시아, 몽골)들이 참여하는 '북방철도운영자회의' 구성
- 북방 자원·에너지 실�크로드 건설
 -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 통과와 안정성을 확보해 남북러 가스관 연결(PNG) 사업 추진
 - 한러 에너지협력의 토대 강화 및 러시아의 추가적인 에너지자원 개발 참여 기회 확보
- 남북 농업 살리는 북방농업 협력 추진
 - 개발협력 중심의 남북농업 협력 추진

기대효과

- 북방경제 시대가 열리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이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탄탄한 경제구조가 구축
- 남북경협 제도화가 구축되면 지속적인 경험 활성화가 가능
- 북방경제를 통해 서해안과 동해안,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
- 사실상의 '섬'과 같은 지정학적 고립 상태 탈피
-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원 확보
- 대외의존적 식량 수급구조의 완화, 장기적·안정적인 식량공급처의 확보, 국내 농업의 비교열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농업생산기지 확보

세계로 뻗어가는 평화외교

3대 목표

- 1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하는 조화외교 추진
- 2 외교공간을 확대하는 전략외교 구현
- 3 지구촌문제 해결의 선도외교 실천

7개 정책약속

- 1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 기초위에 한중 파트너십 심화
- 2 한중일 협력의 확대 및 한일 파트너십의 회복
- 3 러시아,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심화를 통한 전략적 외교 공간의 확대
- 4 국제기구·중견국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글로벌 외교 역량 강화
- 5 국내경제와 선순환 하는 호혜적 대외경제정책 추진
- 6 중소기업 및 서민 살리기와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통상
- 7 선진외교 인프라 구축



한미동맹과 한중 파트너십의 조화

현실진단

-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2013년을 기해 한미동맹 평가 및 미래비전을 발전시킬 필요 상존
- 한미동맹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양국이 직면한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동시 대응해야하는 과제 상존
- 한중관계는 2003년 체결한 '전면적협력동반자' 관계에서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정치적 신뢰도는 크게 저하
- 현안으로 탈북자문제, 역사논쟁, 어업분쟁, 이에도문제 등 많은 갈등사항이 존재

실천과제

-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에 초석이 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21세기 국제정치 발전에 합당한 포괄적 동맹관계를 구체화하는 외교 추진
 - 미국과의 정기적인 통합적 전략 대화를 제도화하고 상호 전략적인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강화해나감
 - 포괄적인 한미동맹은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함

- 포괄적인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한반도, 아태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비전 및 발전방향 검토
-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외교 추진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여 한중 분쟁억제 및 관리, 북한 위협억제, 지역평화 및 탈지역적 차원의 협력추진
 - 외교, 안보, 통상 고위급 대화를 통합하는 정기적인 전략·안보·경제대화를 추진하고 최고위급 수준에서 전략 핫라인을 구축해 위기관리체제를 수립
 - 양국 시민사회간의 다차원적인 네트워크 외교를 강화
-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상호배타적으로 간주하거나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 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발상은 지양해야함
 - 미국과 중국은 다 같이 북한의 개혁개방, 한반도 긴장완화, 비핵화를 지지. 이는 한미중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임
- 한미 및 한중과 긴밀한 전략대화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음

기대효과

- 향후 한미간 전략적 신뢰강화, 상호협력증진 및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
- 한미 포괄적 동맹의 발전은 한미간 전략적 신뢰강화, 상호 협력 증진 및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임
- 한중간 전략적 소통과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의 경험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 역내 평화 안정을 수립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로 심화해 나갈 것임
- 유능한 외교는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건설적인 미중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임
- 미중과 협력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돕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며, 비핵화를 추진하여, 남북한을 포함한 모두의 안정, 발전, 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한중일 협력의 확대 및 한일 파트너십의 회복

현실진단

- 동북아시아 지역 내 안보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역사 및 영토분쟁이 분출되고 있으나, 한국은 그 해결의 주체가 아닌 갈등의 당사자로 남아있음
- 최근 5년 한국의 외교는 동북아시아 지역 외교의 실종, 통합적 지역 전략의 부재를 드러내었음. 대북정책의 실패, 6자회담의 지체, 그리고 한미일 공조에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
- 한중일 3국간에는 경제침체와 정권교체 시점이 맞물려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고, 특히 한일 간 분쟁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음
- 현재의 한일 갈등은 단기적인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 1965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형성된 냉전기 안보 경제 논리 우선의 한일협력체제의 해체 과정임

실천과제

- 한중일의 융합적인 경제통합추진 및 협력의 새로운 지평 개척
 - 2013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3국간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공동의 실천방향을 담은 3국 정상간 공동성명을 이끌어 냄

- 친선 우호의 확인에 그쳤던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제를 안보와 경제, 역사 및 영토 문제로 격상시키고, 한중일 협력 사무국을 확대 개편함
- 미래를 함께하는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수립
 - 한일관계는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에 공헌하는 파트너십을 실현하도록 유도
 - 독도와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공동의 인식제고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마련
 - 한일 정상간 서툼외교와 각료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한일포럼, 한일협력위원회, 한일문화교류기금 등의 세대교체를 지원하는 등 다변화된 교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일협력 모델 구축

기대효과

-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 및 영토 문제 등 역내 갈등해소 노력은 대북 포괄적 접근 및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환경조성과 연계됨
- 안보적 긴장완화와 경제적 상호의존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지역통합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역내질서 안정의 제도화에 기여
- 새로운 한일협력이 중국에 대한 견제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아닌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공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중일 협력 및 북일 관계의 진전을 동시추진
-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와 한일 관계, 그리고 북일 국교정상화간의 동시적인 발전과 선순환도 가능



러시아,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심화를 통한 전략적 외교 공간의 확대

현실진단

- 현 단계 한러 관계를 정의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실질적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외교적 수사'에 그치고 있음
- 경제규모나 발전 잠재력에 비해 현재의 한러 양국간 교역·투자 규모가 너무 작으며, 아직까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에 기초한 포괄적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러시아는 세계경제의 축이 아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동아시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과는 대륙철도연결, 남-북-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PNG) 연결 등 대규모 국가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 북핵위기 등으로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
-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FTA 체결(2006년), '한-아세안 센터' 설립(2009년),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설정(2010년) 등 관계를 꾸준히 진전시켜 오고 있음. 그러나 아세안에 대한 상대적 경시현상이 존재하고, 실제 대동남아 지역전략이 부재한 상황임
-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교역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며, 최근 한국과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체결 이후 중요한 교역투자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한국인들의 인식과 외교지평에서 인도는 여전히 먼 나라로 남아 있음

- 세계 15위의 국력을 가진 한국은 이제 미중일에만 한정하는 수동적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의 공간적 지평을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해야 함

실천과제

-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북방경제의 디딤돌을 놓겠음
 - 러시아를 대북한 외교의 보완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기존 행태에서 탈피해,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목표와 미래 비전을 공유한 행위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 요구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아시아판 모델, 동북아 안보협력기구의 구축(창설) 등 다양한 안보정책 아이디어의 현실화
 - 북핵 및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중재자적 역할 적극 활용
 - 러시아의 유로-퍼시픽 국가발전전략에 부응하는 한러 경제협력 발전전략 수립
 - 한러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과 투자 통상관계의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작성과 이행
-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하는 외교 추진
 - 대아세안 외교를 '한반도 주변4국 외교'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실천방안 강구
 - 아세안 경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정부-학계의 통합 기구를 설치하고, 동남아 지역경제통합 사업과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
 - 아세안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진행 및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실시
 - 비동맹을 선도해온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해 한국의 외교지평을 확대하는데 적극 활용
 -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인도 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을 도모하며, 나아가 서남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기대효과



- 북핵위기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긍정적 역할 유도 및 대러 외교의 강화에 따른 한국외교의 자율적 공간 확장
- 철도연결, 가스·전력망 구축 등 그랜드 프로젝트(Grand Project)의 실현으로 동북아 역내 다자경제협력의 시범 모델 및 맹아적 형태 제시
- 공동번영의 '북방경제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한러 상호신뢰의 토대 구축. 한국기업의 극동·시베리아 진출 가속화 및 한러 전략적 투자협력 관계의 발전
- 아세안,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로 한국외교의 공간적 지평이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확대
- 중견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동아시아 통합을 주도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외교목표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넘어 동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차원으로 확장

07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국제기구·중견국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외교 역량 강화

현실진단

- 글로벌 차원에서는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전 지구적 이슈들이 등장해 그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글로벌 영역에서는 국력은 그리 크지 않아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큼. 한국도 기후변화협력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모색해왔으며 개도국에 대한 ODA제공 등 기여외교 그리고 PKO주둔관련 평화유지외교를 적극 추진해 왔음
- 한국은 아직도 세계 15위 경제대국에 걸 맞는 국제기구의 참여와 국제사회에의 기여도가 낮음. 이는 한국의 국격 제고와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음. 이러한 상태는 한국의 국제정치에서의 신뢰도나 발언권을 약화시키고 있음
- 세계적으로 미중간의 세력전이 진행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중일간에 세력전이 진행되고 있음
- 우리의 외교와 운명이 강대국들간의 경쟁과 갈등의 피동적인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게 하기위해 ‘중견국가외교’의 비전과 전략을 적극 개발해야 함
- 세계의 중견국가들은 현재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체제에서 중견국가들의 이익을 지켜내고, 강대국 관계에서 안정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구촌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더 큰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하고 있음

실천과제

- 능동적인 국제기구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지구촌 문제들의 해결에 선도적으로 기여
 -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한국인 출신들의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을 활용, 적극적인 국제기구 외교를 추진
 - 한류, 기업브랜드, 경제발전경험, IT와 정보화, 스포츠 등 공공외교 수단을 개발해 국가별로 다양한 공공외교의 수단을 개발, 국가별로 다양한 맞춤형 공공외교의 체계를 수립
- 중견국가들과 네트워크 외교를 강화해 대국중심 외교를 보완하고 한국외교의 지평을 확장
 - 한국 스스로 중견국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분명히 정립해야 함. 미중일러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공통분모를 이끌어내고, 지역안정과 협력의 공간을 창출해 내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야 함
 - 우리의 지리적 시야를 남북관계와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말고 동아시아 및 세계를 향한 새로운 외교의 축들로 재구성해야 함
 - (가칭)‘아태지역 중견국 협의회’의 추진을 주도

기대효과

- 글로벌 이슈분야에서의 협력을 주도해 국격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 훗날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 가는데 있어서 국제적 자산으로 작용할 것임
- 중견국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은 미중에 대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도 주도적 역할 수행능력을 강화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중견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동아시아 통합을 주도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국내경제와 순환하는 호혜적 대외경제정책 추진

현실진단

- 한국은 자원빈국으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에 자원공급을 의존해야 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안고 있으나 동일본대지진 이후 청정에너지로 인식돼 온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청정 대체 에너지 개발은 기후온난화 대비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책과 긴밀히 연계해 자원부국 및 기술선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임
- 고용 없는 성장의 결과 빈약한 고용창출 및 고용의 질 저하 및 심각한 청년실업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저출산 고령화는 내수시장 축소를 초래하는 바, 세계에서 유례없이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대비해 내수시장의 외연확대가 불가피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전통적인 수출시장이었던 선진국 시장의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어 신흥국으로의 수출시장 다각화를 포함해 이들과의 전면적인 경제협력 강화가 시급함

실천과제

-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환경, 에너지, 자원협력 가속화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의 국제기구 유치를 발판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 환경협력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를 환경 비즈니스 기회 발굴과 긴밀히 연계
- 러시아, 인도네시아, 몽골 등 역내 자원부국과 에너지 개발에서 지역개발 인프라 및 에너지 유통시스템 구축까지 연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하며 이때 우리의 강점인 기술력 및 가격 경쟁력, 중견국으로서 소프트 파워를 적극 활용함
- 독일,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기술 강국과의 기술제휴와 국내투자 촉진 혹은 중국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큰 잠재적 시장에서의 공동 진출을 통해 관련 기술 및 시장 확보에 주력
- 청년실업해소 및 저출산 고령화와 선진국 보호주의에 대비한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
 - 큰 인구와 시장을 보유한 세계 신흥국에 대해 협력 전략 및 그에 기반한 지역별 맞춤형 협력 전략을 수립
 - 신흥국들과 상호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호혜주의적 협력을 추진. 우리의 개발경험, 제조업 강국, IT 강국, 한류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ODA, EDCF 등의 자금을 동원하고 중견국 외교와 융합시켜 신흥국의 산업화와 지역개발에 기여
 - 현안과제인 국내의 실업해소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흥지역과의 협력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양성에 노력함. 즉 초등교육과정부터 세계사와 지리 교육을 강화해 '꿈나무 지역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고, 외국어고등학교에 영어 이외의 외국어 및 외국 교육을 강화해 '주니어 지역전문가'를 육성

기대효과

- 자원빈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외기반 마련
- 아직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이 미약한 우리로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이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는 현 상황에서 관련 국제협력을 통해 혁신경제 구축을 촉진
- 국내의 실업해소 특히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내수시장 축소를 보완함
- 선진국의 보호주의에 대응해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신흥지역과의 협력 강화로 수출시장 다변화와 중견국가로서의 외교무대 확장



중소기업 및 서민 살리기와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통상

현실진단

- 현재 FTA는 국내경제와 선순환하지 못하며, 대다수 국민들은 그 실익을 체감하지 못함
- 이에 향후 FTA 정책은 기체결 FTA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토대로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를 살리고 대내외적 공존을 추구

실천과제

- 현 FTA 정책의 공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FTA 선순환지수' 개발로 국내경제와 선순환하는 FTA정책 수립
 - 국내경제와의 선순환 추구: 'FTA 선순환지수' 개발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FTA가 국내 생산·고용 창출 및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FTA의 소비자후생 확대를 위해 노력
 - 한미 FTA는 이미 발효된 상황에서 'FTA 선순환지수'를 통해 실익은 확산시키는 한편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등에서 문제 발생시 한미 FTA 협정문에 근거해 국제규범에 부합되게 '개정'에 노력

기대효과

- 새로운 FTA 정책으로의 제도 수정으로 변화된 대내외 환경과 여건에 부합하는 FTA 정책 추진
- 'FTA 선순환지수'를 통해 자칫 국민이 무관심하기 쉬운 FTA의 실익을 국민이 체감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도록 추진



선진외교 인프라 구축

현실진단

- 국내 민·관·기업들의 정보 및 경험 공유, 상호 소통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걸맞게 외교업무의 개선이 필요함
- 한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해서 유지되는 경제임. 또한 북한과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를 외교로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외교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 글로벌 통상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전 세계 중요지역에 대한 전문가 육성이 시급함

실천과제

-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유기적이고 융합적으로 민·관·기업 간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외교역량의 창조적인 선순환구조 확보
 - 시민사회와의 체계적이고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국민들을 향해 더 다가가고 역으로 국민들의 제언을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게 하며 전 세계 시민들을 상대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공공외교를 강화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역할이 될 수 있게 함

-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외교조직과 인력의 구성 및 역량을 구축
 - 남미, 중동, 인도, 아프리카 등 그간 소홀히 해 온 지역전문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제적 노력에 합당한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도록 노력함
 - 외교를 다루는 기존 접근 방식을 정보화 추세에 맞게 디지털화 하며, 행정적, 행사위주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정책적, 전략적 내용 위주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함. 이에 부응하는 업무체계의 변화를 모색해 21세기 선진외교를 지향할 것임

기대효과

- 민·관·기업간의 정보 및 경험 공유, 상호 소통과 협력으로 외교역량의 시너지 효과 기대
- 세계화의 시대에 필요한 인력 및 외교 역량 확보
- 한민족 네트워크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과 지지를 동원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 정보화, 세계화에 맞는 새로운 업무방식을 추구함.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외교 조직과 인력의 업무능력을 갖추게 함

